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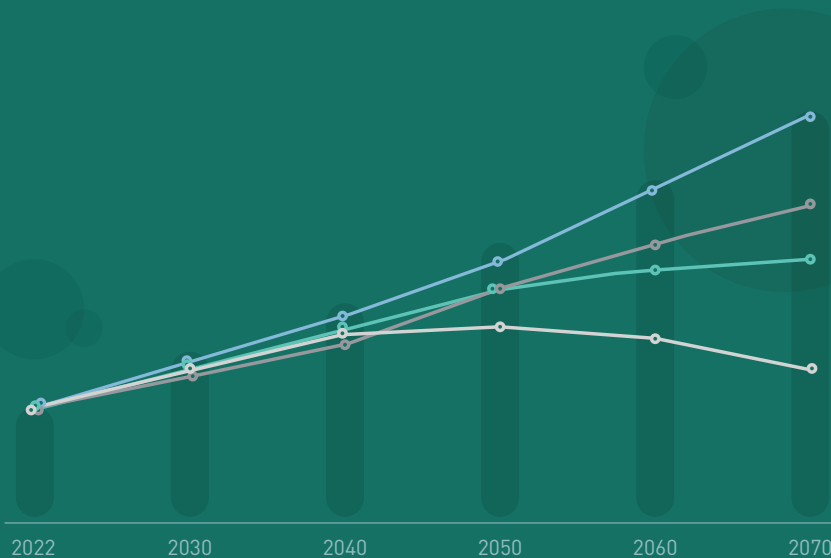


2022.8.

국회에산정책처 | 재정전망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NABO Long-Term Fiscal Projections 2022~207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NABO Long-Term Fiscal Projections 2022~2070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총괄 |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임준기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추계 | 윤주철 (작성 총괄)
박정환 (국세수입 작성 총괄)
윤주철 신헌태 문지은 김호진
김우림 임슬기 이윤경 박선아
이미연 여은구 김효경 박지원
문석휘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경제전망 | 황종률 오현희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 박은주 행정실무원
유다은 자료분석지원요원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경제적·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총량을 전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 관련 법률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 - 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22. 7.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의 초저출생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여야 할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잠재성장률 둔화,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에 대한 구조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년도 예산 또는 중기계획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가재정의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정책이 중기 시계를 넘어 서도 지속가능한지를 분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경제전망을 기초로 2022년부터 2070년까지의 재정총량을 전망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점검 하였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의 전망치들은 수십 년에 이르는 전망기간 동안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에 대한 예측치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장기 재정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현행 제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전망치들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인구 및 거시경제 가정이 달라지거나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예산안과 국가재정 관련 법률안 심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재정 운용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일러두기

1. 재정전망 금액과 GDP 규모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2022년 불변가격** (GDP디플레이터 적용)을 의미
2.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서 차이 발생 가능
3. 본 보고서의 ‘전망’은 ‘추계(Projection)’와 동일한 의미이며, 예측(Forecasting, Prediction)이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차 례

요 약 / xiii

I.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 1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1
2.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2
가. 주요 전제 및 특징	2
나. 주요 전망방법	5
(1) 총수입	5
(2) 총지출	5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6

II.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 7

1. 인구변수	7
가. 추계 방법 및 주요 가정	7
나. 인구추계 결과	10
2. 거시경제변수	19

III.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 29

1. 개요	29
2.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34
가. 시나리오1	34
(1) 재정총량	34
(2) 총수입	36
(3) 총지출	43
(4) 재정수지	57
(5) 국가채무	64

나. 시나리오2	67
다. 시나리오3	68
라. 시나리오4	69
3.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	72

IV.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 79

1. 개요	79
2.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83
가. 저위 가정	83
나. 고위 가정	86

V. 요약 및 결론 / 89

[부록] 항목별 전망방법 / 91

표 차례

[표 1]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4
[표 2] 합계출산율 전망	8
[표 3] 기대수명 전망	9
[표 4] 국제순이동 전망	10
[표 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	10
[표 6] 연령계층별 인구 전망	13
[표 7]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전망	16
[표 8]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인구 중위 기준)	20
[표 9]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인구 저위 기준)	21
[표 10]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인구 고위 기준)	21
[표 11]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30
[표 12]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인구 중위 기준)	32
[표 13]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및 국가채무 전망 비교(인구 중위 기준)	33
[표 1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1)	35
[표 15]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수입	36
[표 16]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수입	38
[표 17]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외수입	42
[표 18]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시나리오1)	44
[표 19]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시나리오1)	47
[표 20] NABO 장기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50
[표 21]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기타항목(시나리오1)	56
[표 22]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시나리오1)	56
[표 23] 재량지출 전망 방법(시나리오1)	57
[표 2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시나리오1)	58
[표 25]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	60

[표 26] NABO 장기 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61
[표 27]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62
[표 28] NABO 장기 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63
[표 29] NABO 장기 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63
[표 30] NABO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시나리오1)	64
[표 31] 국가채무 주요 가정	65
[표 32]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2)	67
[표 33]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3)	68
[표 3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4)	69
[표 35]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73
[표 36] 사학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74
[표 37]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인구 중위 기준)	76
[표 38] 인구추계 가정별 주요 인구 전망	80
[표 39]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82
[표 40] 인구추계 저위·중위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비교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84
[표 41] 인구추계 저위 기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85
[표 42] 인구추계 고위·중위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비교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86
[표 43] 인구추계 고위 기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87

그림 차례

[그림 1] 최근 재정총량의 변화: 2018~2022년	3
[그림 2] NABO 장기 재정전망 흐름도	6
[그림 3]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8
[그림 4] 총인구·인구성장률 추이 및 전망	11
[그림 5]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중위 기준)	12
[그림 6]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저위·중위·고위)	14
[그림 7]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중위 기준)	15
[그림 8] 인구 피라미드 비교: 2020년 vs. 2070년	16
[그림 9] 물가안정목표 변화 추이	24
[그림 10]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27
[그림 11]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전망 비교(인구 중위 기준)	32
[그림 12]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인구 중위 기준)	34
[그림 13]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수입 비율	37
[그림 14]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항목별 비율	39
[그림 15]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지출 비율(시나리오1)	45
[그림 16]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시나리오1)	45
[그림 17] 의무지출 구성항목별 비중 변화	47
[그림 18]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시나리오1)	57
[그림 19]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시나리오1)	59
[그림 20]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전망(시나리오1)	65
[그림 21]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73
[그림 22] 사학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75
[그림 23] 인구추계 가정별 주요 거시경제변수 비교	81
[그림 24] 인구추계 가정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83

요 약

I.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 최근 인구 및 경제,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추어 장기 재정전망 실시
 -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 재정전망 실시
 -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NABO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
 - 장기 재정전망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국가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미래의 재정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이 취지
 - 다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는 전망기간 동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

2.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가. 주요 전제 및 특징

- 기준 시점(2022년 5월 말)의 정책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2070년까지 전망
 - 기준 시점까지 제·개정된 주요 법령의 제도변화를 반영하며, 기준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
 - 인구변수의 경우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 발표)에 근거

하며, 거시경제변수는 동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NABO의 장기 경제전망 (2022년 5월 말 기준)에 근거

- 2021회계연도의 총수입·총지출 실적치를 반영하며,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 반영

□ 전망기간 동안 전망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

-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인구추계 가정(저위, 중위, 고위)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모든 전망항목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망하나, 전망기간이 장기이므로 재정총량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전망 결과는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불변가격(2022년 기준)으로 제시

-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효과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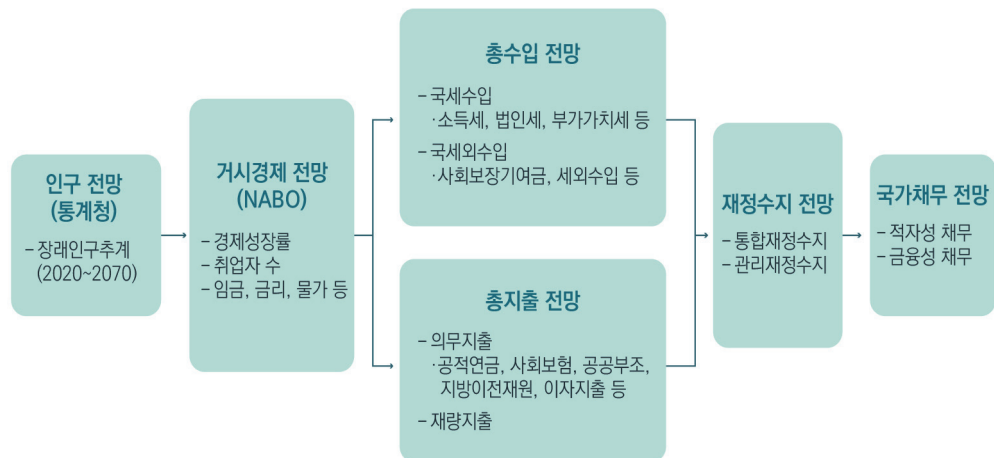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기준시점	○ 2022년 5월 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전망기간	○ 2022~2070년(49년)
주요변수	○ 인구변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 ○ 경제변수: NABO 장기 경제전망(2022.5.)
시나리오	○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인구추계 저위·중위·고위 시나리오 분석
금액기준	○ 2022년 불변가격

나. 주요 전망 방법

-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을 기초로 재정총량의 구성항목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총수입과 총지출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산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고, 항목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

[NABO 장기 재정전망 흐름도]



II.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1. 인구변수

- 통계청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근거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저위·중위·고위로 구분하여 추계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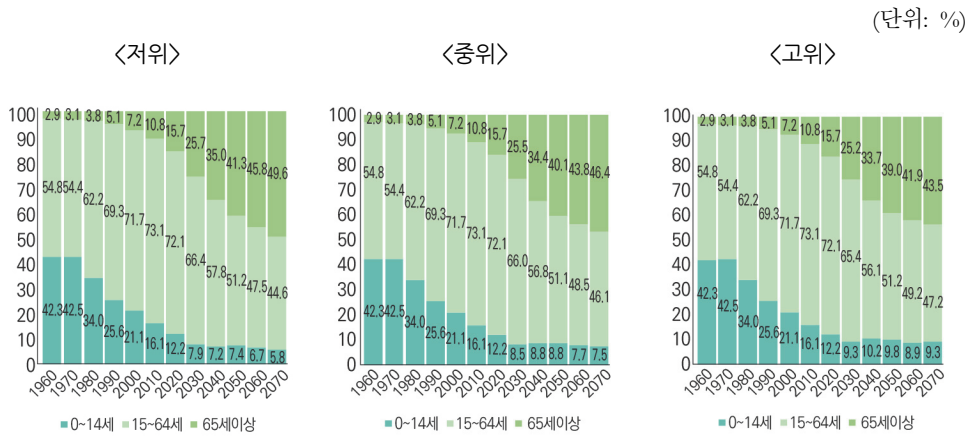
	2020	2022			2070			
		저위	중위	고위	저위	중위	고위	
총인구(만명)	5,184	5,158	5,163	5,168	3,153	3,766	4,438	
합계출산율(명)	0.84	0.73	0.77	0.85	1.02	1.21	1.40	
기대 수명 (세)	전체	83.5	83.7	84.1	84.4	89.8	91.2	92.3
	남자	80.5	80.8	81.2	81.4	88.3	89.5	90.5
	여자	86.5	86.7	87.0	87.4	91.3	92.8	94.1
국제순이동(만명)	-5.8	-5.5	0.8	7.1	-1.1	4.0	9.6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구추계 중위에 따른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0년에 3,766만명으로 추계
 - (고위) 총인구는 2039년 5,29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70년 4,438만명으로 감소
 - (저위)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수준에서 2070년 3,153만명까지 감소
- 인구추계 중위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명(총인구 대비 72.1%)에서 2030년 3,381만명(66.0%), 2070년 1,737만명(46.1%)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15만명(15.7%)에서 2030년 1,306만명(25.5%), 2070년 1,747만명(46.4%)으로 증가 전망

- (고위)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31만명(총인구 대비 65.4%), 2070년 2,095만명(47.2%)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2030년 1,324만명(25.2%), 2070년 1,931만명(43.5%)으로 증가
- (저위)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32만명(총인구 대비 66.4%), 2070년 1,408만명(44.6%)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2030년 1,287만명(25.7%), 2070년 1,563만명(49.6%)으로 증가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0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거시경제변수

- 장기 재정전망의 근거가 되는 거시경제변수는 2022년 5월 말 기준 NABO의 장기 경제전망(2022~2070년) 활용
- 인구추계 중위 기준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 결과
 -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30년에 1.8%, 그 이후 2070년에는 0.6%로 하락하여 2022~2070년간 평균 1.2% 전망
 - 명목GDP 성장률은 2022년 4.8%에서 2030년 3.5%, 2040년 2.8%까지 낮아지지만, 2040년 이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6%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체

함에 따라 2070년까지 실질GDP 성장률의 완만한 하락 추세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기적으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나, 2022년 정점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40년 이후 1.8%를 유지하여 2022~2070년간 평균 1.9% 전망
- 명목임금상승률은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2022년에 4.8%까지 상승하나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3%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2050년 이후에는 생산인구 감소 효과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으로 2022~2070년간 평균 3.5% 전망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2년 3.0%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2040년 이후 1.8~1.9%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2022~2070년간 평균 1.9% 전망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인구 중위 기준)]

(단위: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평균
실질GDP성장률	2.6	1.8	1.2	0.9	0.7	0.6	1.2
명목GDP성장률	4.8	3.5	2.8	2.5	2.3	2.2	2.8
소비자물가상승률	4.0	1.9	1.8	1.8	1.8	1.8	1.9
명목임금상승률	4.8	3.5	3.4	3.2	3.6	3.7	3.5
국고채금리(3년 만기)	3.0	2.0	1.8	1.8	1.8	1.9	1.9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2	1.7	1.6	1.6	1.6	1.6	1.6

주: 평균은 전망기간(2022~2070년) 동안 각 변수의 단순평균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1. 개요

-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시나리오 분석 실시
 - (시나리오1) 장기적으로 GDP 대비 재량지출의 비율이 장기 수렴 수준(12.8%, 2012~2022년 평균)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으로 하고, 2023~2025년은 중기계획(「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9.)의 2023~2025년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중기계획을 반영한 후에는 5년 기간 동안 장기 수렴 수준에 이르도록 서서히 조정되고, 2030년 이후는 장기 수렴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2)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시나리오1보다 낮추는 방안(12.8% → 11.7%)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량지출 수준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비율로 적용(11.7%)
 - (시나리오3)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2026년부터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의 중기계획 반영 후 2026년부터는 2025년 재량지출의 실질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4)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2026년부터 총지출을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도록 통제하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재량지출로 가정
 - 의무지출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총지출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재량지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의미(2020년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방식)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나리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349.4조원)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23년 323.0조원, '24년 336.2조원, '25년 348.4조원) ○ 2026~2030년: 장기 수렴 수준*으로 서서히 조정 *장기 수렴 수준은 재량지출의 2012~2022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 ○ 2031년~: 장기 수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명목GDP 성장률로 증가)
시나리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6~2030년: 장기 수렴 수준*으로 서서히 조정 *장기 수렴 수준은 재량지출의 2012~2019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11.7%)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량지출 수준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비율만을 반영 ○ 2031년~: 장기 수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명목GDP 성장률로 증가)
시나리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6년~: 2025년 수준의 실질 규모 유지(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
시나리오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6년~: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차감

주: 시나리오4는 정부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방식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인구 중위 기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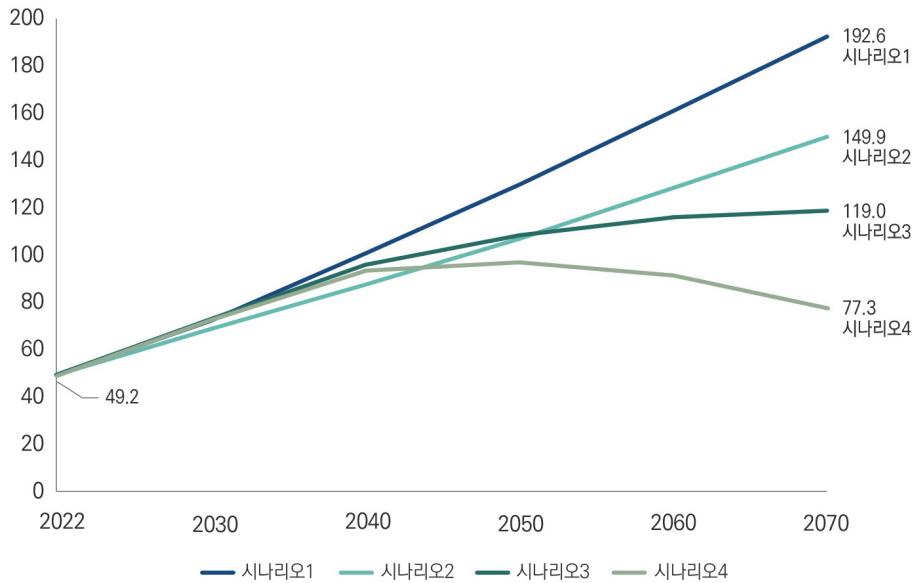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시나리오1	349.4	326.6	373.4	414.7	446.8	473.9
(GDP 대비 비율)	(16.1)	(12.8)	(12.8)	(12.8)	(12.8)	(12.8)
시나리오2	349.4	299.8	342.7	380.6	410.0	434.9
(GDP 대비 비율)	(16.1)	(11.7)	(11.7)	(11.7)	(11.7)	(11.7)
시나리오3	349.4	333.1	339.7	346.5	353.4	360.4
(GDP 대비 비율)	(16.1)	(13.0)	(11.6)	(10.7)	(10.1)	(9.7)
시나리오4	349.4	332.9	324.9	309.7	300.1	301.7
(GDP 대비 비율)	(16.1)	(13.0)	(11.1)	(9.6)	(8.6)	(8.1)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인구 중위 기준)

가. 시나리오1

- 총수입은 2022년 603.9조원(GDP 대비 27.8%)에서 2070년 883.1조원(GDP 대비 23.8%)으로 연평균 0.8% 증가 전망
 - 국세수입은 2022년 391.2조원(GDP 대비 18.0%)에서 2070년 587.9조원(GDP 대비 15.9%)으로 연평균 0.9% 증가 전망
 - 국세수입 비율의 완만한 하락세는 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임금근로자 수와 취업자 수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 따른 소득세 증가율 둔화, 유류 등 소비량 증가세 둔화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증가율 둔화 등에 기인
 - 국세외수입은 2022년 212.7조원(GDP 대비 9.8%)에서 2070년 295.3조원(GDP 대비 8.0%)으로 연평균 0.7% 증가 전망
 - 국세외수입 비율의 하락세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에 기인

- 총지출은 2022년 689.9조원(GDP 대비 31.8%)에서 2070년 1,341.9조원(GDP 대비 36.2%)으로 연평균 1.4% 증가 전망
 -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0.8%)보다 0.6%p 높으며, 전망기간 동안 실질GDP 성장률의 평균(1.2%)보다 0.2%p 높은 수준
 - 의무지출은 2022년 340.5조원(GDP 대비 15.7%)에서 2070년 868.0조원(GDP 대비 23.4%)으로 연평균 2.0% 증가 전망
 - 전체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비중은 수급 대상자 수 및 지원금 확대 등으로 2022년 41.6%에서 2070년 56.3%로 14.7%p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재량지출은 2022년 349.4조원(GDP 대비 16.1%)에서 2070년 473.9조원(GDP 대비 12.8%)으로 연평균 0.6% 증가 전망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603.9	688.8	775.3	805.6	831.0	883.1	0.8	2.4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8)	(23.8)	(23.8)		
- 국세수입	391.2	421.0	477.1	523.1	555.7	587.9	0.9	2.5
(GDP 대비 비율)	(18.0)	(16.5)	(16.3)	(16.1)	(15.9)	(15.9)		
- 국세외수입	212.7	267.8	298.2	282.5	275.3	295.3	0.7	2.3
(GDP 대비 비율)	(9.8)	(10.5)	(10.2)	(8.7)	(7.9)	(8.0)		
총지출	689.9	739.6	905.8	1,073.0	1,215.8	1,341.9	1.4	3.1
(GDP 대비 비율)	(31.8)	(29.0)	(31.0)	(33.1)	(34.8)	(36.2)		
- 의무지출	340.5	413.0	532.4	658.3	769.1	868.0	2.0	3.6
(총지출 대비 비중)	(49.4)	(55.8)	(58.8)	(61.4)	(63.3)	(64.7)		
(GDP 대비 비율)	(15.7)	(16.2)	(18.2)	(20.3)	(22.0)	(23.4)		
- 재량지출	349.4	326.6	373.4	414.7	446.8	473.9	0.6	2.3
(총지출 대비 비중)	(50.6)	(44.2)	(41.2)	(38.6)	(36.7)	(35.3)		
(GDP 대비 비율)	(16.1)	(12.8)	(12.8)	(12.8)	(12.8)	(12.8)		
통합재정수지	- 86.0	- 50.8	- 130.5	- 267.4	- 384.8	- 458.7		
(GDP 대비 비율)	(- 4.0)	(- 2.0)	(- 4.5)	(- 8.2)	(- 11.0)	(- 12.4)		
관리재정수지	- 127.0	- 111.0	- 147.3	- 183.3	- 217.2	- 249.6		
(GDP 대비 비율)	(- 5.8)	(- 4.3)	(- 5.0)	(- 5.7)	(- 6.2)	(- 6.7)		
국가채무	1,068.8	1,842.6	2,939.1	4,215.1	5,624.7	7,137.6	4.0	5.7
(GDP 대비 비율)	(49.2)	(72.1)	(100.7)	(130.0)	(161.0)	(192.6)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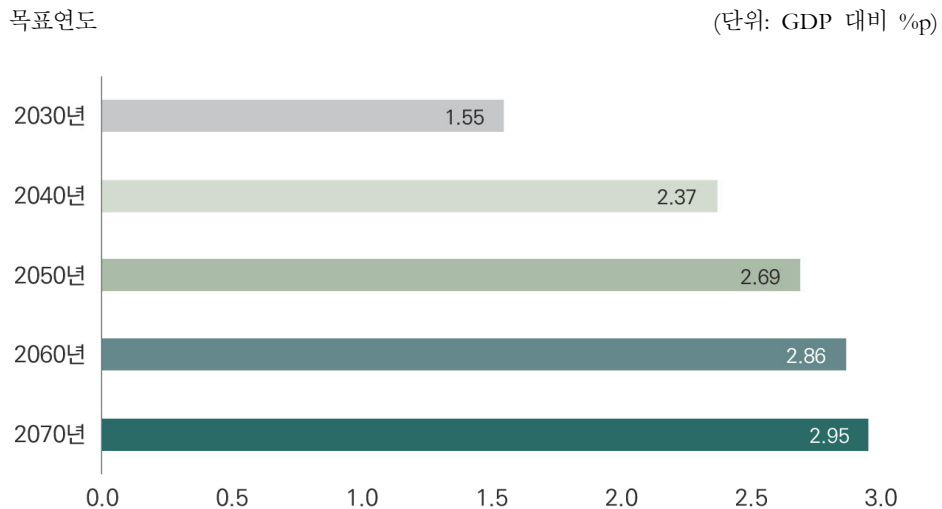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적자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22년 86.0조원(GDP 대비 4.0%)에서 2070년 458.7조원(GDP 대비 12.4%)으로 증가 전망
 - 총지출 증가율(1.4%)이 총수입 증가율(0.8%)보다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수지는 악화
 - 사회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 적자폭 확대
 -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는 2022년 41.0조원 흑자이지만 점차 감소하여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20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6%)이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0.6%)보다 2.9%p 높은 것에 기인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기금 운용수익의 감소 등에 기인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27.0조원(GDP 대비 5.8%)에서 2070년 249.6조원(GDP 대비 6.7%)으로 증가 전망

-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2%)에서 2070년 7,137.6조원(GDP 대비 192.6%)으로 연평균 4.0% 증가 전망
 - 중앙정부 채무는 2022년 1,037.7조원(GDP 대비 47.8%)에서 2070년 7,084.6조원(GDP 대비 191.2%)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 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매년 누적된다고 가정하여 전망
 -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2년에 31.1조원(GDP 대비 1.4%)에서 2070년 53.1조원(GDP 대비 1.4%)으로 연평균 1.1% 증가 전망

- (참고) 203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매년 GDP 대비 1.55%p의 관리재정수지 개선 필요
 - 목표 국가채무 비율과 해당 비율의 달성 시점은 거시경제 및 재정 상황,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동 예시는 기준 시점에서의 국가채무 비율 추이를 고려
 -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9.)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 비율은 58.8%로 예상되며, 본 보고서의 전망 결과에서는 2026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0% 초과할 것으로 전망
 - 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 시점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면 관리재정수지 개선 노력은 더욱 요구
 - 2040년까지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려면 매년 평균적으로 GDP 대비 2.37%p, 2070년까지 해당 비율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2.95%p의 재정수지 개선 필요

[국가채무 비율 60% 유지를 위해 필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개선 비율]



주: 1. 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2. 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을 위한 재정수지 개선 규모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2020.9.)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시나리오2

- 재량지출 전망에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장기 수렴 수준을 시나리오1보다 낮게 가정(12.8% → 11.7%)
 - 재량지출 규모 감소에 따라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시나리오1보다 42.8%p 낮은 149.9%가 될 것으로 전망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2)]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603.9	688.8	775.3	805.6	831.0	883.1	0.8	2.4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8)	(23.8)	(23.8)		
총지출	689.9	711.3	867.5	1,024.4	1,156.4	1,270.8	1.3	2.9
(GDP 대비 비율)	(31.8)	(27.8)	(29.7)	(31.6)	(33.1)	(34.3)		
- 의무지출	340.5	411.5	524.8	643.9	746.4	835.9	1.9	3.6
(총지출 대비 비중)	(49.4)	(57.9)	(60.5)	(62.9)	(64.5)	(65.8)		
(GDP 대비 비율)	(15.7)	(16.1)	(18.0)	(19.9)	(21.4)	(22.6)		
- 재량지출	349.4	299.8	342.7	380.6	410.0	434.9	0.5	2.1
(총지출 대비 비중)	(50.6)	(42.1)	(39.5)	(37.1)	(35.5)	(34.2)		
(GDP 대비 비율)	(16.1)	(11.7)	(11.7)	(11.7)	(11.7)	(11.7)		
통합재정수지	-86.0	-22.5	-92.2	-218.8	-325.4	-387.6		
(GDP 대비 비율)	(-4.0)	(-0.9)	(-3.2)	(-6.7)	(-9.3)	(-10.5)		
관리재정수지	-127.0	-82.6	-109.0	-134.7	-157.8	-178.5		
(GDP 대비 비율)	(-5.8)	(-3.2)	(-3.7)	(-4.2)	(-4.5)	(-4.8)		
국가채무	1,068.8	1,762.5	2,555.1	3,477.1	4,485.7	5,552.0	3.5	5.2
(GDP 대비 비율)	(49.2)	(69.0)	(87.5)	(107.2)	(128.4)	(149.9)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시나리오3

- 재량지출 전망에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2026년부터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재량지출 규모 감소에 따라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73.7%p 낮은 119.0%가 될 것으로 전망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3)]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GDP 대비 비율)	603.9 (27.8)	688.8 (27.0)	775.3 (26.6)	805.6 (24.8)	831.0 (23.8)	883.1 (23.8)	0.8	2.4
총지출 (GDP 대비 비율)	689.9 (31.8)	746.4 (29.2)	869.7 (29.8)	991.7 (30.6)	1,091.7 (31.3)	1,173.8 (31.7)	1.1	2.8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0.5 (49.4) (15.7)	413.2 (55.4) (16.2)	530.0 (60.9) (18.2)	645.2 (65.1) (19.9)	738.3 (67.6) (21.1)	813.4 (69.3) (22.0)	1.8	3.5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9.4 (50.6) (16.1)	333.1 (44.6) (13.0)	339.7 (39.1) (11.6)	346.5 (34.9) (10.7)	353.4 (32.4) (10.1)	360.4 (30.7) (9.7)	0.1	1.7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86.0 (-4.0)	-57.5 (-2.3)	-94.4 (-3.2)	-186.1 (-5.7)	-260.7 (-7.5)	-290.7 (-7.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7.0 (-5.8)	-117.7 (-4.6)	-111.2 (-3.8)	-102.0 (-3.1)	-93.1 (-2.7)	-81.6 (-2.2)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1,068.8 (49.2)	1,857.9 (72.7)	2,791.4 (95.6)	3,515.4 (108.4)	4,044.9 (115.8)	4,408.3 (119.0)	3.0	4.7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시나리오4

- 재량지출 전망에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2026년부터 총지출을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도록 통제하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수준을 재량지출로 가정
 - 재량지출 규모 감소에 따라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115.3%p 낮은 77.3%가 될 것으로 전망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4)]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GDP 대비 비율)	603.9 (27.8)	688.8 (27.0)	775.3 (26.6)	805.6 (24.8)	831.0 (23.8)	883.1 (23.8)	0.8	2.4
총지출 (GDP 대비 비율)	689.9 (31.8)	745.5 (29.2)	852.2 (29.2)	946.3 (29.2)	1,019.6 (29.2)	1,081.4 (29.2)	0.9	2.6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0.5 (49.4) (15.7)	412.6 (55.3) (16.2)	527.3 (61.9) (18.1)	636.6 (67.3) (19.6)	719.4 (70.6) (20.6)	779.7 (72.1) (21.0)	1.7	3.4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9.4 (50.6) (16.1)	332.9 (44.7) (13.0)	324.9 (38.1) (11.1)	309.7 (32.7) (9.6)	300.1 (29.4) (8.6)	301.7 (27.9) (8.1)	-0.3	1.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86.0 (-4.0)	-56.6 (-2.2)	-76.9 (-2.6)	-140.8 (-4.3)	-188.6 (-5.4)	-198.3 (-5.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7.0 (-5.8)	-116.8 (-4.6)	-93.7 (-3.2)	-56.7 (-1.7)	-21.0 (-0.6)	10.9 (0.3)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1,068.8 (49.2)	1,858.0 (72.7)	2,720.4 (93.2)	3,151.5 (97.2)	3,189.0 (91.3)	2,864.5 (77.3)	2.1	3.7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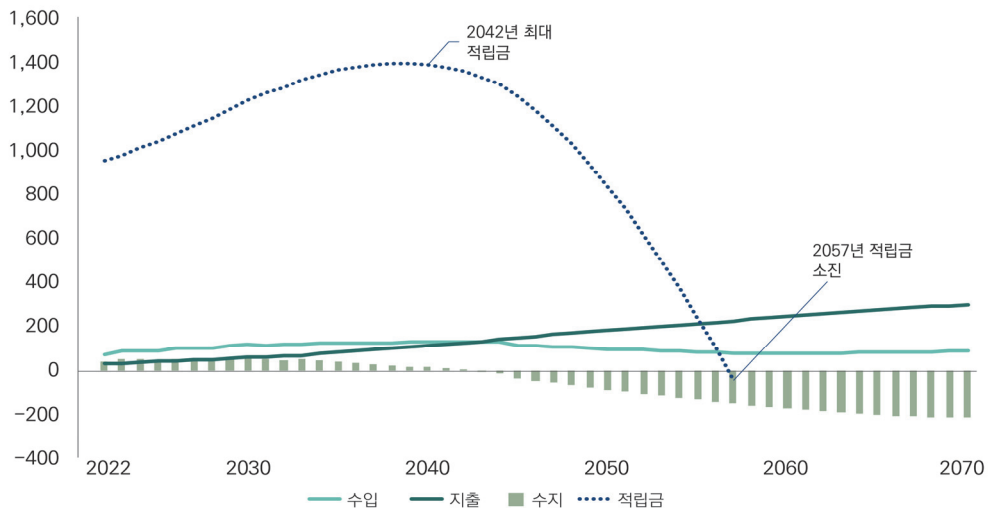
3.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인구 중위 기준)

-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므로 사회보장성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지출 수준을 낮추는 수입·지출 조정, 또는 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보전과 같은 ‘제도 변화’를 가정하지 않음
 - 다만, 향후 재정수지 및 적립금 규모 등에 대한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

-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42년에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감소하여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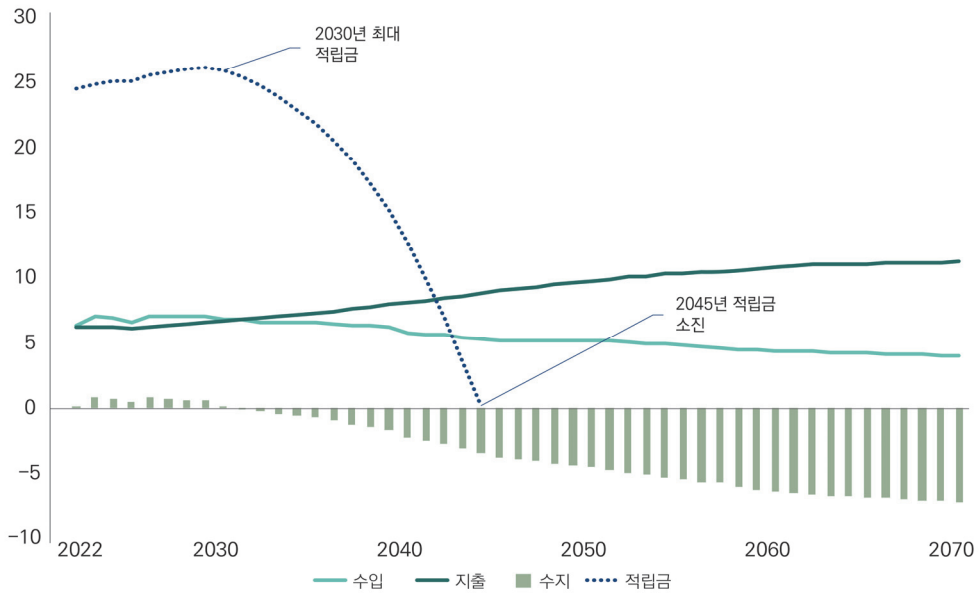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다만, 최대 적립금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0년에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31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감소하여 204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사학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단위: 조원)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다만, 최대 적립금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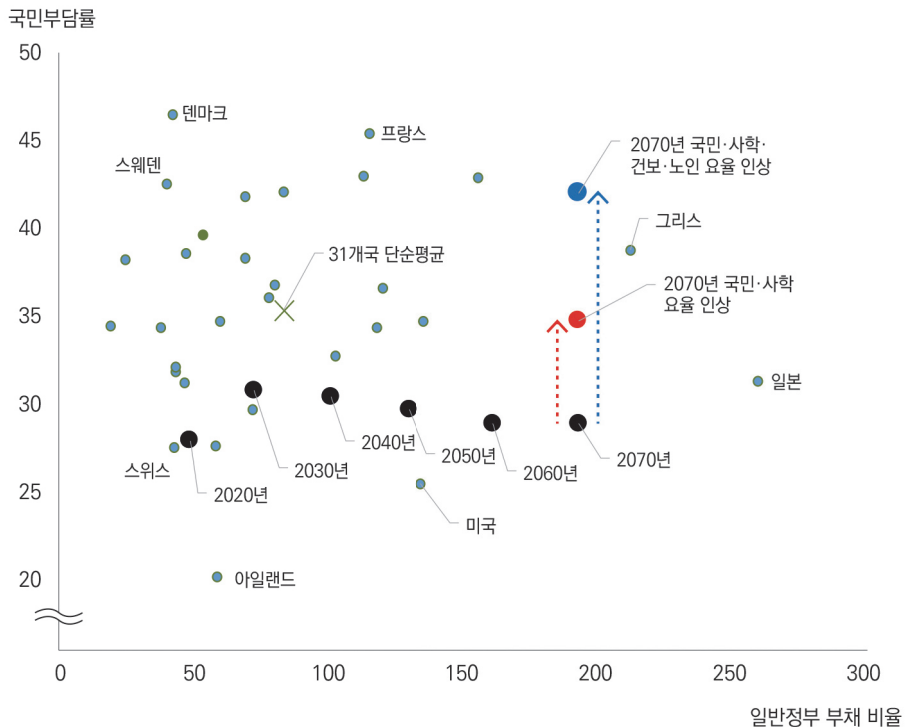
-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액 감축 등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 소진 이후 207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275.5조원(2022년 불변가격)으로 GDP 대비 61.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의 경우 적립금 소진 이후 207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6.1조원(2022년 불변가격)으로 GDP 대비 3.4% 수준으로 전망

□ (참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22년 31.0%, 2070년 28.6%로 전망(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70년에 34.8%로 높아질 전망
-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70년에 42.0%로 높아질 전망

[OECD 주요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일반정부 부채 현황]

(단위: GDP 대비 %)



1. 국민부담률 자료는 OECD, 일반정부 부채(D2) 자료는 IMF에 근거(2020년 기준)
2. 녹색 작은 점(●)은 국민부담률과 일반정부 부채(D2) 자료가 모두 있는 31개국의 자료이며, 평균은 31개국 기준 단순평균
3. 검정색 큰 점(●)은 이번 장기 재정전망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및 국가채무 비율(D1)을 의미(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4. 빨간색 큰 점(●)은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의 2070년 기준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비율(D1), 파란색 큰 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의 2070년 기준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비율(D1)을 의미

자료: OECD, Tax Revenue Database(Data extracted on 07 Jul 2022 08:52 UTC (GMI) from OECD.Stat); IMF, Fiscal Monitor(2022.4.)

IV.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1. 개요

-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인 인구에 적용되는 가정을 달리할 경우 장기 재정 전망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
 - (저위) 2070년 기준으로 저위 가정에 따른 총인구 수는 중위(3,766만명)보다 612만명이 적은 3,153만명, 생산연령인구(15~64세) 수는 중위(1,737만명)보다 329만명 적은 1,408만명, 고령인구(65세 이상) 수는 중위(1,747만명)보다 184만명 적은 1,563만명
 - (고위) 2070년 기준으로 고위 가정에 따른 총인구 수는 중위보다 672만명이 많은 4,438만명, 생산연령인구(15~64세) 수는 중위보다 358만명이 많은 2,095만명, 고령인구(65세 이상) 수는 중위보다 183만명이 많은 1,931만명

[인구추계 가정별 주요 인구 전망]

(단위: 만명)

구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저위	5,158	5,015	4,755	4,333	3,752	3,153
	중위	5,163	5,120	5,019	4,736	4,262	3,766
	고위	5,168	5,244	5,293	5,150	4,805	4,438
생산 연령 인구	저위	3,665	3,332	2,747	2,220	1,784	1,408
	중위	3,668	3,381	2,852	2,419	2,066	1,737
	고위	3,670	3,431	2,969	2,637	2,365	2,095
고령 인구	저위	901	1,287	1,664	1,791	1,718	1,563
	중위	902	1,306	1,724	1,900	1,868	1,747
	고위	902	1,324	1,782	2,006	2,015	1,931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2.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 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비교하여 고위 또는 저위 가정 적용 시 인구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로 국가채무 수준 변화
 - 재량지출 시나리오1을 전제로 인구 저위 가정의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기준으로 중위(192.6%)보다 10.4p%가 높은 203.1%로 전망되며, 인구 고위 가정의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보다 8.8%p 낮은 183.9%로 전망
 - 국가채무의 금액은 고위 가정이 가장 높으나 인구 가정에 따른 GDP 차이로 국가채무 비율은 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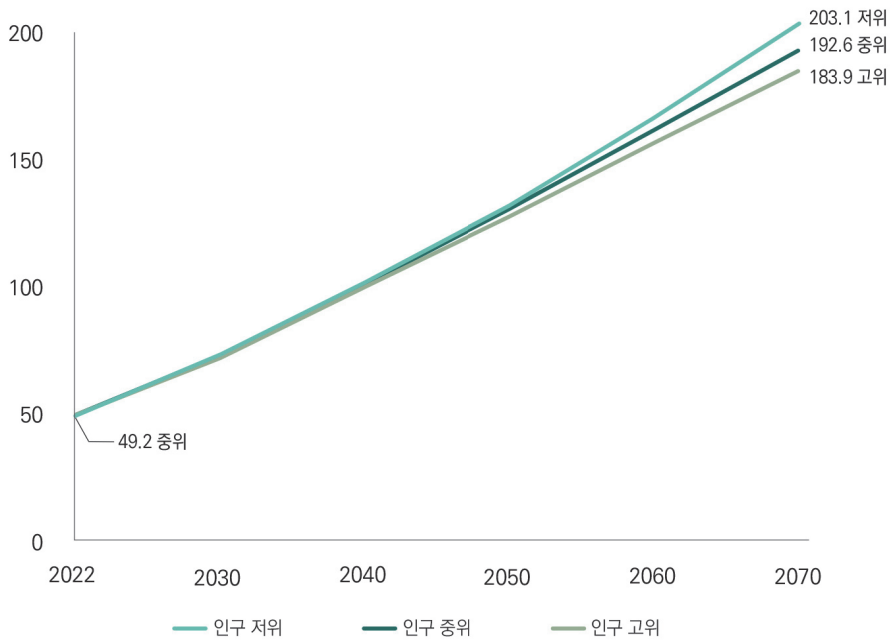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인구 저위 기준 (GDP 대비 비율)	1,068.8 (49.3)	1,833.2 (72.8)	2,867.2 (101.3)	4,025.2 (131.8)	5,272.0 (165.9)	6,557.9 (203.1)	3.9	5.4
인구 중위 기준 (GDP 대비 비율)	1,068.8 (49.2)	1,842.6 (72.1)	2,939.1 (100.7)	4,215.1 (130.0)	5,624.7 (161.0)	7,137.6 (192.6)	4.0	5.7
인구 고위 기준 (GDP 대비 비율)	1,068.8 (49.1)	1,859.6 (71.8)	3,042.6 (99.8)	4,482.3 (127.3)	6,142.4 (155.8)	8,008.6 (183.9)	4.3	6.1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 가정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요약 및 결론

- 장기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
 -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량지출 전망 및 인구추계 가정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전망 결과 제시
 - 다만, 이러한 전망 결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망의 전제가 되는 인구 및 거시경제 가정이 달라지거나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

-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2012~2022년 기간의 평균 수준(GDP 대비 12.8%)으로 가정할 경우 2070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92.6%로 전망(시나리오1)
 - 재량지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낮추거나 증가율을 통제하면 국가채무 비율 하락 전망(2070년 기준 77.3~149.9%)

-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전망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와 총수입, 총지출의 변화로 국가채무 수준이 다르게 전망
 - 저위 가정을 적용할 경우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으로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10.4%p 증가하고,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8.8%p 감소

-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현행 제도 유지 시 전망기간 내 적립금 소진 우려(인구 중위 기준)
 -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 사학연금기금은 2045년에 적립금 소진 예상
 -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필요

I.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재정전망은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재정총량 및 그 구성항목의 전망값을 추계하는 작업이다. 특히 장기 재정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예견된 인구구조의 장기적인 변화가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복지지출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총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긴 시간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데, 장기 재정전망은 특정 경로에 대한 가정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재정총량이 장기적으로 어떤 값을 갖게 될지를 추계(projections)하는 것이다. 다만, 추계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는 전망기간 동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득 찬 먼 미래의 재정상황에 대해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추계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재정자원의 시점 간 배분을 통해 장구한 기간에 걸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활동의 장기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세대가 짊어질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준인지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산업구조·기후 및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의 초저출생이 지속되고 있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성장 둔화,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국가채무 수준도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는 2022년부터 2070년까지 향후 49년간 국가재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점검하는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이하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한다. 이번 장기 재정전망은 최근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21년 12월 발표)에 근거하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¹⁾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장기 재정전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위험의 정도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가. 주요 전제 및 특징

이번 장기 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재정전망의 기준 시점은 2022년 5월 말로 한다. 따라서 기준 시점까지 제·개정된 주요 법령의 제도변화를 반영하며, 기준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망한다. 인구변수의 경우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 발표)에 근거하며, 거시경제변수는 동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NABO의 장기 경제전망(2022년 5월 말 기준)에 근거한다. 주요 재정변수와 관련하여서는 2021회 계연도의 총수입·총지출 실적치를 반영하며,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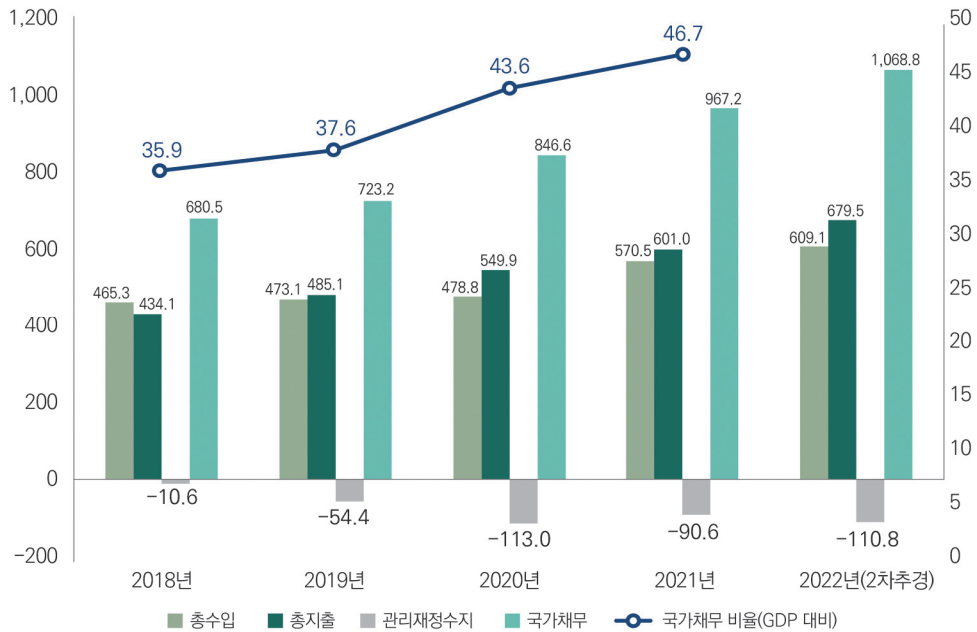
참고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정총량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1년 46.7% 수준으로 높아졌다.²⁾

1)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2020. 9.)의 경우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통계청, 2019. 3.)에 근거하였으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였다.

2) GDP는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2022. 6. 8.)에 근거하였다.

[그림 1] 최근 재정총량의 변화: 2018~2022년

(단위: 조원, %)



주: 1. 2018~2021년은 실적치, 2022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GDP는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2022. 6. 8.)에 근거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둘째,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22년부터 2070년까지 49년으로 하며,³⁾ 기준 시점(2022년 5월 말)의 현행 정책이나 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전망기간이 장기인 경우 인구 및 거시경제의 변화,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정부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여 재정전망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기 재정전망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국가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미래의 재정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이 취지이므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국세수입의 경우 실질 세부담 가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목가치로 규정된 소득과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소비과세의 종량세율 등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의 경우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지출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화’를 가정하지 않는다.⁴⁾

3) 장기 재정전망의 마지막 시점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207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망한 점을 고려하여 2070년으로 한다.

셋째, 전망기간이 49년에 이르는 장기이므로 전망의 전제와 기본 가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지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지출 전망에 대한 가정을 달리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또한, 장기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인 인구는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대한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인구추계의 저위·중위·고위 가정에 따른 장기 재정의 변화를 분석한다.⁵⁾

끝으로, 모든 전망항목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망하나, 전망기간이 장기이므로 재정총량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전망 결과는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불변가격(2022년 기준)으로 제시한다.⁶⁾ 이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전망 결과를 현 시점의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표 1]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기준시점	○ 2022년 5월 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전망기간	○ 2022~2070년(49년)
주요변수	○ 인구변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 ○ 경제변수: NABO 장기 경제전망(2022.5.)
시나리오	○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인구추계 저위·중위·고위 시나리오 분석
금액기준	○ 2022년 불변가격

4) 국민연금기금 등의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 급여지출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보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장기 재정전망의 국가채무 전망치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 적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재정으로 보전한다면 국가채무 수준은 장기 재정전망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5) 재량지출 시나리오(4가지)와 인구추계 시나리오(3가지)의 모든 조합에 대해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경우 인구추계 중위를 기준으로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인구추계 시나리오는 재량지출 시나리오1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6) 2022년 기준 불변가격은 경상가격으로 전망한 전망 결과를 불변가격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불변가격 환산지수는 2022년의 경우 1, 2023년 이후는 NABO의 연도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다.

나. 주요 전망방법

장기 재정전망은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을 기초로 항목별 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총수입, 총지출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⁷⁾

(1) 총수입

총수입은 NABO의 장기 경제전망(2022년 5월 말 기준)을 기초로, 국세수입과 국제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전망한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하여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등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이용한 세목별 전망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다. 다만, 과세자 수, 실효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는 과거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국제외수입은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며, 기금수입은 다시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용자회수 및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2) 총지출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한다. 의무지출은 법령에서 지출요건 및 수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항목별로 전망한 후 합산한다. 의무지출 항목은 인구변수,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 등이 반영된 각각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지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출요건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의무지출처럼 항목별로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시 말해, 2022년의 경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을 반영하고,⁸⁾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최근 중기계획(「2021~2025년

7) 자세한 전망방법은 「부록」 항목별 전망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8)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관련 법률(「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아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로 분류되었으나, 본예산 심의·확정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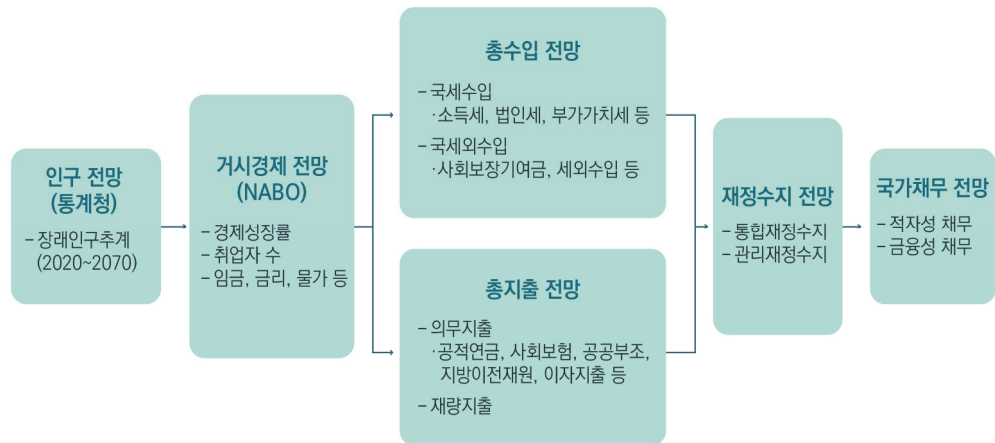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9.)을 반영하며, 2026년 이후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국가채무(D1)⁹⁾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구분되고, 그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과 서민주거 안정용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과거 적자성 채무에 신규 적자분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전망한다. 금융성 채무의 경우는 현재의 GDP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2] NABO 장기 재정전망 흐름도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의무지출로 분류한다.
9) 장기 재정전망에서 전망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 제외)”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의미한다.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1. 인구변수

장기 재정전망의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21년 12월 9일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근거한다. 이 장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방법 및 주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저위·중위·고위 가정에 따른 추계 결과를 살펴본 후 부양비 등 주요 지표를 소개한다.¹⁰⁾

가. 추계 방법 및 주요 가정

통계청의 인구 추계 방법은 기준인구에 출생아 수와 국제순이동은 더하고, 사망자 수는 빼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다음 해 인구를 반복적으로 산출해 나가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을 따른다. 기준인구는 장래인구추계의 출발점이 되는 2020년 7월 1일 시점의 인구를 말하며, 2020년 11월 1일 인구총조사 인구에 2020년 7~10월 사이 발생한 인구변동요인을 가감한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저위·중위·고위 가정에 따라 시나리오로 작성된다. 기본 시나리오는 인구변동요인별 중위 가정을 조합한 중위 추계이며, 고위 가정을 조합한 시나리오가 고위 추계, 저위 가정을 조합한 시나리오가 저위 추계이다. 각 인구변동요인의 가정별 주요 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생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가임여자 1명당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2018년(0.98명) 이후 1명 미만 수준인데, 중위 가정에서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0.77명으로 낮아지고 2024년에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증가하여 2031년에 1.00명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6년 이후에는 계속 1.21명 수준이 유

10) 인구변수에 대한 주요 내용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 가정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26년 1.00명, 2045년 이후 1.40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위 가정에서는 2025년에 0.61명까지 하락한 이후 증가하여 2045년에 1.00명 수준을 회복하고 2049년 이후 1.02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단위: 가임여자 1명당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합계출산율 전망

(단위: 가임여자 1명당 출생아 수)

구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0.73	0.77	0.95	1.02	1.02	1.02
중위	0.77	0.96	1.19	1.21	1.21	1.21
고위	0.85	1.16	1.39	1.40	1.40	1.40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사망과 관련하여 기대수명은 1970~2020년 기간 중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중위 가정에서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남자 81.2세, 여자 87.0세이며, 2070년에 각각 89.5세, 92.8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 기준으로 고위 가정에서 남자의 기대수명은 90.5세, 여자는 94.1세, 저위 가정에서는 각각 88.3세, 91.3세로 전망된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중위 가정 기준으로 2022년 5.9세에서 2070년 3.3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기대수명 전망

(단위: 세)

구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전체	83.7	84.7	86.3	87.6	88.8	89.8
	남자	80.8	82.1	84.0	85.6	87.1	88.3
	여자	86.7	87.3	88.5	89.5	90.4	91.3
	남녀 차이	5.8	5.1	4.4	3.8	3.3	3.0
중위	전체	84.1	85.7	87.4	88.9	90.1	91.2
	남자	81.2	83.0	85.1	86.8	88.3	89.5
	여자	87.0	88.4	89.8	90.9	92.0	92.8
	남녀 차이	5.9	5.3	4.6	4.1	3.7	3.3
고위	전체	84.4	86.6	88.5	90.1	91.2	92.3
	남자	81.4	83.9	86.1	88.0	89.3	90.5
	여자	87.4	89.3	90.8	92.2	93.2	94.1
	남녀 차이	5.9	5.4	4.8	4.2	3.9	3.6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국제이동의 경우 중위 가정에서는 국제순이동(유입-유출)이 2022년 0.8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증가하고, 2070년 4.0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고위 가정에서는 2030년 10.8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2070년 9.6만명 수준으로 전망되며, 저위 가정에서는 2030년 -1.5만명, 2070년 -1.1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4] 국제순이동 전망

(단위: 만명)

구 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5.5	-1.5	-1.1	-1.2	-1.1	-1.1
중위	0.8	4.6	4.6	4.3	4.3	4.0
고위	7.1	10.8	10.6	10.1	10.0	9.6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나. 인구추계 결과

시나리오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총인구,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인구 피라미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인구의 경우 중위 추계에서는 2022년 5,163만명에서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 3,7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가정에 따른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은 2020년(5,184만명)으로 이미 해당 시점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추계에 따른 총인구는 2022년까지는 감소하지만 2023년부터 증가하여 2038년 5,297만명 수준(정점)에 이르고 이후 인구 감소가 지속되어 2070년 4,438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저위 추계에 따른 총인구는 중위 추계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정점을 지나 2030년 5,015만명, 2070년 3,15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

(단위: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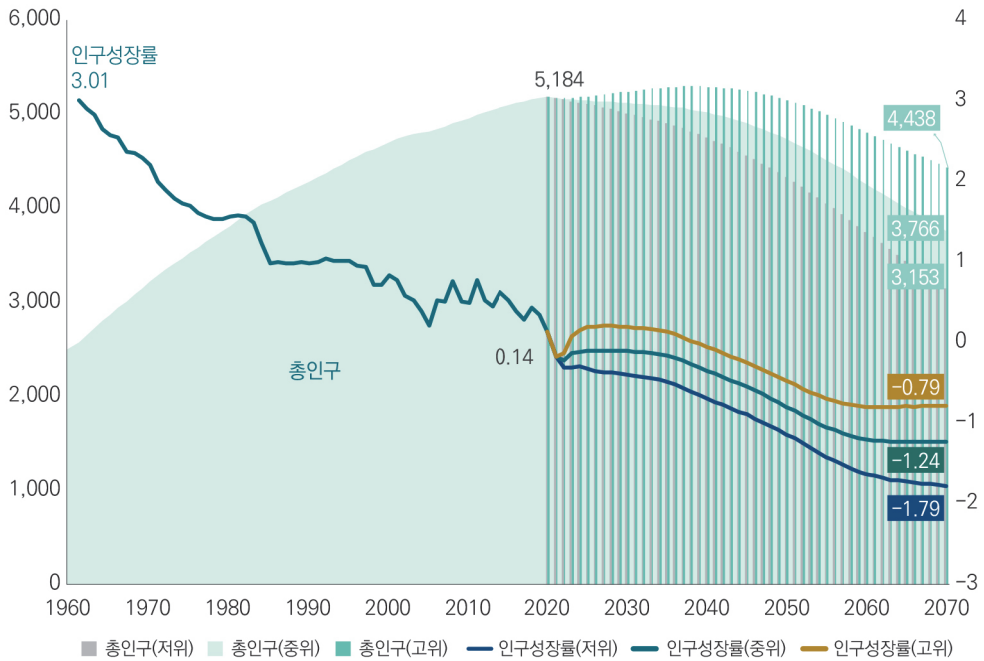
구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총인구	5,158	5,015	4,755	4,333	3,752	3,153
	인구성장률	-0.31	-0.40	-0.69	-1.14	-1.64	-1.79
중위	총인구	5,163	5,120	5,019	4,736	4,262	3,766
	인구성장률	-0.23	-0.10	-0.35	-0.80	-1.21	-1.24
고위	총인구	5,168	5,244	5,293	5,150	4,805	4,438
	인구성장률	-0.13	0.20	-0.06	-0.47	-0.80	-0.79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그림 4] 총인구·인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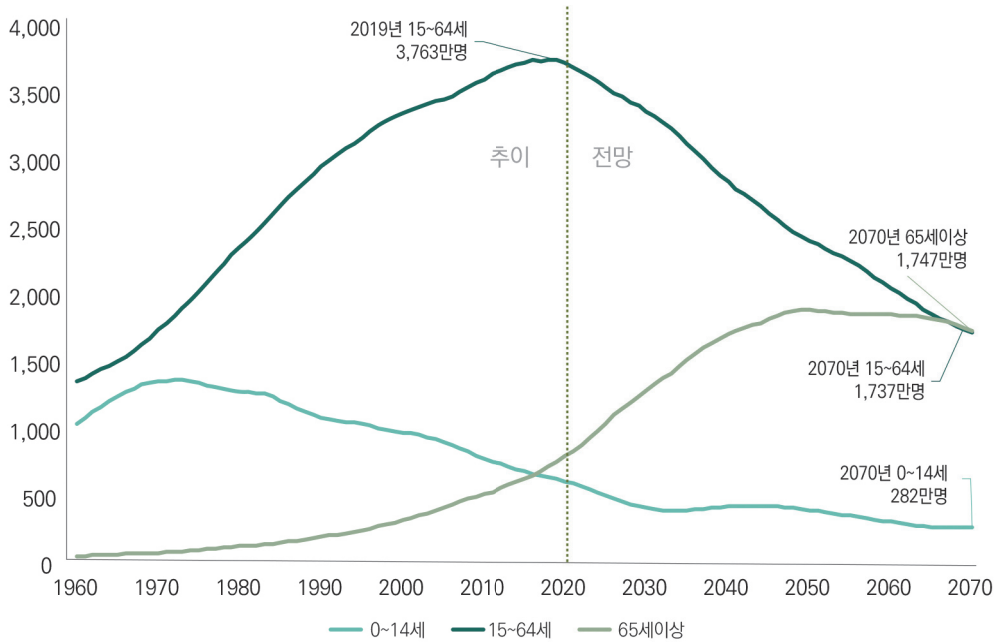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와 총인구 대비 구성비를 보면, 중위 추계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68만명(총인구 대비 71.0%)에서 2030년 3,381만명(66.0%), 2070년 1,737만명(46.1%)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의 정점은 2019년(3,763만명)으로 이미 해당 시점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2년 902만명(총인구 대비 17.5%)에서 2030년 1,306만명(25.5%), 2070년 1,747만명(46.4%)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은 2067년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소년인구(0~14세)는 2022년 593만명(총인구 대비 11.5%)에서 2070년 282만명(7.5%)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중위 기준)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고위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31만명(총인구 대비 65.4%), 2070년 2,095만명(47.2%) 수준이며, 고령인구는 2070년 1,931만명(43.5%), 유소년인구는 2070년 413만명(9.3%)으로 전망된다. 저위 추계의 경우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32만명(총인구 대비 66.4%), 2070년 1,408만명(44.6%) 수준이며, 고령인구는 2070년 1,563만명(49.6%), 유소년인구는 2070년 182만명(5.8%)으로 전망된다.

[표 6] 연령계층별 인구 전망

(단위: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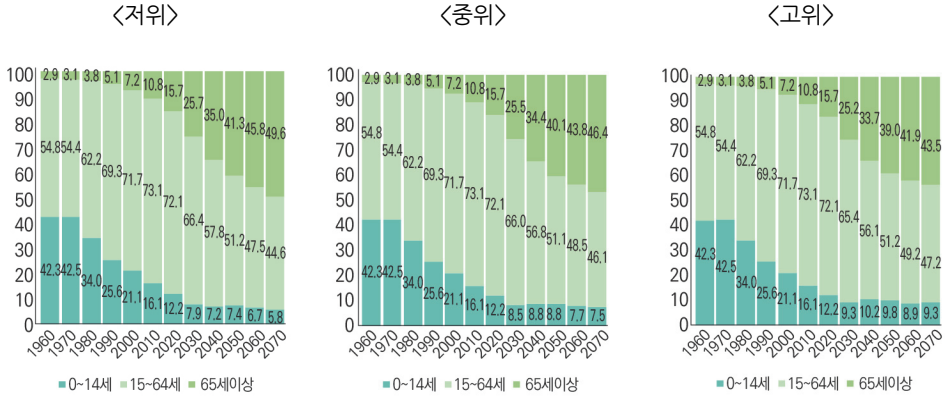
구 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인구	합계	5,158	5,015	4,755	4,333	3,752	3,153
		0~14세	592	396	344	322	250	182
		15~64세	3,665	3,332	2,747	2,220	1,784	1,408
		65세 이상	901	1,287	1,664	1,791	1,718	1,563
	구성비	0~14세	11.5	7.9	7.2	7.4	6.7	5.8
		15~64세	71.0	66.4	57.8	51.2	47.5	44.6
65세 이상		17.5	25.7	35.0	41.3	45.8	49.6	
중위	인구	합계	5,163	5,120	5,019	4,736	4,262	3,766
		0~14세	593	433	443	417	327	282
		15~64세	3,668	3,381	2,852	2,419	2,066	1,737
		65세 이상	902	1,306	1,724	1,900	1,868	1,747
	구성비	0~14세	11.5	8.5	8.8	8.8	7.7	7.5
		15~64세	71.0	66.0	56.8	51.1	48.5	46.1
65세 이상		17.5	25.5	34.4	40.1	43.8	46.4	
고위	인구	합계	5,168	5,244	5,293	5,150	4,805	4,438
		0~14세	595	489	542	507	425	413
		15~64세	3,670	3,431	2,969	2,637	2,365	2,095
		65세 이상	902	1,324	1,782	2,006	2,015	1,931
	구성비	0~14세	11.5	9.3	10.2	9.8	8.9	9.3
		15~64세	71.0	65.4	56.1	51.2	49.2	47.2
65세 이상		17.5	25.2	33.7	39.0	41.9	43.5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그림 6]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저위·중위·고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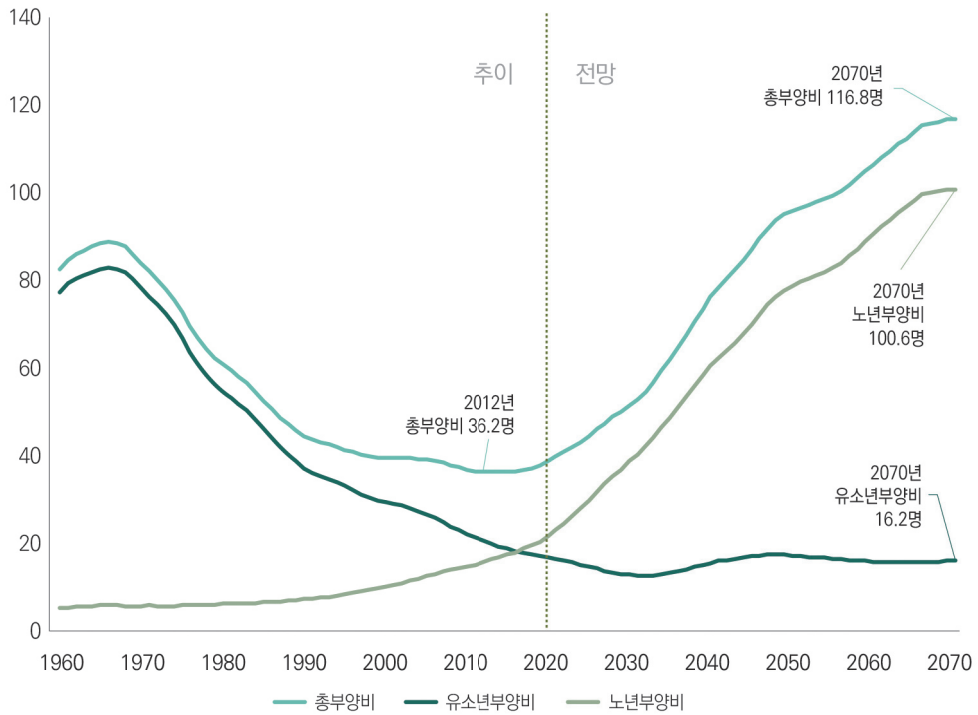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22년 40.8명에서 2056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16.8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소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유소년인구)는 2022년 16.2명에서 2032년 12.5명까지 낮아졌다가 증가하여 2070년 16.2명 수준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2년 24.6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70년 100.6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2.0명에서, 2070년 620.6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7]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중위 기준)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위 추계에서 총부양비는 2030년 52.8명, 2070년 111.9명, 노령화지수는 2030년 270.6명, 2070년 467.9명으로 전망된다. 저위 추계의 경우 총부양비는 2030년 50.5명, 2070년 124.0명, 노령화지수는 2030년 324.7명, 2070년 857.9명으로 전망된다.

[표 7]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전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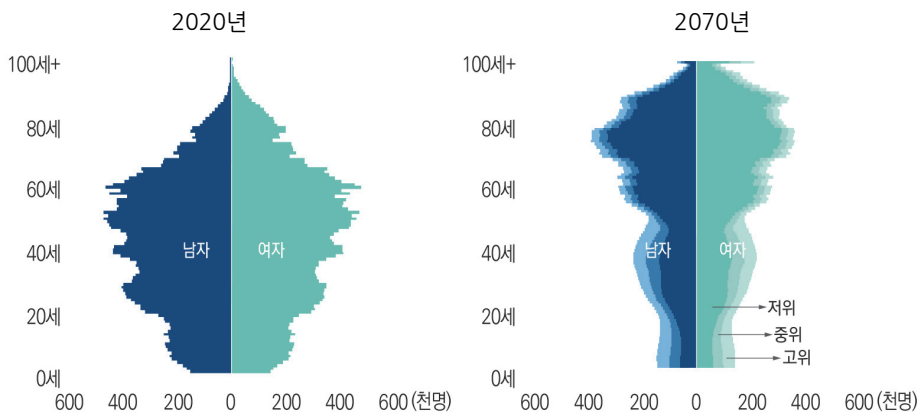
구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총부양비	40.8	50.5	73.1	95.2	110.4	124.0
	유소년부양비	16.2	11.9	12.5	14.5	14.0	12.9
	노년부양비	24.6	38.6	60.6	80.7	96.3	111.0
	노령화지수	152.2	324.7	483.1	555.9	686.3	857.9
중위	총부양비	40.8	51.4	76.0	95.8	106.3	116.8
	유소년부양비	16.2	12.8	15.5	17.2	15.8	16.2
	노년부양비	24.6	38.6	60.5	78.6	90.4	100.6
	노령화지수	152.0	301.6	389.5	456.2	570.6	620.6
고위	총부양비	40.8	52.8	78.3	95.3	103.2	111.9
	유소년부양비	16.2	14.3	18.3	19.2	18.0	19.7
	노년부양비	24.6	38.6	60.0	76.1	85.2	92.2
	노령화지수	151.5	270.6	328.8	395.5	473.7	467.9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인구 추계 결과에 따른 인구피라미드는 2020년 현재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나, 2070년에는 60세 이상이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8] 인구 피라미드 비교: 2020년 vs. 207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참고] 장래인구추계의 인구변동요인 비교

□ 통계청의 2019년 추계와 2021년 추계의 인구변동요인 비교 (중위 추계 기준)

- 합계출산율의 경우 2021년 추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혼인을 급감과 기존의 출산율 감소세 확대에 따라 2030년에 2019년 추계보다 0.18명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기대수명은 2021년 추계에서 2019년 추계보다 남녀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국제순이동은 2021년 추계에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2023년 동안 2019년 추계보다 적게 추계되었으나, 2024년 이후 국제순이동자가 2019년 추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

[장래인구추계의 인구변동요인 비교(중위 기준)]

지표		2019년 추계	2021년 추계	차이('21 - '19)
합계출산율 (명)	2020년	0.90	0.84	-0.06
	2030년	1.14	0.96	-0.18
	2050년	1.27	1.21	-0.06
기대수명 (세, 남/여)	2020년	80.3 / 86.1	80.5 / 86.5	0.2 / 0.4
	2030년	82.6 / 87.7	83.0 / 88.4	0.4 / 0.7
	2065년	88.3 / 91.5	88.9 / 92.4	0.6 / 0.9
	2070년		89.5 / 92.8	
국제순이동 (천명)	2020년	72	-58	-130
	2030년	37	46	9
	2065년	35	41	6
	2070년		40	

주: 2019년 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2019. 3. 28.)를 말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참고] 장래인구추계의 주요 인구추계 결과 비교

□ 통계청의 2019년 추계와 2021년 추계의 인구변동요인 가정 변화에 따른 주요 인구 추계 결과 비교(중위 추계 기준)

[장래인구추계의 주요 인구추계 결과 비교(중위 기준)]

지표		2019년 추계		2021년 추계		차이('21 - '19)	
총인구 (천명, 성장률)	2020년	51,781	(0.14)	51,836	(0.14)	56	(0.00)
	2030년	51,927	(-0.03)	51,199	(-0.10)	-728	(-0.07)
	2065년	40,293	(-12.4)	40,069	(-12.4)	-224	(0.00)
	2070년			37,656	(-12.4)		
15 - 64세 인구 (천명, %)	2020년	37,358	(72.1)	37,379	(72.1)	21	(0.0)
	2030년	33,947	(65.4)	33,813	(66.0)	-134	(0.6)
	2065년	18,503	(45.9)	18,746	(46.8)	243	(0.9)
	2070년			17,368	(46.1)		
65세이상 인구 (천명, %)	2020년	8,125	(15.7)	8,152	(15.7)	27	(0.0)
	2030년	12,980	(25.0)	13,056	(25.5)	77	(0.5)
	2065년	18,570	(46.1)	18,402	(45.9)	-167	(-0.2)
	2070년			17,473	(46.4)		
0 - 14세 인구 (천명, %)	2020년	6,297	(12.2)	6,306	(12.2)	9	(0.0)
	2030년	5,000	(9.6)	4,329	(8.5)	-671	(-1.1)
	2065년	3,221	(8.0)	2,921	(7.3)	-300	(-0.7)
	2070년			2,815	(7.5)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2020년	38.6	(21.7)	38.7	(21.8)	0.1	(0.1)
	2030년	53.0	(38.2)	51.4	(38.6)	-1.6	(0.4)
	2065년	117.8	(100.4)	113.8	(98.2)	-4.0	(-2.2)
	2070년			116.8	(100.6)		

주: 2019년 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2019. 3. 28.)를 말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2. 거시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2022년 5월 말 기준 NABO의 2022~2070년 거시경제전망을 사용한다.

NABO의 전망에 따르면, 실질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30년에 1.8%, 그 이후 2070년에 0.6% 수준으로 하락하여 2022~2070년간 평균 1.2%로 전망된다. 명목GDP 성장률은 2030년에 3.5% 수준에서 2040년 2.8% 수준까지 낮아지지만, 2040년 이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2070년까지 실질GDP 성장률의 완만한 하락 추세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명목GDP 성장률은 2022~2070년간 연평균 2.8%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기적으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겠지만 2022년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40년 이후 1.8%를 유지하여 2022~2070년간 평균 1.9%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의 경우 2022년에는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4.8%까지 상승하지만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3%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50년 이후에는 생산인구 감소 효과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2022~2070년간 평균 3.5%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2년 3.0%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2040년 이후 1.8~1.9%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2022~2070년간 평균 1.9%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표 8]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인구 중위 기준)

(단위: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평균
실질GDP성장률	2.6	1.8	1.2	0.9	0.7	0.6	1.2
명목GDP성장률	4.8	3.5	2.8	2.5	2.3	2.2	2.8
소비자물가상승률	4.0	1.9	1.8	1.8	1.8	1.8	1.9
명목임금상승률	4.8	3.5	3.4	3.2	3.6	3.7	3.5
국고채금리(3년 만기)	3.0	2.0	1.8	1.8	1.8	1.9	1.9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2	1.7	1.6	1.6	1.6	1.6	1.6

주: 평균은 전망기간(2022~2070년) 동안 각 변수의 단순평균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장기 전망은 단기 혹은 중기 전망과 큰 차이가 있다. 단기 혹은 중기 전망은 경기변동 요인이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 전망은 거시변수의 장기 전망치를 결정하는 주요 외생변수와 구조 변화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이론과 과거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정과 전제, 그리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에 주어진 인구변수를 바탕으로 투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안정적인 경로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기 거시경제 전망은 통계청의 지난 2021년 12월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와 지난 2019년 3월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결과의 차이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고용 등 주요 거시변수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서 주어진 15세 이상 인구, 노년부양인구비율, 합계출산율 등 인구 변수와 주요 거시변수 사이의 통계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전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저위, 중위 및 고위 인구시나리오별 장기 전망치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경제변수간의 내생적 관계와 경제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전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위 시나리오 전망에서 전제한 주요 거시경제와 인구변수와의 안정적 관계가 저위 및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각각의 시나리오별 인구변수의 양적 변화만을 고려하여 연장한 전망이기 때문이다.

[표 9]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인구 저위 기준)

(단위: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평균
실질GDP성장률	2.5	1.6	1.0	0.6	0.3	0.1	0.9
명목GDP성장률	4.6	3.1	2.4	2.0	1.7	1.5	2.3
소비자물가상승률	3.9	1.7	1.6	1.6	1.6	1.6	1.7
명목임금상승률	4.9	3.6	3.6	3.4	3.8	3.9	3.7
국고채금리(3년 만기)	3.0	1.7	1.4	1.5	1.5	1.5	1.6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1	1.5	1.4	1.4	1.4	1.4	1.5

주: 평균은 전망기간(2022~2070년) 동안 각 변수의 단순평균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0]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인구 고위 기준)

(단위: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평균
실질GDP성장률	2.7	2.0	1.5	1.3	1.1	1.1	1.5
명목GDP성장률	5.0	3.8	3.2	3.0	2.8	2.8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1	2.0	1.9	1.9	1.9	1.9	2.0
명목임금상승률	4.7	3.4	3.4	3.0	3.4	3.6	3.4
국고채금리(3년 만기)	3.1	2.2	2.0	2.0	2.0	2.1	2.2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2.3	1.8	1.7	1.7	1.7	1.7	1.7

주: 평균은 전망기간(2022~2070년) 동안 각 변수의 단순평균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실질GDP 성장률 전망은 성장요인을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분해하여 설명하는 생산함수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사이에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나 노동 소득분배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생산투입요소별로 잠재수준을 추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계기법을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와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장기 실질GDP를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총저축률 하락과 자본축적 증

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동투입량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15세 이상 생산인구¹¹⁾,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주간 근로시간 등이다. 15세 이상 민간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와의 차이를 고려한 후 인구추계 상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별 노동투입은 장래인구추계의 저위·중위·고위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 결과를 기초로 주요 인구변수가 15세 이상 생산인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저위·중위·고위 인구시나리오에서 2090년을 전후한 기간까지 시나리오별로 속도를 달리하여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이후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시나리오 중위 기준 15~64세 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 전환되었으며 15세 이상 인구는 2032년 이후 감소 전환될 전망이다. 1955~1974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2039년 기간 중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2025년까지 완만히 상승하고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 여성경제활동참여 수준,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은퇴연령 연장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전망치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장기 균형 실업률 수준(3.7% 추정)에서 소폭 상승한 후 완만히 하락하며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전체 하였다. 장기 시계열로 본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하면 실업률은 0.1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하락, 경제활동참가율 둔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31년 정점으로 감소 전환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가 중위 기준보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위 기준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25년 64.1%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70년 54.4%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2034년부터 시작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도 2029년을 정점으로 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저위는 2029년 2,796만명, 고위는 2033년 2,942만명을 정점

11) 장래인구추계 상의 인구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만 15세 이상인 자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추계치인 반면, 노동투입을 결정하는 15세 이상 인구에는 외국인과 군인, 재소자 등 비민간인은 제외하고 있다.

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본투입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총고정투자의 증감에 의해 결정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기초하여 전망하였다. 생산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은 과거 추세를 고려하여 2021년 4.3%에서 2070년 4.6%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중위 기준 총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9.5% 수준을 유지하지만 2040년 28.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총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1년 기준 29.7%로 선진국 23.6%, G7 22.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년부양비율과 총고정투자/GDP 비율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년부양비율(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30년 38.6%에서 2040년 60.5%, 2070년 100.6%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시나리오별 노년부양비율은 저위와 고위는 2070년 각각 111.0%, 92.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한 인구시나리오별 총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저위는 2070년 24.4%, 고위는 26.6%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중위 기준 2022년 3.0%에서 2030년 2.3%, 2040년 1.7%로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 반영되며 자본스톡 증가율은 2070년에 0.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저위 인구시나리오의 경우 자본스톡 증가율은 2070년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고위 기준 자본스톡 증가율은 2030년 2.9%에서 2070년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함수접근법에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노동, 자본과 함께 주요 투입요소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1980년대 초 제2차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과 같은 주요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반등하였다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 시 노출된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지만 이후 지속적인 혁신 부재 등에 따른 추세적 하락 패턴을 반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총요소생산성 증가률은 팬데믹 이후 일시적 반등 흐름을 보이다 2022년 이후에는 2070년까지 연평균 1.0% 수준으로 전제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중기 시계열 모형 예측치와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

표 수준 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중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 동학과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여건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장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예상되는 경제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전제하였다. 단기에는 물가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이 변동하여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벗어나지만 장기적으로 통화당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연간 2.5% 상승하며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웃돌았다. 2022년에도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며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해소되며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치 2%에 근접할 전망이다. 그 이후의 장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물가안정목표 수준의 변경 가능성¹²⁾ 등을 고려하여 1.8%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림 9] 물가안정목표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12)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설명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위와 고위에서도 중위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장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수렴하도록 전망하였다. 다만, 저위와 고위 시나리오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안정목표 수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제하였다.

명목임금상승률은 먼저 실질임금상승률을 전망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실질임금상승률은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율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실질임금상승률은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지만 균형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기존 연구¹³⁾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에 대한 한계노동생산성의 탄력성이 1.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며 5.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22년 명목임금상승률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4.8%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3.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50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영향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상승하여 2070년에는 3.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70년까지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저위 3.7%, 중위 3.5%, 고위 3.4%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위의 명목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위, 고위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국고채금리는 회사채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실질회사채금리는 자본의 한계생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전망에서는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도출한 자본의 한계생산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실질회사채 장기 시계열을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실질신용스프레드를 추정한 후 이를 실질회사채금리에서 차감하여 실질국고채금리를 구하였다. 실질신용스프레드는 실질GDP와 역관계로 상정하여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명목국고채금리는 실질국고채금리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추정 결과 명목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2년 3.0%를 정점으로 2023년 2.9%, 2024년 2.8%로 점차 하락하면서 2030년 2.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30년 이후로는 1.8~1.9% 수준을 지속하며 2022~2070년 연평균 1.9%로 전망

13) 신석하 외(2013)에서는 0.98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을 1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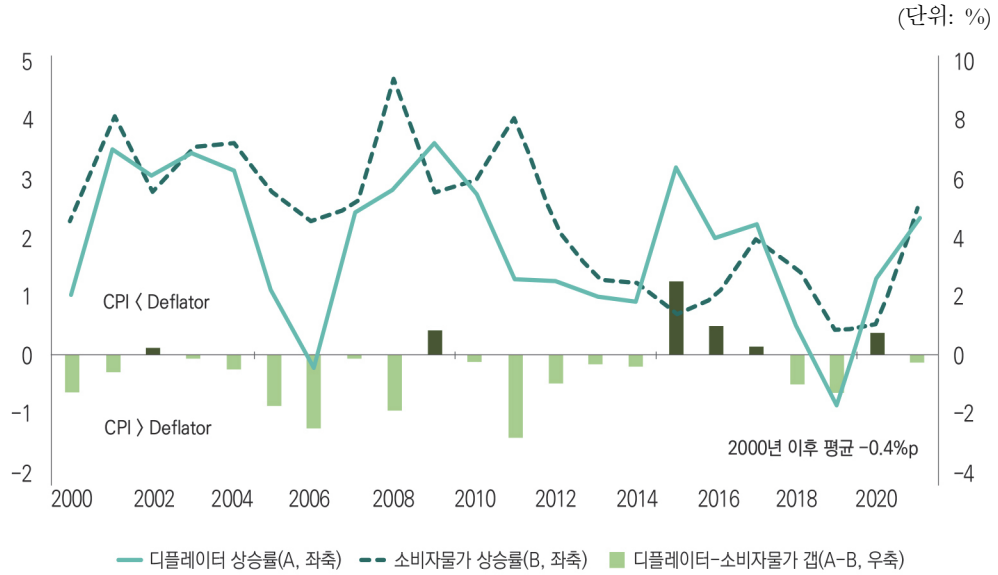
된다.

고위 및 저위 금리는 각각에 해당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및 실질GDP,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고위와 저위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토대로 분위별 실질회사채 장기 시계열을 전망하였으며, 고위와 저위의 실질GDP를 고려하여 신용스프레드를 추정하였다. 중위와 마찬가지로 실질회사채 금리에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질국고채 금리를 산출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저위 및 고위 전망치를 더하여 명목금리를 추정하였다.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장기 전망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의 역사적 차이를 고려하여 전제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사이의 상관계수는 0.93(1966년~2021년)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장기에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하였다. 2000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0.4%p 낮았으나 최근 5년에는 그 차이가 0.3%p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추세적으로 0.2%p로 축소될 것으로 전제¹⁴⁾하였으며, 그 결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0.2%p 낮은 1.6% 수준을 지속한다고 전제하였다. 고위와 저위 시나리오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장기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전제하였다.

14) 과거 우리나라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수출재화와 수입재화의 상대가격인 교역조건 악화 추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하회하였다. 향후에도 대외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Ⅲ.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1. 개요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그 수혜대상과 지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대상 및 규모를 변경할 때 제약이 있다. 반면, 재량지출은 사업에 대한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규모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되고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조정되므로 의무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용이하다. 즉,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출의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이번 장기 재정전망은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재량지출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정부의 정책의지 등에 따라 지출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량지출 전망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가정 설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재량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재량지출에 대한 전망 가정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전망한다.

[표 11]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나리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349.4조원)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23년 323.0조원, '24년 336.2조원, '25년 348.4조원) ○ 2026~2030년: 장기 수렴 수준*으로 서서히 조정 *장기 수렴 수준은 재량지출의 2012~2022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 ○ 2031년~: 장기 수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명목GDP 성장률로 증가)
시나리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6~2030년: 장기 수렴 수준*으로 서서히 조정 *장기 수렴 수준은 재량지출의 2012~2019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11.7%)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량지출 수준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비율만을 반영 ○ 2031년~: 장기 수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명목GDP 성장률로 증가)
시나리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6년~: 2025년 수준의 실질 규모 유지(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
시나리오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6년~: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차감

주: 시나리오4는 정부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방식

우선 시나리오1에서 재량지출은 2022년의 경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349.4조원)으로 하고, 2023~2025년의 재량지출은 중기계획(「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9.)의 2023~2025년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다.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기계획의 재량지출을 반영하였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재량지출은 323.0조원, 2024년 336.2조원, 2025년 348.4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중기계획을 반영한 후에는 5년 기간 동안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서서히 조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2031년 이후의 재량지출은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며,

GDP 대비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결과 2022년은 재량지출이 GDP 대비 16.1%이지만 그 비율이 점차 하락하여 2030년부터는 12.8%가 되면서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0.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중위 기준).

시나리오2는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시나리오1보다 낮추는 방안이다. 시나리오1의 장기 수렴 수준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에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12.8%)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량지출 수준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2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비율만을 고려한 평균 수준(11.7%)으로 하였다. 그 결과 장기 수렴 수준의 재량지출 수준이 GDP 대비 12.8%에서 11.7%로 낮아지며,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0.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중위 기준).

시나리오3은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2026년부터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한 이후의 재량지출에 대해 관련 정보가 있는 2025년의 재량지출을 기준으로 그 실질 규모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재량지출이 통제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2070년 기준 재량지출 수준은 GDP 대비 9.7%로 낮아지며,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0.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중위 기준).

시나리오4는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는 2025년까지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나, 2026년부터는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량지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지출의 증가율이 총지출의 증가율(명목GDP 성장률)보다 높으므로 재량지출 증가율은 낮아진다.¹⁵⁾ 2070년 기준 재량지출 수준은 GDP 대비 8.1%로 낮아지며, 연평균 0.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중위 기준).

15) 이러한 전망 방법은 정부가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적용한 방식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강력히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전제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0. 9.

[표 12]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인구 중위 기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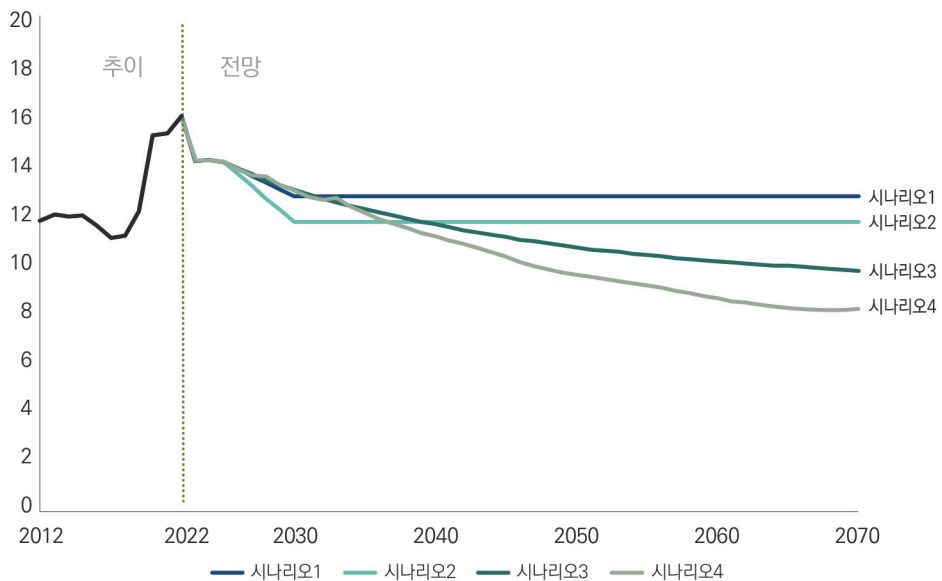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시나리오1	349.4	326.6	373.4	414.7	446.8	473.9	0.6
(GDP 대비 비율)	(16.1)	(12.8)	(12.8)	(12.8)	(12.8)	(12.8)	
시나리오2	349.4	299.8	342.7	380.6	410.0	434.9	0.5
(GDP 대비 비율)	(16.1)	(11.7)	(11.7)	(11.7)	(11.7)	(11.7)	
시나리오3	349.4	333.1	339.7	346.5	353.4	360.4	0.1
(GDP 대비 비율)	(16.1)	(13.0)	(11.6)	(10.7)	(10.1)	(9.7)	
시나리오4	349.4	332.9	324.9	309.7	300.1	301.7	-0.3
(GDP 대비 비율)	(16.1)	(13.0)	(11.1)	(9.6)	(8.6)	(8.1)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1]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전망 비교(인구 중위 기준)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량지출에 대한 전망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2070년 기준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시나리오1의 국가채무 비율은 192.6%로 전망되며,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보다 42.8%p 낮은 149.9%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채무 수준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시나리오3의 경우 2025년 재량지출 수준의 실질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사실상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시나리오로서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73.7%p 낮은 119.0%로 전망되며,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로 통제하는 시나리오4에서는 실질적으로(불변가격 기준) 재량지출이 감소하며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115.3%p 낮은 77.3%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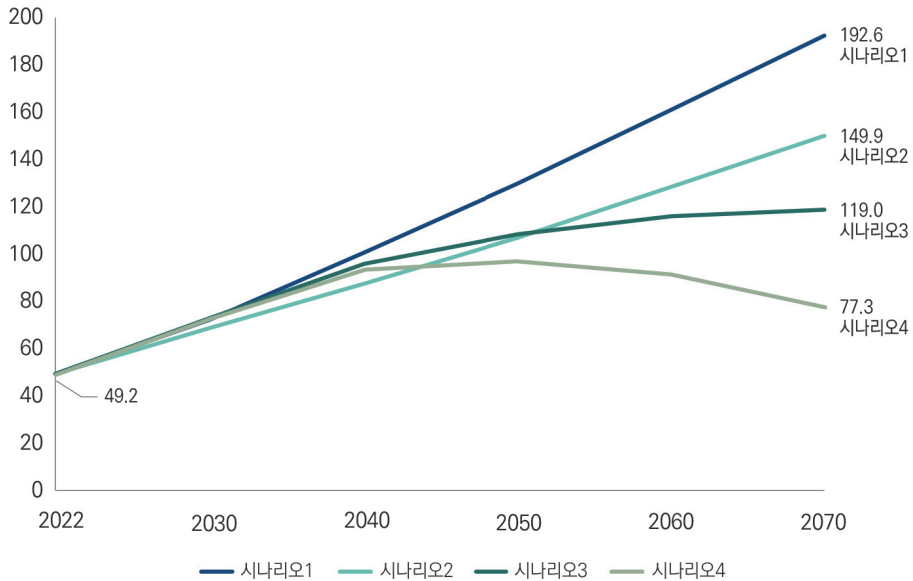
[표 13]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및 국가채무 전망 비교(인구 중위 기준)

(단위: %, %p)

	재량지출(2070년)		국가채무(2070년)	
	금액(조원)	GDP 대비 비율	금액(조원)	GDP 대비 비율
시나리오1	473.9	12.8	7,137.6	192.6
시나리오2	434.9	11.7 (-1.1)	5,552.0	149.9 (-42.8)
시나리오3	360.4	9.7 (-3.1)	4,408.3	119.0 (-73.7)
시나리오4	301.7	8.1 (-4.6)	2,864.5	77.3 (-115.3)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 시나리오1과의 차이(%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2]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¹⁶⁾

가. 시나리오1

(1) 재정총량

장기 재정전망 결과, 총수입은 2022년 603.9조원(GDP 대비 27.8%)에서 2070년 883.1조원(GDP 대비 23.8%)으로 연평균 0.8% 증가하며, 총지출은 2022년 689.9조원(GDP 대비 31.8%)에서 2070년 1,341.9조원(GDP 대비 36.2%)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2022년 86.0조원(GDP 대비 4.0%)에서 2070년 458.7조원(GDP 대비 12.4%)으로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2022년 127.0조원(GDP 대비 5.8%)에서 2070

16) 이하 재량지출 시나리오는 인구추계 중위 기준의 전망 결과이다.

년 249.6조원(GDP 대비 6.7%)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2%)에서 2070년 7,137.6조원(GDP 대비 192.6%)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603.9	688.8	775.3	805.6	831.0	883.1	0.8	2.4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8)	(23.8)	(23.8)		
- 국세수입	391.2	421.0	477.1	523.1	555.7	587.9	0.9	2.5
(GDP 대비 비율)	(18.0)	(16.5)	(16.3)	(16.1)	(15.9)	(15.9)		
- 국세외수입	212.7	267.8	298.2	282.5	275.3	295.3	0.7	2.3
(GDP 대비 비율)	(9.8)	(10.5)	(10.2)	(8.7)	(7.9)	(8.0)		
총지출	689.9	739.6	905.8	1,073.0	1,215.8	1,341.9	1.4	3.1
(GDP 대비 비율)	(31.8)	(29.0)	(31.0)	(33.1)	(34.8)	(36.2)		
- 의무지출	340.5	413.0	532.4	658.3	769.1	868.0	2.0	3.6
(총지출 대비 비중)	(49.4)	(55.8)	(58.8)	(61.4)	(63.3)	(64.7)		
(GDP 대비 비율)	(15.7)	(16.2)	(18.2)	(20.3)	(22.0)	(23.4)		
- 재량지출	349.4	326.6	373.4	414.7	446.8	473.9	0.6	2.3
(총지출 대비 비중)	(50.6)	(44.2)	(41.2)	(38.6)	(36.7)	(35.3)		
(GDP 대비 비율)	(16.1)	(12.8)	(12.8)	(12.8)	(12.8)	(12.8)		
통합재정수지	-86.0	-50.8	-130.5	-267.4	-384.8	-458.7		
(GDP 대비 비율)	(-4.0)	(-2.0)	(-4.5)	(-8.2)	(-11.0)	(-12.4)		
관리재정수지	-127.0	-111.0	-147.3	-183.3	-217.2	-249.6		
(GDP 대비 비율)	(-5.8)	(-4.3)	(-5.0)	(-5.7)	(-6.2)	(-6.7)		
국가채무	1,068.8	1,842.6	2,939.1	4,215.1	5,624.7	7,137.6	4.0	5.7
(GDP 대비 비율)	(49.2)	(72.1)	(100.7)	(130.0)	(161.0)	(192.6)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총수입

(가) 개관

총수입은 2022년 603.9조원(GDP 대비 27.8%)에서 2070년 883.1조원(GDP 대비 23.8%)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18.0%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70년 15.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완만한 하락세는 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임금근로자 수와 취업자 수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율 둔화, 유류 등 소비량 증가세 둔화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증가율 둔화 등에 기인한다.

국세외수입은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9.8%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증가 영향으로 2029년 10.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70년에는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에 기인한다.

[표 15]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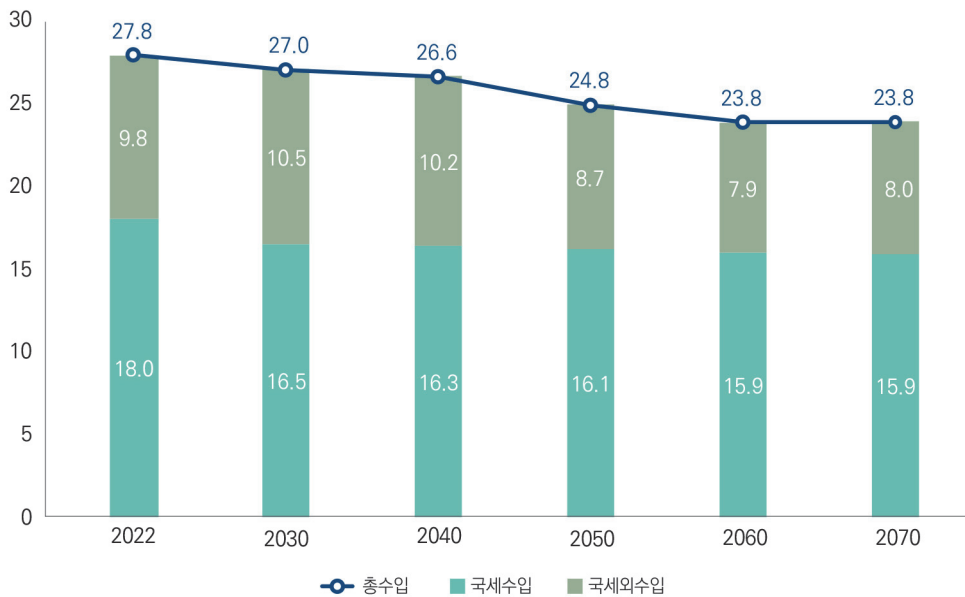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03.9	688.8	775.3	805.6	831.0	883.1	0.8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8)	(23.8)	(23.8)	
- 국세수입	391.2	421.0	477.1	523.1	555.7	587.9	0.9
(GDP 대비 비율)	(18.0)	(16.5)	(16.3)	(16.1)	(15.9)	(15.9)	
- 국세외수입	212.7	267.8	298.2	282.5	275.3	295.3	0.7
(GDP 대비 비율)	(9.8)	(10.5)	(10.2)	(8.7)	(7.9)	(8.0)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3]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수입 비율

(단위: %)



주: 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전망 모형을 통해서 전망하고, 인지세, 과년도수입 등 일부 기타 세목은 GDP 대비 비중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주요 세목 중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별 과세소득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연령별 가구의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반면, 세부담 인구의 연령 파악이 어렵거나 거시경제요인에 의해 주로 세수가 결정되는 법인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기타 세목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목별로 GDP 대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본 전망에서는 현행 조세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적용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명목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실질소득 하에서 물가상승에 의해 과세표준이 증

가하면, 적용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상(bracket creeping)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연령별 실효세율)와 법인세는 현재의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종량세의 경우 세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물가상승에 따라 세부담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종량세율도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6]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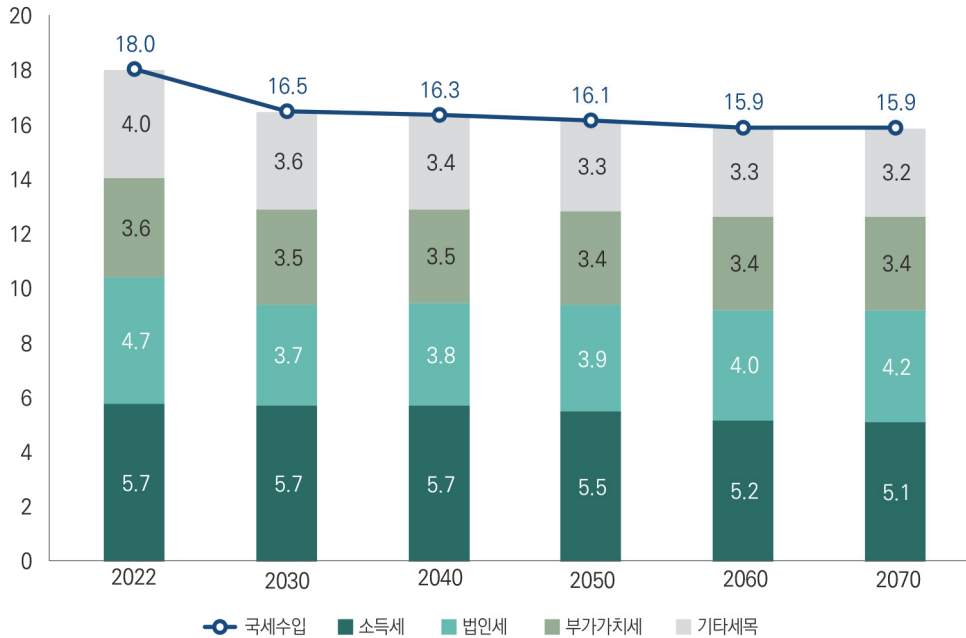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391.2	421.0	477.1	523.1	555.7	587.9	0.9
(GDP 대비 비율)	(18.0)	(16.5)	(16.3)	(16.1)	(15.9)	(15.9)	
- 소득세	124.6	145.7	165.3	177.3	180.9	187.2	0.9
(GDP 대비 비율)	(5.7)	(5.7)	(5.7)	(5.5)	(5.2)	(5.1)	
- 법인세	101.4	94.6	110.5	126.1	140.2	153.8	0.9
(GDP 대비 비율)	(4.7)	(3.7)	(3.8)	(3.9)	(4.0)	(4.2)	
- 부가가치세	78.7	88.2	101.0	111.7	120.3	127.3	1.0
(GDP 대비 비율)	(3.6)	(3.5)	(3.5)	(3.4)	(3.4)	(3.4)	
- 기타 세목	86.5	92.5	100.3	108.0	114.3	119.5	0.7
(GDP 대비 비율)	(4.0)	(3.6)	(3.4)	(3.3)	(3.3)	(3.2)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4]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항목별 비율

(단위: %)



주: 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세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의 경우 2022년 124.6조원(GDP 대비 5.7%)¹⁷⁾에서 2070년 187.2조원(GDP 대비 5.1%)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전망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값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3.6%에서 2038년 3.9%로 정점에 이른 후 취업자 증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70년 3.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임금근로자 수)는 2031년(2034년) 정점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취업자 중 근로소득세 신고자 비중(신고자/취업자)은 최근 40세 이상 남성 및 30세 이상 여성의 소득세 신고자 비중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¹⁸⁾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중은 2022년 신고자 비중이 2030년까지 유지되고, 이후에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하여 점진

17) 2021년 소득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양도소득세수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2020년의 4.8%에서 5.5%로 증가했으며, 2022년도는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8) 2050년 이후는 205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증가세¹⁹⁾가 가파르게 나타났지만, 향후 중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등 경기적 요인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완화된 후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성장과 추세를 함께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퇴직연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는 2070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2022년 101.4조원(GDP 대비 4.7%)에서 2070년 153.8조원(GDP 대비 4.2%)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3.8%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법인영업 실적 감소로 2020년 2.9%까지 하락한 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2021년 다시 3.4%로 상승하였다. 2022년 법인세의 GDP 대비 비율은 글로벌 수요확대 등에 의한 2021년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4.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 기간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법인세의 과세 기반인 법인영업잉여는 향후 인구고령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년 3.7%에서 2070년 4.2%까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2022년 78.7조원(GDP 대비 3.6%)에서 2070년 127.3조원(GDP 대비 3.4%)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2022년 3.6% 수준으로 2023년에는 예정된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²⁰⁾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후 기간에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율은 장기적인 친환경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석유·석탄 등 화석 에너지의 소비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70년 3.4%로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외 기타 세목은 2022년 86.5조원(GDP 대비 4.0%)에서 2070년 119.5조원(GDP 대비 3.2%)으로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과세의 GDP 대비 비율은 유류 및 주류 소비량 증가율의 둔화로 2022년 1.4%에서 2070년 1.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 최근 양도소득세 증감율은 다음과 같다. (‘17) 15.1%, (‘18) 19.1%, (‘19) △10.7%, (‘20) 46.9%, (‘21) 55.2%

20) 2021년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의 이양비율은 2021년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의 GDP 대비 비율은 자산세수 호조기인 2022년 1.8%에서 이후 기간에는 장기적인 추세 수준으로 회귀하여 2030년 1.6%를 기록한 후, 인구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를 반영하여 2070년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세는 기 체결된 FTA의 효과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²¹⁾ 추세 등을 반영하여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0.5%에서 2070년 0.4%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인지세 등은 경제규모와 세수가 비례할 것으로 전제하여 GDP 대비 세수 비율이 2022년 수준(0.4%)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며, 수입의 경제적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기여금,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등으로 세분하여 각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였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보험료수입(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은 인구구조를 반영한 가입자 추계를 바탕으로 현행 보험료율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하였다. 동 기금들의 기금운용수익은 적립금에 수익률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으며, 수익률은 기금별 실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전망 기간 내 적립금 소진 시기가 나타나 기금운용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보험료수입(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한 항목은 수입의 경제적 성질에 따라 실적치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GDP 대비 국세외수입의 비율은 2022년 9.8%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학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 기금운용수익이 감소하여 2070년 8.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1)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기준 58개국과 FTA가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실효세율 인하 효과는 향후 10년 안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7]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212.7	267.8	298.2	282.5	275.3	295.3	0.7
(GDP 대비 비율)	(9.8)	(10.5)	(10.2)	(8.7)	(7.9)	(8.0)	
- 기금수입	185.1	240.0	267.5	249.0	239.6	257.7	0.7
(GDP 대비 비율)	(8.5)	(9.4)	(9.2)	(7.7)	(6.9)	(7.0)	
사회보장기여금	82.5	99.5	115.5	122.9	126.4	137.7	1.1
(GDP 대비 비율)	(3.8)	(3.9)	(4.0)	(3.8)	(3.6)	(3.7)	
국민연금	55.0	65.1	74.8	77.8	78.6	87.5	1.0
(GDP 대비 비율)	(2.5)	(2.5)	(2.6)	(2.4)	(2.3)	(2.4)	
사학연금	3.5	3.5	3.7	3.7	3.3	3.0	-0.3
(GDP 대비 비율)	(0.2)	(0.1)	(0.1)	(0.1)	(0.1)	(0.1)	
고용보험	15.5	20.5	24.6	27.5	29.5	31.3	1.5
(GDP 대비 비율)	(0.7)	(0.8)	(0.8)	(0.8)	(0.8)	(0.8)	
산재보험	8.5	10.5	12.5	14.0	15.0	15.9	1.3
(GDP 대비 비율)	(0.4)	(0.4)	(0.4)	(0.4)	(0.4)	(0.4)	
- 세외수입	27.7	27.9	30.7	33.6	35.7	37.6	0.6
(GDP 대비 비율)	(1.3)	(1.1)	(1.1)	(1.0)	(1.0)	(1.0)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각의 사회보험 전망 모형을 통해 전망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기금의 기여금 수입은 2022년 55.0조원에서 2070년 87.5조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2.5%에서 2070년 기준 2.4%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명목임금 수준, 그리고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명목임금 수준은 NABO의 전망치를 적용하며,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학연금기금의 기여금 수입은 2022년 3.5조원에서 2070년 3.0조원으로 연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0.2%에서 2070년 기준 0.1%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은 사학연금 가입자 수와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수준, 그리고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기준소득월액은 NABO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용보험기금의 기여금 수입은 2022년 15.5조원에서 2070년 31.3조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은 0.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명목임금 수준, 그리고 보험료율에 따라 다른데, 피보험자 수와 명목임금 수준은 NABO의 전망치를 적용하며,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산재보험기금의 기여금 수입은 2022년 8.5조원에서 2070년 15.9조원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은 0.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은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와 명목임금 수준, 그리고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다른데, 적용근로자 수와 명목임금 수준은 NABO의 전망치를 적용하며,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총지출

(가) 개관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지출은 2022년 689.9조원에서 2070년 1,341.9조원으로 연평균 1.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0.8%)보다 0.6%p 높은 수준이며, 전망기간 동안 실질GDP 성장률의 평균(1.2%)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표 18]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89.9	739.6	905.8	1,073.0	1,215.8	1,341.9	1.4
(GDP 대비 비율)	(31.8)	(29.0)	(31.0)	(33.1)	(34.8)	(36.2)	
- 의무지출	340.5	413.0	532.4	658.3	769.1	868.0	2.0
(GDP 대비 비율)	(15.7)	(16.2)	(18.2)	(20.3)	(22.0)	(23.4)	
- 재량지출	349.4	326.6	373.4	414.7	446.8	473.9	0.6
(GDP 대비 비율)	(16.1)	(12.8)	(12.8)	(12.8)	(12.8)	(12.8)	
총지출 구성항목의 비중							평균
- 의무지출	(49.4)	(55.8)	(58.8)	(61.4)	(63.3)	(64.7)	(58.9)
- 재량지출	(50.6)	(44.2)	(41.2)	(38.6)	(36.7)	(35.3)	(41.1)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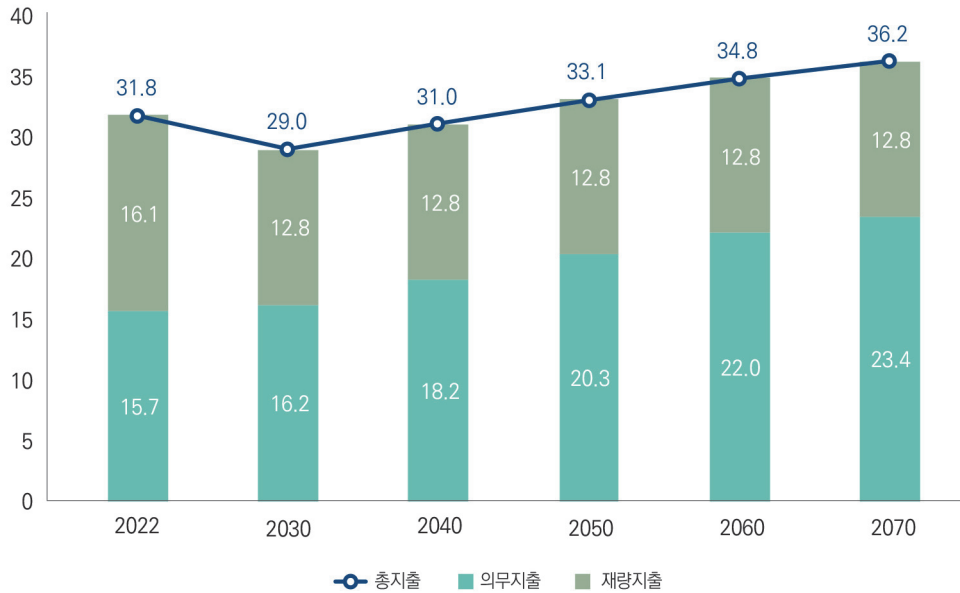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GDP 대비 총지출의 비율은 2022년 31.8%에서 2070년 36.2%로 4.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15.7%에서 2070년 23.4%로 7.7%p 높아질 전망이며, 재량지출은 전망 가정에 따라 2030년부터 GDP 대비 비율이 12.8%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9.4%에서 2070년 64.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지출 비율(시나리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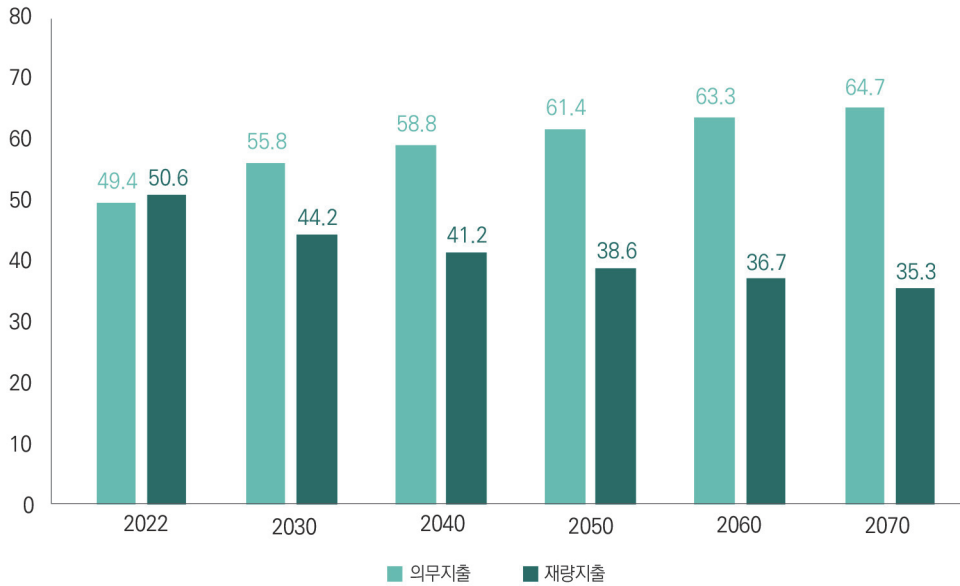
(단위: %)



주: 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6]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시나리오1)

(단위: %)



주: 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2022년 340.5조원(GDP 대비 15.7%)에서 2070년 868.0조원(GDP 대비 23.4%)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2.6%)과 이자지출(4.2%)의 높은 증가율에 주로 기인한다.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 수준에 연동되므로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타 의무지출은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GDP 대비 비율이 0.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²²⁾

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비중은 수급 대상자 수 및 지원금 등의 확대에 의해 2022년 41.6%에서 2070년 56.3%로 14.7%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지출 비중은 2022년 5.5%에서 2070년 15.7%로 10.2%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이전재원은 2022년 48.7%에서 2070년 26.7%로 22.0%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수입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0.4%)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2022년 기타 의무지출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6.4조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 재정전망에서 동 의무지출은 2023년 이후 지출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9]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340.5	413.0	532.4	658.3	769.1	868.0	2.0
(GDP 대비 비율)	(15.7)	(16.2)	(18.2)	(20.3)	(22.0)	(23.4)	
- 복지분야 의무지출	141.6	200.5	282.3	366.3	434.8	488.4	2.6
(GDP 대비 비율)	(6.5)	(7.9)	(9.7)	(11.3)	(12.4)	(13.2)	
- 지방이전재원	165.7	164.9	187.3	205.6	218.7	231.5	0.7
(GDP 대비 비율)	(7.6)	(6.5)	(6.4)	(6.3)	(6.3)	(6.2)	
- 이자지출	18.8	39.3	53.3	75.9	104.3	136.1	4.2
(GDP 대비 비율)	(0.9)	(1.5)	(1.8)	(2.3)	(3.0)	(3.7)	
- 기타 의무지출	14.4	8.3	9.5	10.5	11.3	12.0	-0.4
(GDP 대비 비율)	(0.7)	(0.3)	(0.3)	(0.3)	(0.3)	(0.3)	
의무지출 구성항목별 비중							평균
- 복지분야 의무지출	(41.6)	(48.5)	(53.0)	(55.6)	(56.5)	(56.3)	(51.9)
- 지방이전재원	(48.7)	(39.9)	(35.2)	(31.2)	(28.4)	(26.7)	(35.0)
- 이자지출	(5.5)	(9.5)	(10.0)	(11.5)	(13.6)	(15.7)	(11.0)
- 기타 의무지출	(4.2)	(2.0)	(1.8)	(1.6)	(1.5)	(1.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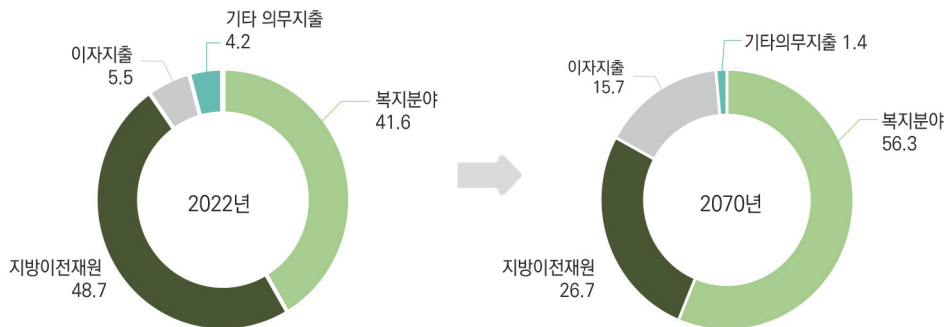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7] 의무지출 구성항목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분야 의무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141.6조원(GDP 대비 6.5%)에서 2070년 488.4조원(GDP 대비 13.2%)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4%)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보다 각각 1.2%p와 0.6%p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은 공적연금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3.7%)에 주로 기인한다.

항목별로 보면, 첫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2년 60.6조원에서 2070년 354.0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2022년 31.9조원에서 2070년 299.8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여 공적연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망기간 동안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2~1.6% 수준으로 국민연금에 비하여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이 전체 복지분야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2.8%에서 2070년 7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급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34.3조원에서 2070년 53.7조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공공부조는 고령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년 37.7조원에서 2070년 70.6조원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²³⁾의 경우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0.5%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복지분야 기타는 2022년 9.0조원에서 2070년 10.2조원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의 경우 고령의 보상금 대상자의 높은 사망률로 인한 감소 요인이 있어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복지는 장애수당(기

23) 영아수당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기존 가족양육수당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관련 법률(「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아 의무지출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본예산 심의·확정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의무지출로 분류하여 공공부조 항목에 포함하였다.

초), 장애인연금 등 다수의 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수당(기초)과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 수 전망에 근거하여 전망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각 항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2022년 42.8%에서 2034년 50.3%로 절반을 넘게 되고 2070년 72.5%로 2022년 대비 29.7%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복지분야 기타는 같은 기간 각각 24.3%에서 11.0%로, 26.6%에서 14.5%로, 6.3%에서 2.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 NABO 장기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항목	세부내역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의무지출		141.6	200.5	282.3	366.3	434.8	488.4	2.6
	(GDP 대비 비율)	(6.5)	(7.9)	(9.7)	(11.3)	(12.4)	(13.2)	(6.7)
공적 연금	국민연금	31.9	58.9	114.0	182.9	247.9	299.8	4.8
	사학연금	5.0	5.8	7.4	9.2	10.4	10.8	1.6
	공무원연금	20.0	26.1	30.8	34.2	35.7	36.1	1.2
	군인연금	3.7	4.7	5.6	6.4	6.8	7.2	1.4
	소 계	60.6	95.4	157.8	232.7	300.9	354.0	3.7
사회 보험	건강보험	11.8	15.6	16.4	16.2	15.8	16.1	0.6
	노인장기요양보험	2.0	3.0	3.3	3.3	3.3	3.4	1.1
	고용보험	13.6	16.0	18.0	19.2	19.9	21.3	0.9
	산재보험	6.9	8.8	10.5	11.4	12.1	13.0	1.3
	소 계	34.3	43.3	48.1	50.2	51.2	53.7	0.9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15.7	21.5	27.2	31.1	32.0	31.6	1.5
	기초연금	16.1	24.3	32.7	36.7	36.8	35.1	1.6
	영유아보육	3.2	3.3	3.6	3.1	2.3	2.5	-0.5
	아동·영아수당	2.7	3.3	3.7	3.2	2.4	2.5	-0.2
	소 계	37.7	51.8	66.2	73.3	72.7	70.6	1.3
복지 분야 기타	보훈	4.9	5.3	5.0	4.6	4.2	4.1	-0.4
	기타 복지	4.1	4.7	5.2	5.6	5.9	6.1	0.8
	소 계	9.0	10.0	10.2	10.1	10.1	10.2	0.3
복지분야 의무지출 대비 비중								평균
-	공적연금	(42.8)	(47.6)	(55.9)	(63.5)	(69.2)	(72.5)	(58.6)
-	사회보험	(24.3)	(21.6)	(17.0)	(13.7)	(11.8)	(11.0)	(16.6)
-	공공부조	(26.6)	(25.8)	(23.5)	(20.0)	(16.7)	(14.5)	(21.2)
-	복지분야 기타	(6.3)	(5.0)	(3.6)	(2.8)	(2.3)	(2.1)	(3.7)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무지출 세부내역별로 해당 사업의 특성과 전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지출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지출인 연금급여는 2022년 31.9조원에서 2070년 299.8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급여 수준은 급여 수급자 수와 가입자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 각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값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향후 급여 수급자 수는 20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준소득월액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금급여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기금의 의무지출인 연금급여는 2022년 5.0조원에서 2070년 10.8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급여 수준은 수급자 수와 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준소득월액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므로 지출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의무지출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2022년 20.0조원에서 2070년 36.1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급여는 가입자 수, 공무원보수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최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가입자 수가 2047년에 137.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2070년에는 123.2만명으로 가정하였다. 가입자 수가 감소함에도 공무원의 기대수명 개선 등으로 수급자 수는 207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인상되어 지출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기금의 의무지출인 군인연금급여는 2022년 3.7조원에서 2070년 7.2조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급여는 가입자 수, 공무원보수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인구감소의 영향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력 유지를 위하여 군인 수는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2025년 188,800명까지 증가하고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며, 수급자 수는 군인의 기대수명 개선 등으로 207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고 수급자의 연금액

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어 지출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급여지출이 해당된다.

건강보험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및 국가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²⁴⁾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²⁵⁾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국고지원금은 동반 상승한다. 전망 결과,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2년 11.8조원에서 2070년 16.1조원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수입액²⁶⁾의 보험료율이 2028년에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후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무지출은 국고지원금과 공무원·교원의 보험료 중 국가부담분, 타법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지출금액 등으로 2022년 2.0조원에서 2070년 3.4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에 대한 국고지원금(보험료 수입의 20%)이 차지하는데, 보험료 예상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치 증가에 따라 늘어나므로 이와 연동된 국고지원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도 동반 증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수입에 기초가 되는 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인 건강보험료의 12.27%가 동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용보험기금의 의무지출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2년 13.6조원에서 2070년 21.3조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장기적으로 실업자 수의 일정 비율로 수렴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재보험기금의 의무지출인 산재보험급여는 2022년 6.9조원에서 2070년 13.0조원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급여의 지출 수준은 산재

24) 건강보험은 사업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편성되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지만, 보험료 수입에 연동한 국고지원금(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과 국가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건강보험의 의무지출 항목이다.

2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8%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6) 2070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141조원(2022년 불변가격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재해율은 장기적으로 그 추세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재해자 수가 감소함에도 적용근로자 수가 203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고, 명목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므로 지출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공공부조에 포함되는 의무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영아수당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주거·교육·재산장제급여 등이 있는데, 2022년 15.7조원에서 2070년 31.6조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출 수준은 지원대상자 수와 지급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는 2022년 5,163만명에서 2070년 3,766만명으로, 가구는 2022년 2,157만 가구에서 2070년 1,845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초·중·고 학령인구인 7~18세 인구는 2039년 316만명까지 감소하다가 2050년 364만명까지 증가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등의 요인으로 단가가 높아지므로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2022년 16.1조원에서 2070년 35.1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급여의 지출 수준은 노인인구 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료는 2022년 3.2조원에서 2070년 2.5조원으로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보육료의 지출 수준은 0~2세 영유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0~2세 인구는 2025년 71만명까지 감소하다가 2036년 96만명까지 증가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1년에 54만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출 규모도 2022년 3.2조원에서 2040년 3.6조원으로 증가하고, 2060년 2.3조원까지 감소한 뒤 2070년 2.5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27) 산재보험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해율이 감소함에도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장해연금·유족연금 등 연금성 급여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산재보험급여 중 연금급여의 비중은 2021년 실적 기준으로 38.4%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 40%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영아수당(영아수당은 2022년 신설)은 2022년 2.7조원에서 2070년 2.5조원으로 연평균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영아수당의 지출 수준은 지원대상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지원대상 아동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끝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기타는 일부 전망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행 수준(GDP 대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보훈급여의 경우 2022년 4.9조원에서 2070년 4.1조원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급여 지출은 보훈급여대상자 수 및 보상금 단가 증가율 등의 영향이 크데, 보훈급여 대상자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상금 단가 증가율은 2030년까지는 최근 5년간 증가율로 증가하고 이후는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²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²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수입 중 내국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망 결과, 지방이전재원은 2022년 165.7조원에서 2070년 231.5조원으로 연평균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⁰⁾

28)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2년 12월 31일 일몰) 전입액(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30) 다만, 2022년의 경우 2022년 4월에 이루어진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금액(11.2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고채권에 대한 이자와 주택도시 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공채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타 이자지출로 구성된다. 기타 이자지출에는 청약저축에 대한 이자, 우체국예금에 대한 이자, 중소기업진흥채권에 대한 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전망 결과, 이자지출은 2022년 18.8조원에서 2070년 136.1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가 매년 누적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가 누적 합산되어 증가하면서 이자지출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망 결과, 기타 의무지출은 2022년 14.4조원에서 2070년 12.0조원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³¹⁾에 따라 관련 재정소요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만 발생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6.4조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망하고, 2023년 이후에는 관련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표 21]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기타항목(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GDP 대비 비율)	165.7 (7.6)	164.9 (6.5)	187.3 (6.4)	205.6 (6.3)	218.7 (6.3)	231.5 (6.2)	0.7
이자지출 (GDP 대비 비율)	18.8 (0.9)	39.3 (1.5)	53.3 (1.8)	75.9 (2.3)	104.3 (3.0)	136.1 (3.7)	4.2
기타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14.4 (0.7)	8.3 (0.3)	9.5 (0.3)	10.5 (0.3)	11.3 (0.3)	12.0 (0.3)	-0.4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재량지출

시나리오1에서 재량지출은 2022년 349.4조원(GDP 대비 16.1%)에서 2070년 473.9조원(GDP 대비 12.8%)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에서 재량지출 금액은 2022년의 경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으로 하고, 2023~2025년의 재량지출은 최근 중기계획(「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9.)의 2023~2025년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다. 중기계획을 반영한 후에는 5년 기간 동안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서서히 조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장기 수렴 수준은 재량지출의 2012~2022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으로 가정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수준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였다.

[표 22]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349.4 (16.1)	326.6 (12.8)	373.4 (12.8)	414.7 (12.8)	446.8 (12.8)	473.9 (12.8)	0.6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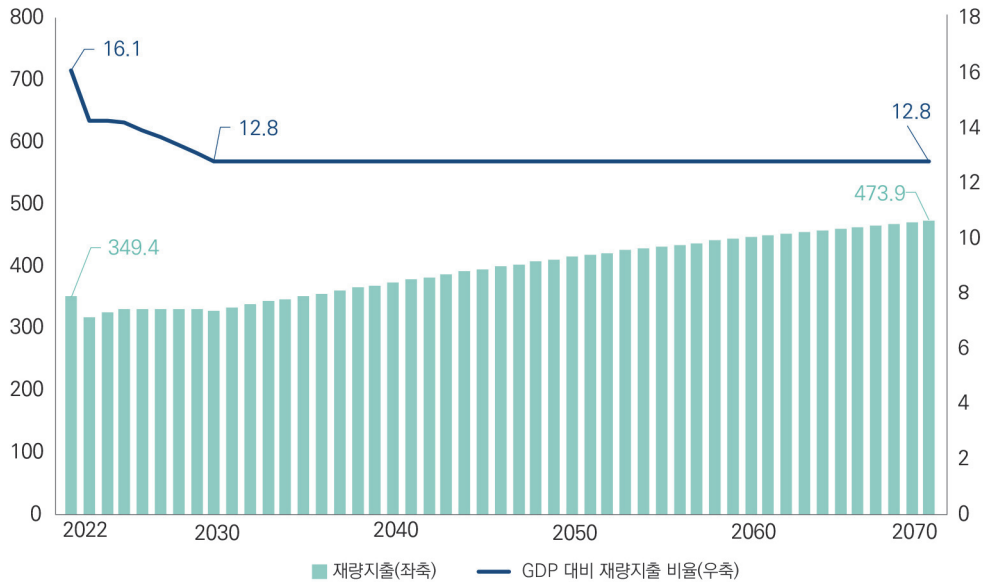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3] 재량지출 전망 방법(시나리오1)

	주요 내용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23년 323.0조원, '24년 336.2조원, '25년 348.4조원) ○ 2026~2030년: 장기 수렴 수준* 으로 서서히 조정 *장기 수렴 수준은 재량지출의 2012~2022년 GDP 대비 비율의 평균(12.8%) ○ 2031년~: 장기 수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명목GDP 성장률로 증가)

[그림 18]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시나리오1)

(단위: 조원, GDP 대비 %)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재정수지

(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0조원에서 2070년 458.7조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은 2022년 4.0%에서 2070년 12.4%로 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총지출 증가율(1.4%)이 총 수입 증가율(0.8%)보다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는 2022년 41.0조원 흑자이지만 점차 감소하여 2043년 적자로 전환되고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209.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적자 증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연평균 0.6% 증가하는데 반해 지출은 연평균 3.6% 증가함에 따라 지출의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2.9%p 높은 것에 기인한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민연금기금인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때(2043년)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수지도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커짐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전체의 적자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2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03.9	688.8	775.3	805.6	831.0	883.1	0.8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8)	(23.8)	(23.8)	
총지출	689.9	739.6	905.8	1,073.0	1,215.8	1,341.9	1.4
(GDP 대비 비율)	(31.8)	(29.0)	(31.0)	(33.1)	(34.8)	(36.2)	
통합재정수지	-86.0	-50.8	-130.5	-267.4	-384.8	-458.7	
(GDP 대비 비율)	(-4.0)	(-2.0)	(-4.5)	(-8.2)	(-11.0)	(-12.4)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107.1	157.2	175.1	147.7	132.4	146.0	0.6
(GDP 대비 비율)	(4.9)	(6.2)	(6.0)	(4.6)	(3.8)	(3.9)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66.1	97.0	158.3	231.8	300.0	355.1	3.6
(GDP 대비 비율)	(3.0)	(3.8)	(5.4)	(7.1)	(8.6)	(9.6)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	41.0	60.1	16.8	-84.1	-167.6	-209.1	
(GDP 대비 비율)	(1.9)	(2.4)	(0.6)	(-2.6)	(-4.8)	(-5.6)	
관리재정수지	-127.0	-111.0	-147.3	-183.3	-217.2	-249.6	
(GDP 대비 비율)	(-5.8)	(-4.3)	(-5.0)	(-5.7)	(-6.2)	(-6.7)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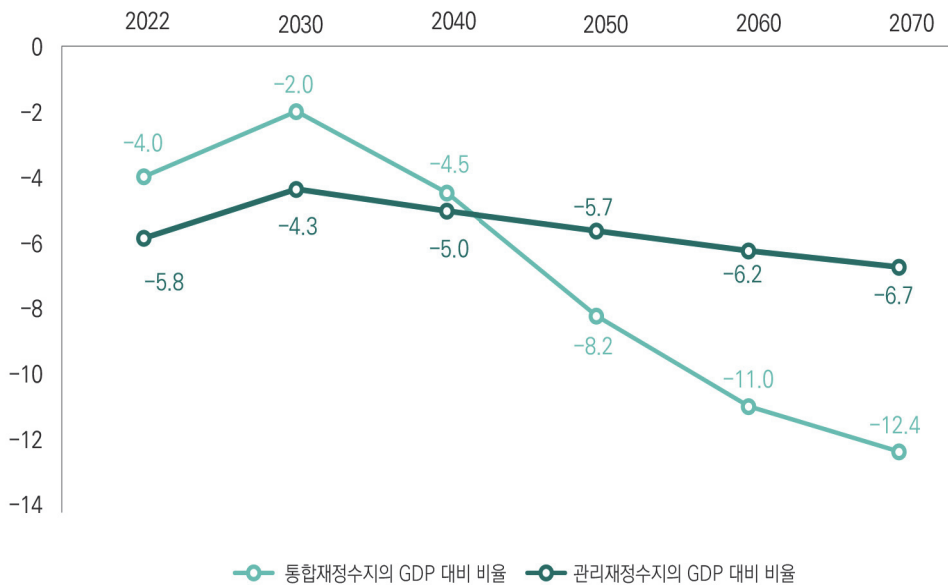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27.0조원에서 2070년 249.6조원으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

로 전망된다.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그 이후 소폭 등락을 보인 뒤 2030년 4.3%에서 2070년 6.7%까지 최대 6%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은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에 비해 적자폭이 더 크지만 2043년 이후에는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가 204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9]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시나리오1)

(단위: GDP 대비 %)



주: 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재정총량 지표이다. 당시에는 제도 도입 초기였던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지출이 본격화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았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하는 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전망 결과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산출과정에서 차감항목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3년부터는 오히려 통합재정수지가 관리재정수지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전망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가 제외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로 일정 수준이 유지되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70년에 12.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가 2022년 1.9% 흑자에서 2043년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0년에는 GDP 대비 5.6%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나)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두 수지의 차이는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의 크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	41.0	60.1	16.8	-84.1	-167.6	-209.1
(GDP 대비 비율)	(1.9)	(2.4)	(0.6)	(-2.6)	(-4.8)	(-5.6)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43.3	58.4	15.7	-85.6	-170.3	-213.3
(GDP 대비 비율)	(2.0)	(2.3)	(0.5)	(-2.6)	(-4.9)	(-5.8)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0.8	-0.3	-2.9	-5.3	-6.9	-7.7
(GDP 대비 비율)	(-0.0)	(-0.0)	(-0.1)	(-0.2)	(-0.2)	(-0.2)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2.5	0.3	1.7	3.7	5.8	7.4
(GDP 대비 비율)	(-0.1)	(0.0)	(0.1)	(0.1)	(0.2)	(0.2)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8.6	9.9	11.8	12.9	13.8	14.8
(GDP 대비 비율)	(0.4)	(0.4)	(0.4)	(0.4)	(0.4)	(0.4)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수지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는 2022년 41.0조원 흑자로 GDP 대비 1.9%이지만, 2043년 적자 전환 이후 2050년 84.1조원(GDP 대비 2.6%) 적자에서 2070년 209.1조원(GDP 대비 5.6%) 적자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가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된 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2022년 76.0조원에서 2070년 87.6조원으로 연평균 0.3% 증가하고, 지출은 2022년 32.7조원에서 2070년 300.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수입은 2022년 3.5%에서 2070년 2.4%로 감소하고 지출은 2022년 1.5%에서 2070년 8.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이후 적자 규모는 2070년 213.3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NABO 장기 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기금 수입	76.0	118.1	130.7	98.4	78.7	87.6	0.3
(GDP 대비 비율)	(3.5)	(4.6)	(4.5)	(3.0)	(2.3)	(2.4)	
국민연금기금 지출	32.7	59.8	115.0	183.9	249.0	300.9	4.7
(GDP 대비 비율)	(1.5)	(2.3)	(3.9)	(5.7)	(7.1)	(8.1)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43.3	58.4	15.7	-85.6	-170.3	-213.3	
(GDP 대비 비율)	(2.0)	(2.3)	(0.5)	(-2.6)	(-4.9)	(-5.8)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학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입은 2022년 5.4조원에서 2070년 3.4조원으로 연평균 0.9% 감소하고, 지출은 2022년 6.1조원에서 2070년 11.2조원으로 연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사학연금기금 수입은 2022년 0.2%에서 2070년 0.1%로 감소하고 지출은 2022년 0.28%에서 2070년 0.30%로 상승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는 2020년대 일시적인 적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2030년부터 적자가 지속되어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7.7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사학연금기금 수입	5.4	6.3	5.2	4.3	3.8	3.4	-0.9
(GDP 대비 비율)	(0.2)	(0.2)	(0.2)	(0.1)	(0.1)	(0.1)	
사학연금기금 지출	6.1	6.6	8.1	9.7	10.8	11.2	1.3
(GDP 대비 비율)	(0.3)	(0.3)	(0.3)	(0.3)	(0.3)	(0.3)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0.8	-0.3	-2.9	-5.3	-6.9	-7.7	
(GDP 대비 비율)	(-0.0)	(-0.0)	(-0.1)	(-0.2)	(-0.2)	(-0.2)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2022년 16.1조원에서 2070년 35.7조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하고, 지출은 2022년 18.6조원에서 2070년 28.3조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수입은 2022년 0.7%에서 2070년 1.0%로 증가하고, 지출은 0.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장기적으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추세가 나타나 2070년 재정수지는 7.4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0.2%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8] NABO 장기 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고용보험기금 수입	16.1	21.1	25.2	29.0	32.3	35.7	1.7
(GDP 대비 비율)	(0.7)	(0.8)	(0.9)	(0.9)	(0.9)	(1.0)	
고용보험기금 지출	18.6	20.8	23.5	25.3	26.5	28.3	0.9
(GDP 대비 비율)	(0.9)	(0.8)	(0.8)	(0.8)	(0.8)	(0.8)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2.5	0.3	1.7	3.7	5.8	7.4	
(GDP 대비 비율)	(-0.1)	(0.0)	(0.1)	(0.1)	(0.2)	(0.2)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재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수입은 2022년 9.6조원에서 2070년 19.3조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고, 지출은 2022년 8.6조원에서 2070년 14.8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수입은 2022년 0.4%에서 2070년 0.5%로 증가하고, 지출은 0.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흑자 상태가 지속되며, 2070년 재정수지는 4.5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0.1%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9] NABO 장기 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기금 수입	9.6	11.7	14.0	16.0	17.7	19.3	1.5
(GDP 대비 비율)	(0.4)	(0.5)	(0.5)	(0.5)	(0.5)	(0.5)	
산재보험기금 지출	8.6	9.9	11.8	12.9	13.8	14.8	1.1
(GDP 대비 비율)	(0.4)	(0.4)	(0.4)	(0.4)	(0.4)	(0.4)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1.0	1.8	2.3	3.1	3.9	4.5	
(GDP 대비 비율)	(0.0)	(0.1)	(0.1)	(0.1)	(0.1)	(0.1)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2%)에서 2070년 7,137.6조원(GDP 대비 192.6%)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채무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분되고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인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당해연도 국가채무에 누적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³²⁾ 금융성 채무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중앙정부 채무는 2022년 1,037.7조원(GDP 대비 47.8%)에서 2070년 7,084.6조원(GDP 대비 191.2%)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주요인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2년 127.0조원에서 2070년 249.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향후 추세를 전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GDP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2022년에 31.1조원에서 2070년 53.1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표 30] NABO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시나리오1)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1,068.8	1,842.6	2,939.1	4,215.1	5,624.7	7,137.6	4.0
(GDP 대비 비율)	(49.2)	(72.1)	(100.7)	(130.0)	(161.0)	(192.6)	
- 중앙정부 채무	1,037.7	1,806.0	2,897.3	4,168.6	5,574.7	7,084.6	4.1
(GDP 대비 비율)	(47.8)	(70.7)	(99.2)	(128.6)	(159.6)	(191.2)	
- 지방정부 순채무	31.1	36.6	41.8	46.4	50.0	53.1	1.1
(GDP 대비 비율)	(1.4)	(1.4)	(1.4)	(1.4)	(1.4)	(1.4)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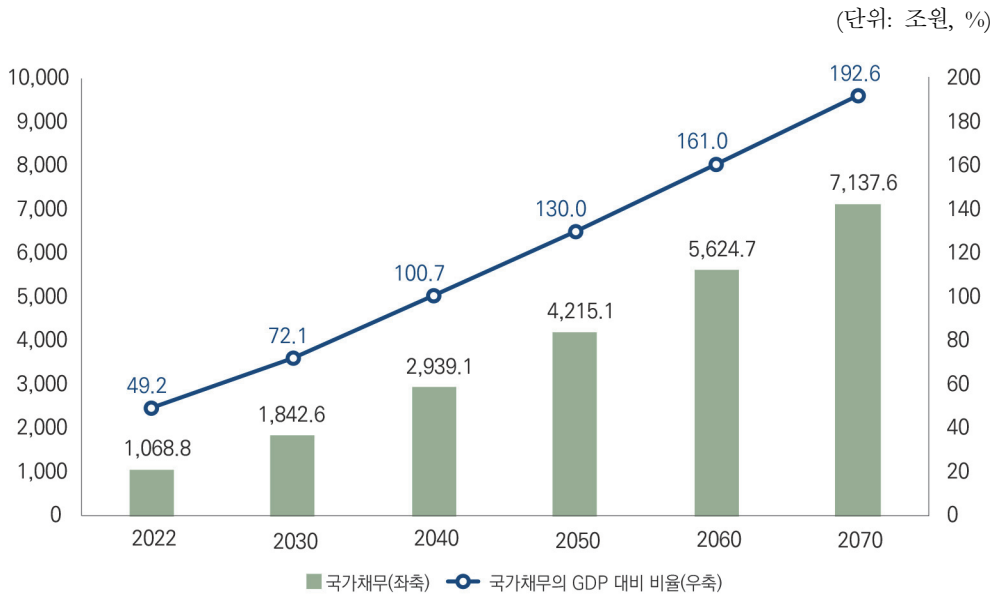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2) 2010~2021년 실적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누적) 대비 일반회계 적자보전 증가분(누적)의 평균 비율은 96.3% 수준이다.

[표 31] 국가채무 주요 가정

항 목	주요 가정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 적자성 채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만큼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
	- 금융성 채무: 2022년 GDP 대비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
	○ 지방정부 순채무
- 2022년 GDP 대비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	

[그림 20]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전망(시나리오1)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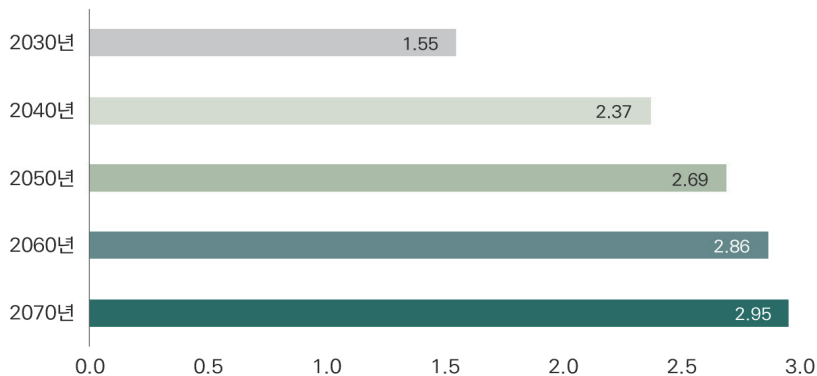
[참고] 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을 위한 관리재정수지 개선 규모

- 203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매년 GDP 대비 1.55%p의 관리재정수지 개선 필요
 - 목표 국가채무 비율과 해당 비율의 달성 시점은 거시경제 및 재정 상황,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동 예시는 기준 시점에서의 국가채무 비율 추이*를 고려
 - *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9.)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 비율은 58.8%로 예상되며, 본 보고서의 전망 결과에서는 2026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0% 초과할 것으로 전망
 - 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면 관리재정수지 개선 노력은 더욱 요구
 - 2040년까지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려면 매년 평균적으로 GDP 대비 2.37%p, 2070년까지 해당 비율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2.95%p의 관리재정수지 개선 필요

[국가채무 비율 60% 유지를 위해 필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개선 비율]

목표연도

(단위: GDP 대비 %p)



주: 1. 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2. 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을 위한 재정수지 개선 규모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2020.9.)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시나리오2³³⁾

시나리오2는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2070년 재량지출이 시나리오1보다 39.0조원 낮은 434.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70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1.1%p 낮은 11.7%로 예상된다.³⁴⁾ 재량지출 규모가 시나리오1보다 낮으므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개선된다. 2070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42.8%p 낮은 149.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2)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GDP 대비 비율)	603.9 (27.8)	688.8 (27.0)	775.3 (26.6)	805.6 (24.8)	831.0 (23.8)	883.1 (23.8)	0.8	2.4
총지출 (GDP 대비 비율)	689.9 (31.8)	711.3 (27.8)	867.5 (29.7)	1,024.4 (31.6)	1,156.4 (33.1)	1,270.8 (34.3)	1.3	2.9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0.5 (49.4) (15.7)	411.5 (57.9) (16.1)	524.8 (60.5) (18.0)	643.9 (62.9) (19.9)	746.4 (64.5) (21.4)	835.9 (65.8) (22.6)	1.9	3.6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9.4 (50.6) (16.1)	299.8 (42.1) (11.7)	342.7 (39.5) (11.7)	380.6 (37.1) (11.7)	410.0 (35.5) (11.7)	434.9 (34.2) (11.7)	0.5	2.1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86.0 (-4.0)	-22.5 (-0.9)	-92.2 (-3.2)	-218.8 (-6.7)	-325.4 (-9.3)	-387.6 (-10.5)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7.0 (-5.8)	-82.6 (-3.2)	-109.0 (-3.7)	-134.7 (-4.2)	-157.8 (-4.5)	-178.5 (-4.8)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1,068.8 (49.2)	1,762.5 (69.0)	2,555.1 (87.5)	3,477.1 (107.2)	4,485.7 (128.4)	5,552.0 (149.9)	3.5	5.2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3) 시나리오2부터 시나리오4까지는 재량지출 전망에 대한 가정이므로 총수입 전망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이하에서는 시나리오1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부분(재량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한정하여 서술한다. 다만, 의무지출 중 이자지출은 재량지출 수준에 따라 국가채무가 달라지므로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있다.

34) [표 12]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인구 중위 기준) 참조

다. 시나리오3

시나리오3은 재량지출이 정부의 중기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5년의 실질 규모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통제되는 시나리오로 2070년 재량지출이 시나리오1보다 113.5조원 낮은 360.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70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3.1%p 낮은 9.7%로 예상된다.³⁵⁾ 장기적으로 재량지출의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되므로 시나리오1 또는 시나리오2에 비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개선된다. 2070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73.7%p 낮은 119.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3)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GDP 대비 비율)	603.9 (27.8)	688.8 (27.0)	775.3 (26.6)	805.6 (24.8)	831.0 (23.8)	883.1 (23.8)	0.8	2.4
총지출 (GDP 대비 비율)	689.9 (31.8)	746.4 (29.2)	869.7 (29.8)	991.7 (30.6)	1,091.7 (31.3)	1,173.8 (31.7)	1.1	2.8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0.5 (49.4) (15.7)	413.2 (55.4) (16.2)	530.0 (60.9) (18.2)	645.2 (65.1) (19.9)	738.3 (67.6) (21.1)	813.4 (69.3) (22.0)	1.8	3.5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9.4 (50.6) (16.1)	333.1 (44.6) (13.0)	339.7 (39.1) (11.6)	346.5 (34.9) (10.7)	353.4 (32.4) (10.1)	360.4 (30.7) (9.7)	0.1	1.7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86.0 (-4.0)	-57.5 (-2.3)	-94.4 (-3.2)	-186.1 (-5.7)	-260.7 (-7.5)	-290.7 (-7.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7.0 (-5.8)	-117.7 (-4.6)	-111.2 (-3.8)	-102.0 (-3.1)	-93.1 (-2.7)	-81.6 (-2.2)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1,068.8 (49.2)	1,857.9 (72.7)	2,791.4 (95.6)	3,515.4 (108.4)	4,044.9 (115.8)	4,408.3 (119.0)	3.0	4.7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5) [표 12]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인구 중위 기준) 참조

라. 시나리오4

시나리오4는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로 통제하고 재량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수준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로 2070년 재량지출이 시나리오1보다 172.1조원 낮은 301.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70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4.6%p 낮은 8.1%로 예상된다.³⁶⁾ 의무지출의 증가율이 총지출의 증가율(명목GDP 성장률)보다 높으므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낮아져 2070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시나리오1보다 115.3%p 낮은 77.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 시나리오 중 2070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표 3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시나리오4)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GDP 대비 비율)	603.9 (27.8)	688.8 (27.0)	775.3 (26.6)	805.6 (24.8)	831.0 (23.8)	883.1 (23.8)	0.8	2.4
총지출 (GDP 대비 비율)	689.9 (31.8)	745.5 (29.2)	852.2 (29.2)	946.3 (29.2)	1,019.6 (29.2)	1,081.4 (29.2)	0.9	2.6
-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0.5 (49.4) (15.7)	412.6 (55.3) (16.2)	527.3 (61.9) (18.1)	636.6 (67.3) (19.6)	719.4 (70.6) (20.6)	779.7 (72.1) (21.0)	1.7	3.4
-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율)	349.4 (50.6) (16.1)	332.9 (44.7) (13.0)	324.9 (38.1) (11.1)	309.7 (32.7) (9.6)	300.1 (29.4) (8.6)	301.7 (27.9) (8.1)	-0.3	1.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86.0 (-4.0)	-56.6 (-2.2)	-76.9 (-2.6)	-140.8 (-4.3)	-188.6 (-5.4)	-198.3 (-5.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7.0 (-5.8)	-116.8 (-4.6)	-93.7 (-3.2)	-56.7 (-1.7)	-21.0 (-0.6)	10.9 (0.3)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1,068.8 (49.2)	1,858.0 (72.7)	2,720.4 (93.2)	3,151.5 (97.2)	3,189.0 (91.3)	2,864.5 (77.3)	2.1	3.7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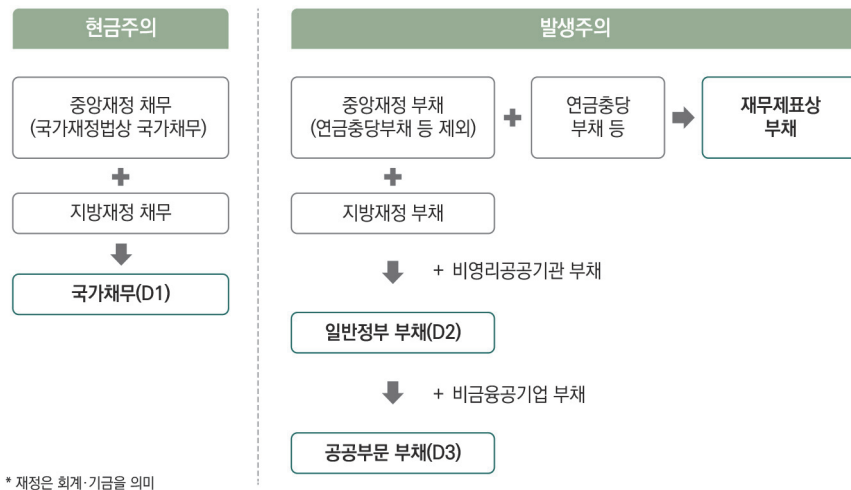
36) [표 12]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인구 중위 기준) 참조

[참고] 일반정부 부채(D2): 2020년 기준

- 정부는 국가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유형	2020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846.6조원 (43.8%)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945.1조원 (48.9%)	D1 + 비영리공공 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280.0조원 (66.2%)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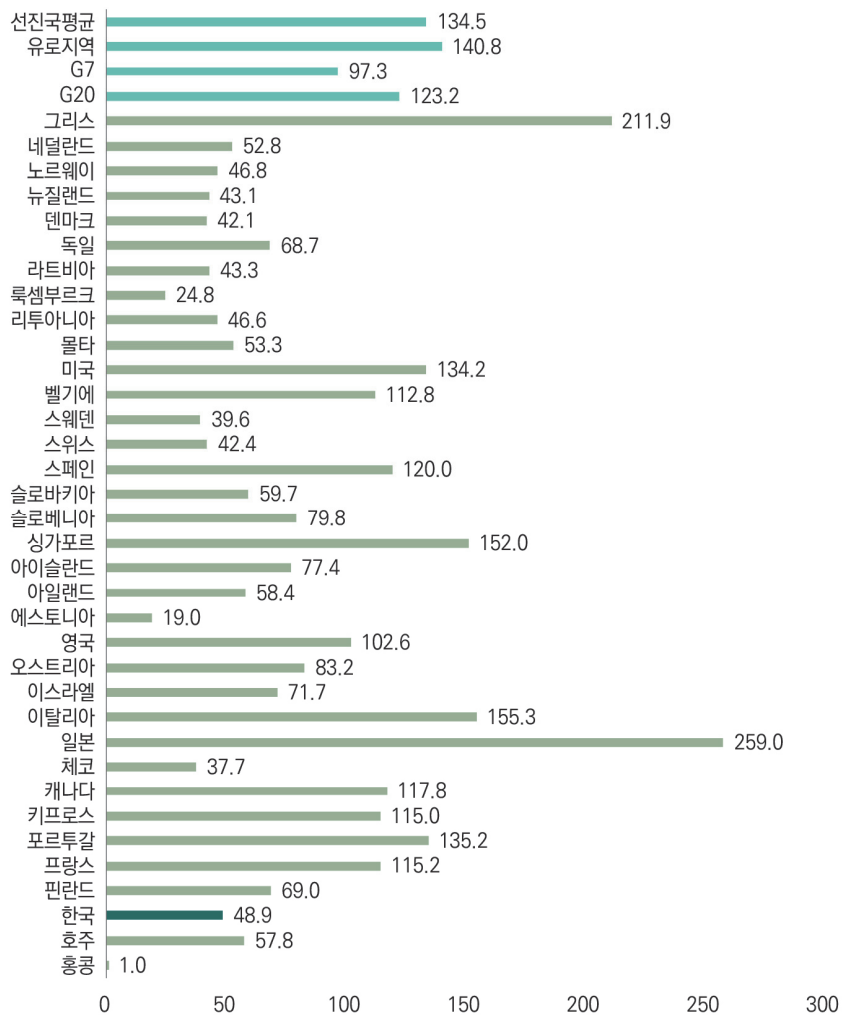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Vol. 102, 2022. 7.

[참고]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2020년 기준

-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ies) 일반정부 부채 비율 현황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괄
 - 장기 재정전망의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이며, 포괄범위 상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2. 4.

3.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³⁷⁾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사회보장성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지출 수준을 낮추는 수입·지출 조정, 또는 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보전과 같은 ‘제도변화’를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현재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지만 전망기간 동안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재정수지 및 적립금 규모 등에 대한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NABO의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기금 전망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NABO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그리고 정부가 2018년 수행한 「제4차 재정계산」의 기초율과 2021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수급 실적치 등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³⁸⁾ 전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2042년까지 흑자가 지속되어 누적 적립금은 2042년에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경상가격 기준 1,905.9조원, 불변가격 1,363.2조원). 그러나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적립금은 점차 감소하여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³⁹⁾

37) 고용보험기금은 재정전망 초반에 적자를 보이나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산재보험기금 역시 흑자 추세가 계속 유지되어 적립금이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38) 정부는 2023년에 「제5차 재정계산」을 수행할 계획인데, 가입자 유형별 이동률, 유유족률 등의 기초율이 「제4차 재정계산」과 달라질 경우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3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을 각각 2039년과 2055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전망과 비교하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4년과 2년 늦춰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2021년에 실현된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0년 장기 재정전망의 경우 2019년 적립금 규모가 736.7조원이었으나 최근 기금운용수익 증가로 2021년에 948.7조원으로 212.1조원 증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이 31.5조원(내부거래 포함)임을 감안할 때 최근 적립금 증가 규모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과 적립금 소진 시점을 늦출 정도의 규모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35]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조원, %)

	수입(A)	지출(B)	재정수지 (A - B)	적립금			
				GDP 대비	불변가격	경상가격	GDP 대비
2022	76.0	32.7	43.3	(2.0)	956.9	956.9	(44.1)
2030	118.2	59.8	58.4	(2.3)	1,232.5	1,416.0	(48.3)
2040	130.9	115.0	15.9	(0.5)	1,393.3	1,887.2	(47.7)
2042	131.7	128.1	3.6	(0.1)	1,363.2	1,905.9	(45.6)
2050	99.0	183.9	-84.9	(-2.6)	842.1	1,336.8	(26.0)
2057	81.3	228.0	-146.7	(-4.3)	-45.2	-80.1	-
2060	80.2	249.0	-168.8	(-4.8)	-	-	-
2070	89.9	300.9	-210.9	(-5.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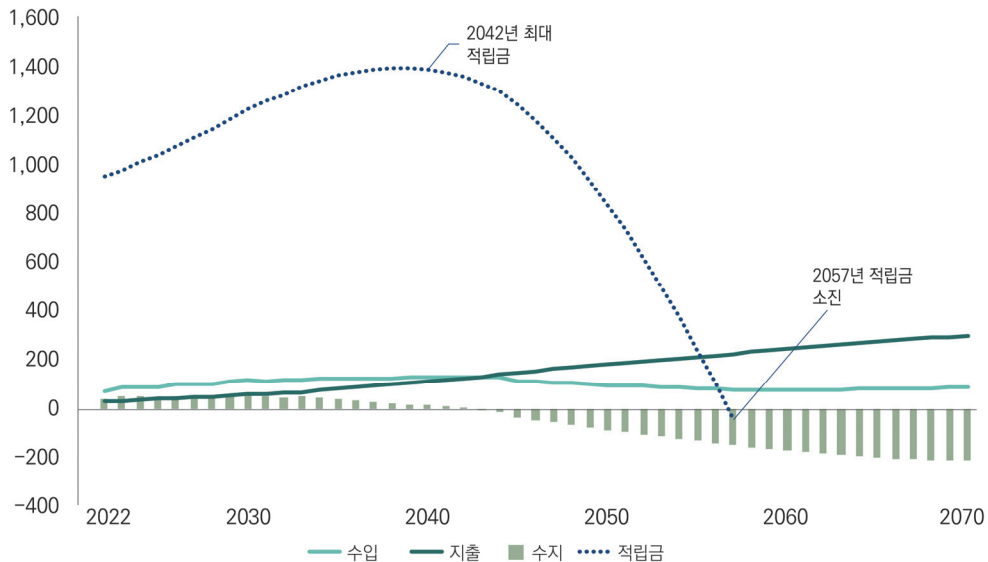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기준(다만, 최대 적립금의 경우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해당 시점이 달라지므로 경상가격 기준)

2. 적립금은 정부의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앞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도 내부거래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1]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조원)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다만, 최대 적립금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음으로,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재정수지 흑자가 2030년까지 지속되어 누적 적립금은 2030년에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경상가격 기준 29.7조원, 불변가격 25.9조원). 그러나 2031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적립금은 점차 감소하여 204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⁴⁰⁾⁴¹⁾

[표 36] 사학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조원, %)

	수입(A)	지출(B)	재정수지 (A - B)		적립금		
				GDP 대비	불변가격	경상가격	GDP 대비
2022	6.3	6.2	0.1	(0.00)	24.5	24.5	(1.13)
2030	6.8	6.6	0.2	(0.01)	25.9	29.7	(1.01)
2040	5.8	8.1	-2.3	(-0.08)	12.7	17.2	(0.43)
2045	5.2	9.0	-3.8	(-0.10)	-3.6	-5.3	-
2050	5.1	9.7	-4.6	(-0.14)	-	-	-
2060	4.4	10.8	-6.4	(-0.18)	-	-	-
2070	4.0	11.2	-7.2	(-0.19)	-	-	-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기준(다만, 최대 적립금의 경우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해당 시점이 달라지므로 경상가격 기준)

2. 적립금은 정부의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앞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도 내부거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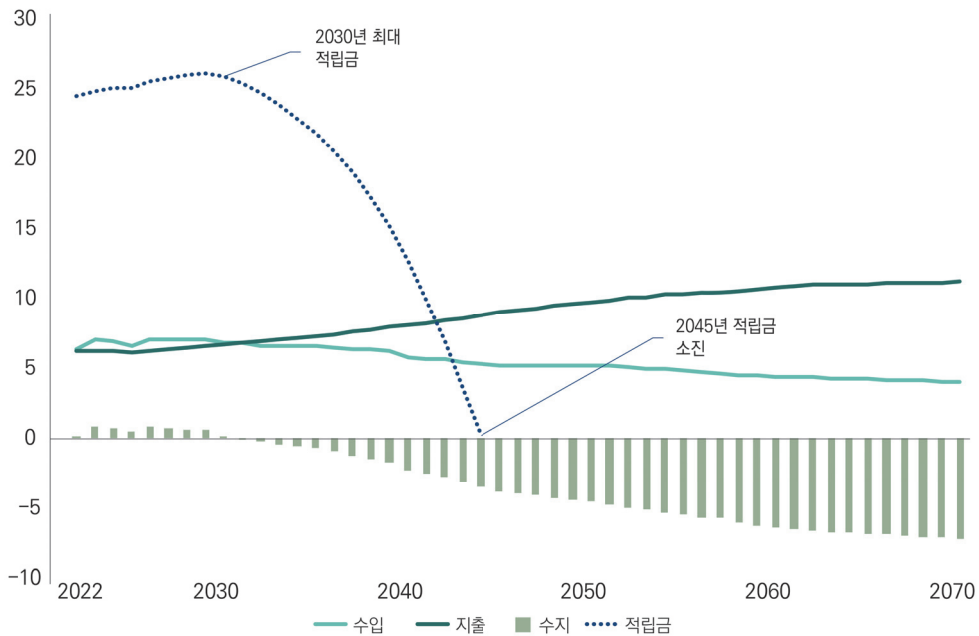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0)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33년, 적립금 소진 시점을 2048년으로 각각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전망과 비교하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은 각각 2년과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수 전망치가 2020년 장기 재정전망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의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직원 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의 학령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전망 시 고려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학령인구가 2020년 전망 시 고려한 2019년 장래인구추계의 학령인구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가 더 적게 전망되었다. 반면, 기존 가입자 및 퇴직자 수는 두 전망 시점 사이에 큰 변화가 없어 연금수급자 수는 2020년 전망과 2022년 전망에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이번 전망 시 고려한 사학연금기금의 2021년 말 적립금 규모(25.8조원)는 2020년 전망 시 고려한 2019년 말 적립금 규모(20.5조원)보다 5.3조원 더 많다. 그러나 2022년 기금운용계획 상의 지출액이 5.7조원(내부거래 포함)임을 감안할 때 향후 가입자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근 적립금 규모의 증가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사학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조원)



주: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다만, 최대 적립금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는데 적립금 소진 이후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70년 기준으로 GDP 대비 6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소진 이후 207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275.5조원(2022년 불변가격)으로 GDP 대비 6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학연금기금은 적립금 소진 이후 207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26.1조원(2022년 불변가격)으로 GDP 대비 3.4%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향후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급여 수준 조정 등 수입확충과 지출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⁴²⁾

42)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중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37]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인구 중위 기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국민연금	0.0 (0.0)	0.0 (0.0)	0.0 (0.0)	0.0 (0.0)	522.6 (15.0)	2,275.5 (61.4)
사학연금	0.0 (0.0)	0.0 (0.0)	0.0 (0.0)	24.1 (0.7)	72.7 (2.1)	126.1 (3.4)
합 계	0.0 (0.0)	0.0 (0.0)	0.0 (0.0)	24.1 (0.7)	595.4 (17.0)	2,401.6 (64.8)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는 GDP 대비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국민부담률 장기전망(인구 중위 가정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 기준)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22년 31.0%, 2070년 28.6%로 전망
 - 국민부담률(%): (총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명목GDP
(지방세의 경우 2021년 GDP 대비 비율[5.4%] 유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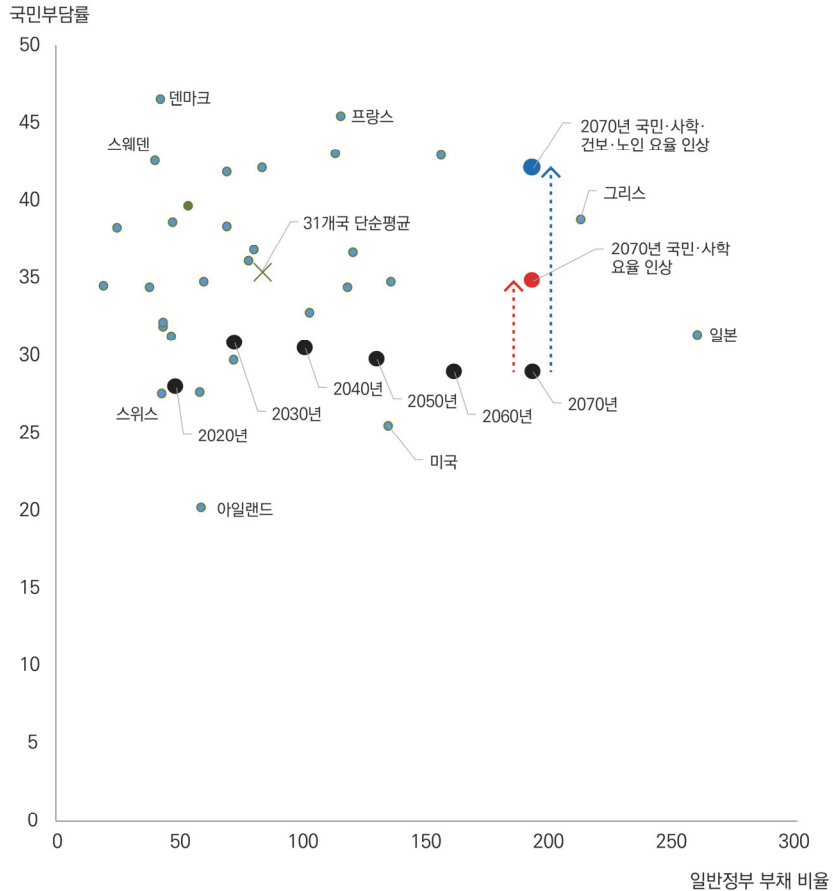
-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국민연금 기금, 사학연금기금 등의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보험료율의 인상 등을 가정하지 않음

- 다만,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70년에 34.8%로 높아질 전망
 - 이는 2020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33.5%)보다 1.3%p 높은 수준
 - 호주와 일본의 경우 2019년 자료 기준

- 추가적으로 각각 2032년, 2026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70년에 42.0%로 상승할 전망
 - 2020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이 40%를 넘는 OECD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OECD 주요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일반정부 부채 비율 현황]

(단위: GDP 대비 %)



- 주. 1. 국민부담률 자료는 OECD, 일반정부 부채(D2) 자료는 IMF에 근거(2020년 기준)
- 2. 녹색 작은 점(●)은 국민부담률과 일반정부 부채(D2) 자료가 모두 있는 31개국의 자료이며, 평균은 31개국 기준 단순평균
- 3. 검정색 큰 점(●)은 이번 장기 재정전망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및 국가채무 비율(D1)을 의미 (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 4. 빨간색 큰 점(●)은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의 2070년 기준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비율(D1), 파란색 큰 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의 2070년 기준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비율(D1)을 의미

자료: OECD, Tax Revenue Database(Data extracted on 07 Jul 2022 08:52 UTC (GMT) from OECD.Stat); IMF, *Fiscal Monitor*(2022.4.)

IV.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1. 개요

최근 저출생, 인구 고령화 경향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제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인구 전망에 적용되는 주요 변수(출생, 사망, 국제이동)가 중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추계된 인구변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본 장에서는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인 인구에 적용되는 가정을 달리할 경우 장기 재정전망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총인구 수 및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수 추이를 인구추계 시나리오별로 보면, 2070년 기준으로 저위 가정에 따른 총인구 수는 중위(3,766만명)보다 612만명이 적은 3,153만명,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보다 672만명이 많은 4,438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수는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2070년 기준으로 중위(1,737만명)보다 329만명 적은 1,408만명,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보다 358만명이 많은 2,095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수는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2070년 기준으로 중위(1,747만명)보다 184만명 적은 1,563만명,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보다 183만명이 많은 1,931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38] 인구추계 가정별 주요 인구 전망

(단위: 만명)

구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저위	5,158	5,015	4,755	4,333	3,752	3,153
	중위	5,163	5,120	5,019	4,736	4,262	3,766
	고위	5,168	5,244	5,293	5,150	4,805	4,438
생산연령인구	저위	3,665	3,332	2,747	2,220	1,784	1,408
	중위	3,668	3,381	2,852	2,419	2,066	1,737
	고위	3,670	3,431	2,969	2,637	2,365	2,095
고령인구	저위	901	1,287	1,664	1,791	1,718	1,563
	중위	902	1,306	1,724	1,900	1,868	1,747
	고위	902	1,324	1,782	2,006	2,015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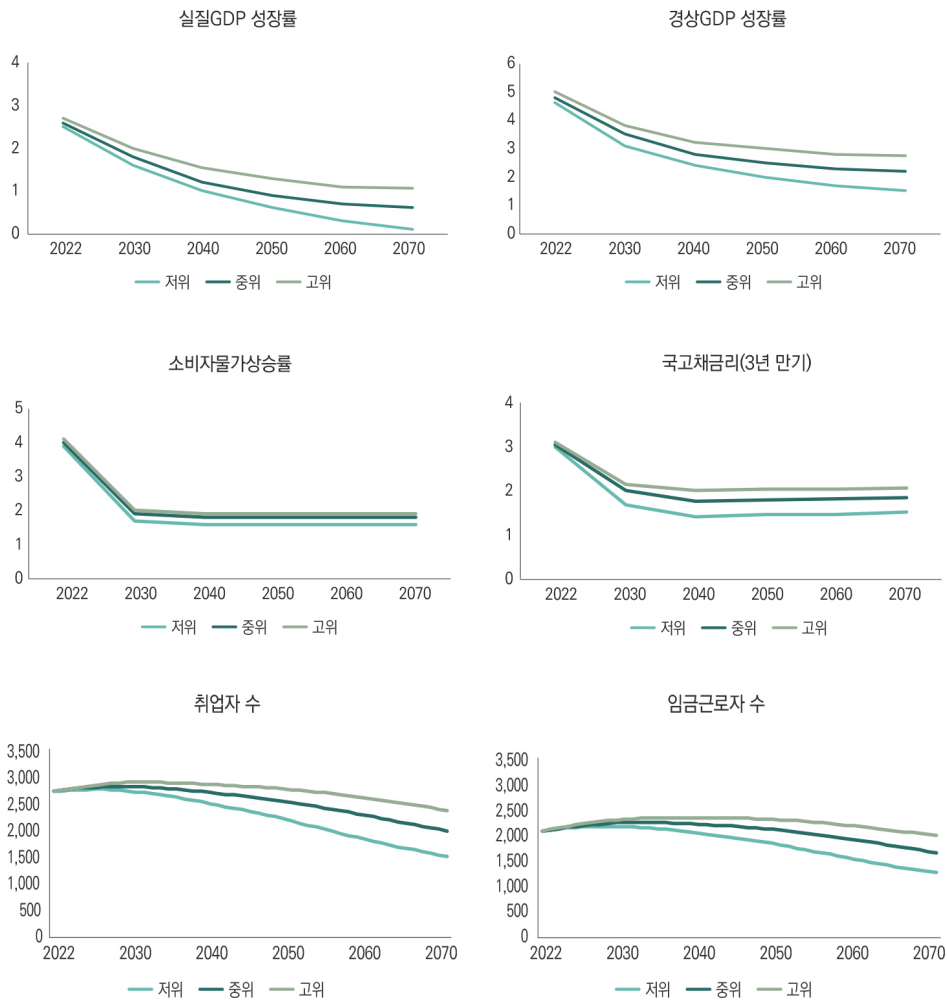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0년이나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2~2070년)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표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이와 같은 인구추계 가정의 변화는 거시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변수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요 변수인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국고채금리(3년 만기) 등의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변화를 보면, 고위 가정을 적용한 경우에 중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취업자 수, 임금근로자 수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취업자 수 및 임금근로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GDP 성장률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명목 국고채 금리(3년 만기) 등 명목 가격지수는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차이가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23] 인구추계 가정별 주요 거시경제변수 비교

(단위: %, 만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2070년 기준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재량지출 시나리오1을 전제로 인구 저위 가정의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192.6%)보다 10.4p%가 높은 203.1%로 전망되며 인구 고위 가정의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보다 8.8p% 낮은 183.9%로 전망된다.⁴³⁾ 국가채무의 금액은 고위 가정이 가장 높으나 인

43) 인구변동요인의 가정이 저위 수준으로 실현될 경우 중위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며, 그 폭이 인구 고위 수준에서 개선되는 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망 중·후반 기간에 인구 저위 수준의 명목GDP 성장률이 중위나 고위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구 가정에 따른 GDP 차이로 국가채무 비율은 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위와 저위의 국가채무 금액의 차이(고위/저위, 1.4배)에 비해 인구 가정에 따른 GDP 차이(고위/저위, 1.5배)가 더 크기 때문이다.⁴⁴⁾

[표 39]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인구 저위 기준 (GDP 대비 비율)	1,068.8 (49.3)	1,833.2 (72.8)	2,867.2 (101.3)	4,025.2 (131.8)	5,272.0 (165.9)	6,557.9 (203.1)	3.9	5.4
인구 중위 기준 (GDP 대비 비율)	1,068.8 (49.2)	1,842.6 (72.1)	2,939.1 (100.7)	4,215.1 (130.0)	5,624.7 (161.0)	7,137.6 (192.6)	4.0	5.7
인구 고위 기준 (GDP 대비 비율)	1,068.8 (49.1)	1,859.6 (71.8)	3,042.6 (99.8)	4,482.3 (127.3)	6,142.4 (155.8)	8,008.6 (183.9)	4.3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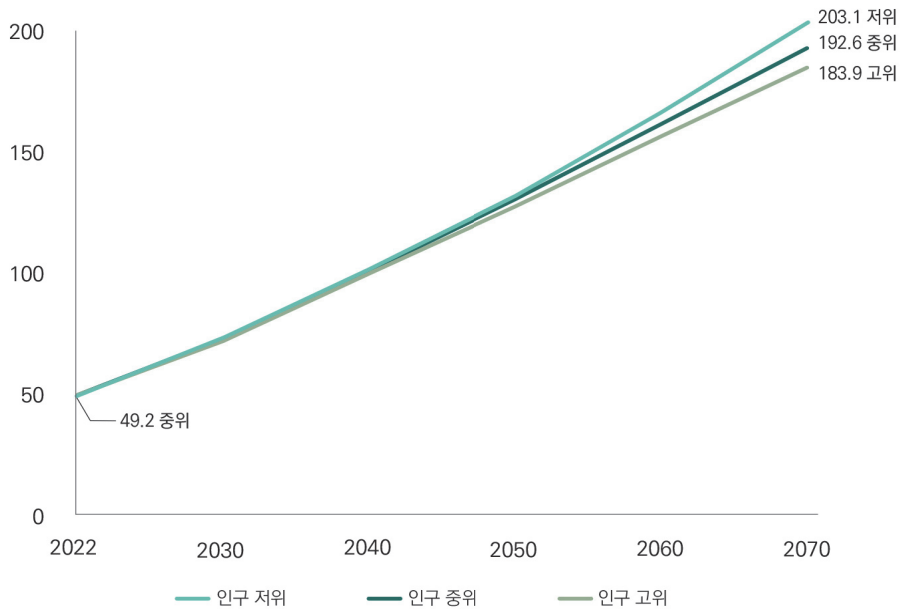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4)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국가채무 금액의 차이와 GDP 차이는 경상가격 기준이다.

[그림 24] 인구추계 가정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⁴⁵⁾

가. 저위 가정

인구추계 가정을 저위로 할 경우 거시경제변수가 중위와 다른 추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도 달라진다. 저위 가정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중위 가정보다 둔화되는데, 이는 취업자 수 둔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차이로 인해 국세수입, 의무지출 등의 증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저위 가정의 GDP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총수입과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중위 가정보다 소폭 상승한다.

45) 인구추계 시나리오(3가지)와 재량지출 시나리오(4가지)의 모든 조합에 대해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인구추계 시나리오는 재량지출 시나리오1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또한, 인구추계 중위 기준 전망 결과는 제3장(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저위 가정과 고위 가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표 40] 인구추계 저위·중위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비교(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인구 저위 기준 (GDP 대비 비율)	604.0 (27.9)	674.5 (26.8)	749.3 (26.5)	763.8 (25.0)	768.0 (24.2)	788.2 (24.4)	0.6	2.0
인구 중위 기준 (GDP 대비 비율)	603.9 (27.8)	688.8 (27.0)	775.3 (26.6)	805.6 (24.8)	831.0 (23.8)	883.1 (23.8)	0.8	2.4
총지출								
인구 저위 기준 (GDP 대비 비율)	689.9 (31.8)	730.4 (29.0)	880.9 (31.1)	1,025.3 (33.6)	1,141.4 (35.9)	1,234.9 (38.2)	1.2	2.7
인구 중위 기준 (GDP 대비 비율)	689.9 (31.8)	739.6 (29.0)	905.8 (31.0)	1,073.0 (33.1)	1,215.8 (34.8)	1,341.9 (36.2)	1.4	3.1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 가정을 저위로 하더라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70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3.8%,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 수준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203.1%로 전망된다.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 고려하는 재량지출 시나리오와 인구추계 시나리오 중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인구추계 저위 가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지출 등 의무지출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여 중위(2.0%)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 41] 인구추계 저위 기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604.0	674.5	749.3	763.8	768.0	788.2	0.6	2.0
(GDP 대비 비율)	(27.9)	(26.8)	(26.5)	(25.0)	(24.2)	(24.4)		
- 국세수입	391.2	414.0	460.8	489.9	501.7	511.5	0.6	2.0
(GDP 대비 비율)	(18.1)	(16.5)	(16.3)	(16.0)	(15.8)	(15.8)		
- 국세외수입	212.8	260.5	288.6	273.9	266.2	276.7	0.5	2.0
(GDP 대비 비율)	(9.8)	(10.4)	(10.2)	(9.0)	(8.4)	(8.6)		
총지출	689.9	730.4	880.9	1,025.3	1,141.4	1,234.9	1.2	2.7
(GDP 대비 비율)	(31.8)	(29.0)	(31.1)	(33.6)	(35.9)	(38.2)		
- 의무지출	340.5	408.6	518.8	634.8	735.1	821.9	1.9	3.3
(총지출 대비 비중)	(49.4)	(55.9)	(58.9)	(61.9)	(64.4)	(66.6)		
(GDP 대비 비율)	(15.7)	(16.2)	(18.3)	(20.8)	(23.1)	(25.4)		
- 재량지출	349.4	321.9	362.0	390.5	406.4	413.0	0.3	1.8
(총지출 대비 비중)	(50.6)	(44.1)	(41.1)	(38.1)	(35.6)	(33.4)		
(GDP 대비 비율)	(16.1)	(12.8)	(12.8)	(12.8)	(12.8)	(12.8)		
통합재정수지	-85.9	-55.9	-131.5	-261.4	-373.5	-446.7		
(GDP 대비 비율)	(-4.0)	(-2.2)	(-4.6)	(-8.6)	(-11.8)	(-13.8)		
관리재정수지	-126.8	-106.3	-135.1	-163.0	-188.1	-208.0		
(GDP 대비 비율)	(-5.9)	(-4.2)	(-4.8)	(-5.3)	(-5.9)	(-6.4)		
국가채무	1,068.8	1,833.2	2,867.2	4,025.2	5,272.0	6,557.9	3.9	5.4
(GDP 대비 비율)	(49.3)	(72.8)	(101.3)	(131.8)	(165.9)	(203.1)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고위 가정

인구추계 가정을 고위로 할 경우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중위 가정보다 높아지는데, 이는 취업자 수 둔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중위 가정보다 약화되어 국세수입, 의무지출 등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 가정의 GDP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총수입과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중위 가정보다 소폭 감소한다.

[표 42] 인구추계 고위·중위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비교(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인구 고위 기준	604.2	699.2	811.3	867.5	921.3	1,014.5	1.1	2.8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6)	(23.4)	(23.3)		
인구 중위 기준	603.9	688.8	775.3	805.6	831.0	883.1	0.8	2.4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8)	(23.8)	(23.8)		
총지출								
인구 고위 기준	690.0	750.9	942.1	1,147.5	1,334.8	1,515.0	1.7	3.4
(GDP 대비 비율)	(31.7)	(29.0)	(30.9)	(32.6)	(33.9)	(34.8)		
인구 중위 기준	689.9	739.6	905.8	1,073.0	1,215.8	1,341.9	1.4	3.1
(GDP 대비 비율)	(31.8)	(29.0)	(31.0)	(33.1)	(34.8)	(36.2)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 가정을 고위로 하더라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70년 기준으로 통합채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1.5%, 관리채정수지 적자는 7.0% 수준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83.9%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금액은 고위 가정이 중위 가정보다 높으나 인구 가정에 따른 GDP 차이로 국가채무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3] 인구추계 고위 기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
(단위: 조원, %)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604.2	699.2	811.3	867.5	921.3	1,014.5	1.1	2.8
(GDP 대비 비율)	(27.8)	(27.0)	(26.6)	(24.6)	(23.4)	(23.3)		
- 국세수입	391.2	427.7	497.9	566.5	622.8	683.4	1.2	2.9
(GDP 대비 비율)	(18.0)	(16.5)	(16.3)	(16.1)	(15.8)	(15.7)		
- 국세외수입	213.0	271.5	313.4	301.1	298.5	331.1	0.9	2.7
(GDP 대비 비율)	(9.8)	(10.5)	(10.3)	(8.6)	(7.6)	(7.6)		
총지출	690.0	750.9	942.1	1,147.5	1,334.8	1,515.0	1.7	3.4
(GDP 대비 비율)	(31.7)	(29.0)	(30.9)	(32.6)	(33.9)	(34.8)		
- 의무지출	340.6	419.6	552.1	697.3	830.6	958.0	2.2	4.0
(총지출 대비 비중)	(49.4)	(55.9)	(58.6)	(60.8)	(62.2)	(63.2)		
(GDP 대비 비율)	(15.7)	(16.2)	(18.1)	(19.8)	(21.1)	(22.0)		
- 재량지출	349.4	331.3	390.0	450.2	504.2	557.0	1.0	2.7
(총지출 대비 비중)	(50.6)	(44.1)	(41.4)	(39.2)	(37.8)	(36.8)		
(GDP 대비 비율)	(16.1)	(12.8)	(12.8)	(12.8)	(12.8)	(12.8)		
통합재정수지	-85.9	-51.7	-130.8	-279.9	-413.5	-500.5		
(GDP 대비 비율)	(-3.9)	(-2.0)	(-4.3)	(-8.0)	(-10.5)	(-11.5)		
관리재정수지	-126.8	-115.9	-160.1	-206.7	-254.8	-303.4		
(GDP 대비 비율)	(-5.8)	(-4.5)	(-5.3)	(-5.9)	(-6.5)	(-7.0)		
국가채무	1,068.8	1,859.6	3,042.6	4,482.3	6,142.4	8,008.6	4.3	6.1
(GDP 대비 비율)	(49.1)	(71.8)	(99.8)	(127.3)	(155.8)	(183.9)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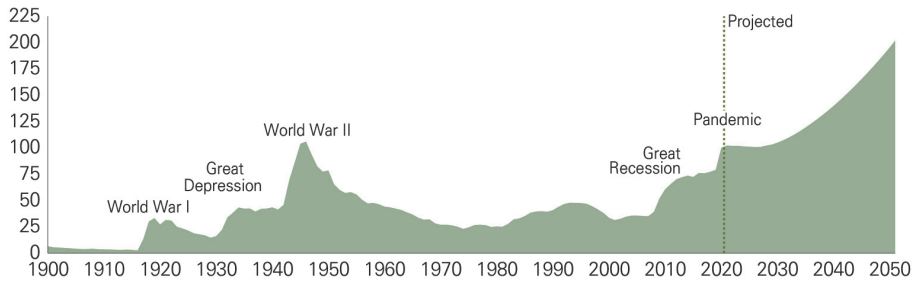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장기 재정전망

- CBO의 2021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은 2021년 102%에서 2051년 202%로 증가 전망
 - (2019년 전망) 2049년 부채 비율 144%
 - (2020년 전망) 2050년 부채 비율 195%

[2021년 CBO의 장기 재정전망: 연방정부 부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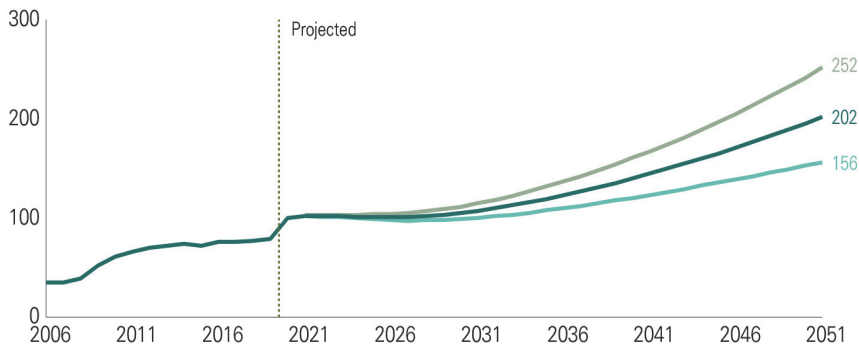


자료: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3.

- CBO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전망 추가
 - 총요소생산성(TFP) 0.5%p 상승: 2051년 부채 비율 156%
 - 총요소생산성(TFP) 0.5%p 하락: 2051년 부채 비율 252%

[2021년 CBO의 장기 재정전망: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3.

V.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는 2022년 5월 말 기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2022년부터 2070년까지 49년의 기간에 대해 재정총량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량지출 전망과 인구추계 가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1은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2012~2022년 기간의 평균 수준(GDP 대비 12.8%)으로 가정하였는데, 2070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92.6%로 전망되었다. 이때 재량지출의 장기 수렴 수준을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여 하향 조정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에 시나리오1보다 42.8%p 낮은 149.9%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시나리오2).

또한, 정부의 중기계획을 반영한 이후 2026년부터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하는 경우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은 119.0%(시나리오3)으로, 202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통제하고 재량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수준으로 전망하면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이 77.3%로 전망되었다(시나리오4). 시나리오1에서 제시한 장기 수렴 수준(GDP 대비 12.8%)은 2022년 현재의 재량지출 수준(1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량지출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량지출의 수준에 따라 국가채무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장기적으로 재량지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보면,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으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기준으로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10.4%p 증가하고, 인구 고위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국

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8.8%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1년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잠정)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 중위 기준 전망(0.82명)을 밑돌아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위험을 살펴보았는데(인구추계 중위 가정),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소진 이후 2070년까지의 누적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2045년에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 2070년까지의 누적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4%로 분석되었다.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국민연금기금 등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보험료를 인상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의 ‘제도변화’를 가정하지 않아 적립금 소진 이후의 적자를 국가채무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70년에 34.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본 보고서의 전망 결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도출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장기 재정전망은 그 속성상 현행 제도를 전제로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projections)일 뿐이므로 추계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시나리오는 전망기간 동안에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망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부록] 항목별 전망방법

1. 거시경제전망

- 장기 거시-계량 일반균형 모형을 기본적인 전망 모형으로 사용
 - 장기 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총공급의 주요 결정요인들은 모형에서 내생화하고, 2070년까지 장기적 추이 판단이 어려운 모수 값들은 외생적으로 전제
 - 콧-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기초한 외생적 성장이론을 따르며, 성장회계식 (Growth Accounting)을 토대로 추정

$$Y_t = A_t L_t^\alpha K_t^{1-\alpha}$$

A_t : 총요소생산성, L_t : 취업자의 총노동시간, α : 노동소득분배율

- 1970~2021년의 기간에서는 HP필터의 방식으로 잠재GDP 추세를 계산하고, 2022~2070년의 잠재성장률 추이는 성장회계모형으로 결정
- 거시변수 전망에 사용되는 노동인력 및 저축률 추정을 위하여 인구변수 내생화
 - 15세 미만 인구, 생산가능인구(15~64세), 65세 이상 인구로 구분
 - 노동투입 추정은 주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분석 시행
 - 근로시간은 통계청의 전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 자료를 활용하고, 부양비, 인구변수, OECD 주요국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망
 - 저축률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시나리오별 노년부양비를 반영한 회귀식으로 추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동학과 경제여건을 고려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경제

의 구조변화 고려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전망
- 금리는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도출한 자본의 한계생산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실질 회사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장기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명목 회사채 금리 전망
- 임금상승률은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성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망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

2.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1) 소득세

- 근로·종합소득세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기반하여 age-profile 기법으로 전망하고, 양도소득세는 회귀분석에 의해 추계
 - 퇴직·연금소득세는 고령인구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망

구분	상세세목	전망방법
원천	근로소득세	국세통계연보에 의거한 age-profile
	퇴직소득세	고령인구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에 연동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명목GDP 대비 비율
	사업소득세	
신고	이자·배당소득세	명목GDP 대비 비율
	종합소득세	국세통계연보에 의거한 age-profile
	양도소득세	회귀분석

□ age-profile 기법에 의한 근로·종합소득세 전망

- 소득세수는 연령별(a)·성별(g)·연도별(t) 납세자수에 납세자의 평균 소득 및 유효세율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추계
 - 소득세수(a,g,t) = 납세자수(a,g,t) × 평균 소득(a,g,t) × 평균 유효세율(a,g,t)
 -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수는 성별·연령별로 다른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각각에 대해 추정하여 합산
- (납세자수) 연령별·성별·연도별 취업자수에 소득세 신고자 비중(신고인원/취업자수)을 적용하여 추계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신고자 비중은 최근 10년간 40세 이상 남성 및 30세 이상 여성 신고자 비중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중은 2022년 신고자 비중이 2030년까지 유지되고, 이후에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신고자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 국세통계연보상의 성별·연령대별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인원수 통계 활용
 - * 근로소득세 신고자수(a,g,t) = 취업자수(a,g,t) × 근로소득자 신고자 비중(a,g,t)
 - * 종합소득세 신고자수(a,g,t) = 취업자수(a,g,t) × 종합소득자 신고자 비중(a,g,t)
- (평균 소득) 총 납세자의 개인 소득이 임금증가율 또는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명목임금상승율로 증가, 종합소득자의 소득은 명목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 (실효세율) 현 조세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연령별 실효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

□ 양도소득세 전망

- 금리, 명목GDP와 연도 더미 등 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모형의 예측치를 활용하며, 2032년 이후에는 2031년의 GDP 대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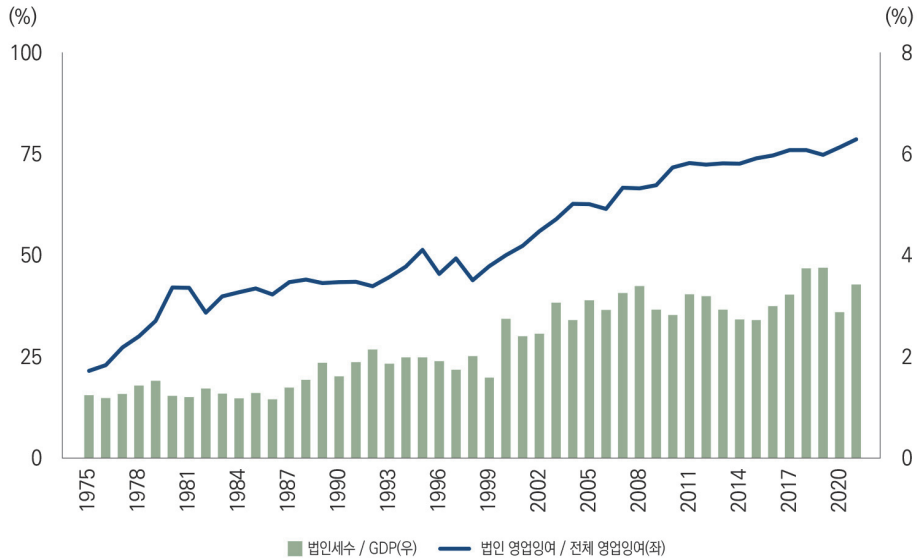
□ 퇴직·연금소득세 원천분 전망

- 퇴직소득세의 경우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60세 미만/60세 이상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구분하여 전망한 후 각 전망치를 합산
 - 60세 이상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24.9%)을 은퇴자가 부담하는 세액으로 보아 연도별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 및 이전 3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0세 미만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이직자가 부담하는 세액으로 간주하여 이전 3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로 연장
- 연금소득세는 최근 65세 이상 인구 및 연금소득세수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급여 증가율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2) 법인세

- 법인세는 법인영업잉여와 직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관련된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한 시계열 전망방식을 통해 추계
 - 인구구조 및 자본-노동간 소득분배 변화에 따라 영업잉여 비중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추정하는 것이 장기 법인세 추계의 핵심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OECD 국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기술집약형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자본이동 및 국제 분업 등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영업잉여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법인세수의 명목GDP 대비 비중 및 영업잉여의 법인 비중]



- 장기 법인세 전망은 1단계에서 법인영업잉여를 전망하고 2단계에서는 앞선 전망을 이용하여 흑자법인 과세표준을 전망, 3단계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전망액 산출
- (법인영업잉여 전망) 1970~2020년의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명목GDP, 노동소득분배율⁴⁶⁾,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패널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법인영업잉여의 명목GDP 대비 비중을 실증분석
 - 패널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한 계수를 미래의 1인당 소득수준, 인구증가율, 노령인구 비중 등에 적용하여 2070년까지의 법인영업잉여 전망
 -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GDP에서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국민계정에서 법인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점차 증가(장기적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상회)

46) OECD 각국의 피용자보수율(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영업잉여))로 계산

· 2020년 17.3% → 2030년 18.6% → 2040년 19.5% → 2050년 20.6%
 → 2060년 22.0% → 2070년 24.0%

- (법인세 전망) GDP 대비 흑자법인소득 비율 전망 후,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추계
 - 법인 영업잉여 확대에 따라 GDP 대비 흑자법인소득 비율도 함께 증가
 - 평균 실효세율은 이용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최신자료인 2020년 흑자법인의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 비율(18.1%)을 적용했으며 향후 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최근의 가구 소비를 기준으로 가구당 부가가치세액을 추정하고, 이를 각 연도의 연령별 가구 수와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망
- 재정패널조사(2020)를 바탕으로 개별 가구의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대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
 - 개별 가구의 부가가치세액 = $\sum_{\text{소비항목}} (\text{항목별 소비금액} \times \text{항목별 유효세율})$
 - 부가가치세 면세효과 등을 반영한 소비항목별 유효세율은 산업연관표(2015)를 활용하여 산출
 -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대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
- 연도별로 가구주 연령별 대표 부가가치세액에 2023~2070년 가구 수를 곱하여 총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고,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부가가치세수를 전망
 - t연도 부가가치세 추정액
 - = $\sum_{\text{연령}} (\text{가구주 연령별 대표 부가가치세액} \times \text{t연도의 연령별 가구 수 추계})$
 - 전망기간 중 연령별 소비구조 및 각 소비항목의 유효세율이 상단의 추정결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연령별 가구 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청) 자료를 활용
- 기준연도(2019년)에 대해 추정된 부가가치세 추정액과 실제 부가가치세액 간의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각 연도의 부가가치세액에 반영

$$\text{조정계수} = \frac{\frac{\text{실제 부가가치세수}}{\text{실제명목 GDP}}}{\frac{\text{추정 부가가치세수}}{\text{추정소득액}}}$$

- t 연도 부가가치세수 = $\left(\frac{t\text{연도 부가가치세 추정액}}{t\text{연도 소득 추정액}}\right) \times \text{조정계수} \times t\text{연도 GDP}$
-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금액(2023년 이후, 전체 부가가치세수의 25.3%)을 제외하여 최종 세액 산출

(4) 기타 세목

□ 기타 국세 세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994~2021년의 부동산 가격 및 주가 증감률, 명목GDP 성장률 등을 반영한 회귀모형을 통해 상속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 추정치를 구한 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총재산가액 대비 결정세액 비중(상속세 19.7%, 증여세 17.9%)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이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
- 개별소비세는 세원별로 자동차, 담배, 과세물품 및 장소분, 유연탄, LNG, 기타유류를 구분하여 세수를 전망
 - 자동차, 담배, 유연탄, LNG는 각각의 세원별 과세대상 소비량 실적 및 전망치를 활용하여 중량세율을 적용
 - 과세물품 및 장소분은 명목 GDP에서 해당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2016~2020년 5개년 평균 0.07%)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기타유류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되 GDP대비 비중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가정
 - 2031년 이후부터는 해당 세목의 GDP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추정액에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여 추계
 - 향후 거래대금은 명목GDP 및 명목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 등을

- 반영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되 2032년 이후에는 GDP대비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 0.15%, 장외·비상장 0.35%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 전망치를 추정하고 이에 종량세율을 곱하여 세수를 전망
 - 2030년까지의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전망치를 활용, 소비량에 세율별 종량세율을 곱하여 세수 전망치를 구하며 2031년 이후부터는 해당 세목의 GDP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 현행 세율은 휘발유 529원/리터, 경유 375원/리터
 - 관세는 통관수입액(원화) 전망치에 무역자유화 효과가 반영된 실효관세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전망
 - 통관수입액은 명목GDP 성장률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실효관세율은 최근까지 발효된 FTA의 효과가 향후 10년간 대부분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2022~2032년간 1.2%에서 1.0%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주세는 1996~2021년 주세액과 실질GDP 등을 반영한 AR모형을 통해 향후 세액을 추정하되 2030년 이후 종량세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종합부동산세는 향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세수를 추계
 - 향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전망치는 최근 10년의 연평균 공시가격 증가율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여 적용
 -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연동되도록 추계
 -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개별소비세 유류분의 증감률에,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의 증감률에 연동하여 추계
 - 인지세, 과년도수입은 2022년 기준 명목GDP 대비 비중(0.35%)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

나. 사회보장성기금의 기여금 및 기금운용수익

(1)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수입은 연도별 가입자 수에 보험료 단가, 납부기간(12개월) 및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
- 가입자 수는 성별·가입자 유형별로 구분하며, 국민연금 가입률, 가입자 유형별 이동률, 신규가입률, 성별·연령별 사망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
 -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소득신고자만 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므로 납부예외자를 추계한 뒤 제외
 -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에 연도별·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 비중을 곱하여 추계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연도별 가입률을 적용하여 추계
- 이때 전체 가입자 수는 연도별·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 국민연금 가입률을 곱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앞서 산출한 가입자 수와 비교하여 조정
- 보험료 단가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상승률을 적용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소득에 대한 지역가입자 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유형별·성별·연령별 소득지수를 활용하여 추계

□ 기금운용수익

- 기금운용수익은 전년도 말 적립금에 기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
 - 기금운용수익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를 기준으로 자산의 변동에 따른 투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망

(2) 사학연금

□ 가입자 추계

- 성별 직급별(교원, 학교직원, 대학병원직원) 가입자수를 추계
 - 가입자수(t) = 기존가입자(t-1) + 신규가입자(t) - 퇴직자 및 사망자(t)

□ 수입 추계

- 기여금수입(직급별, 성별) = 가입자수(직급별, 성별) × 평균 기준소득월액(직급별, 성별) × 보험료율(직급별) × 12개월
 - 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18%로, 교원의 경우 개인이 9%, 법인이 5.294%, 국가가 3.706% 부담
- 기금운용수익은 전년도 말 적립금에 기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
 - 기금운용수익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를 기준으로 자산의 변동에 따른 투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망

(3) 고용보험기금

□ 가입자 추계

-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최근 실적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추정함
 - 다만, 임금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시점부터는 가입자 수 증가율을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가정함

□ 수입 추계

-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 가입자의 보수총액은 가입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상승률의 곱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0.25~0.85%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를 가입자가 선택하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에 근거하여 산출함
- 기금운용수익은 전년도 말 적립금에 기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함
 - 기금운용수익률은 명목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 전망치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으로 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가입자 추계

-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는 최근 실적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곱하여 추정함

□ 수입 추계

- 일반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적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평균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 평균 보험료율은 보험료 수입을 보수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고, 보수총액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상승률을 모두 곱하여 추정함
 - 산재보험료율은 2022년 평균 보험료율(1.53%)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주 등의 산재보험료는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에 적용대상자 수를 곱하여 산출함
- 기금운용수익은 전년도 말 적립금에 기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함
 - 기금운용수익률은 명목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 전망치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으로 함

다. 국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로 구분

- 2022~2030년 전망치는 2007~2021년 실적치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모형에 따른 추정치를 반영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양곡사업수입, 우정사업수입, 조달사업수입,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등 수입항별로 구분하여 명목GDP 증가율과 경제위기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자기회귀시차(ARDL) 모형을 통해 전망
 -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등 수입항별로 구분하여 명목GDP 증가율 및 명목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와 경제위기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통해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은 각 기금의 모형을 통해 전망
 - 사회보험성기금을 제외한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명목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와 경제위기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통해 전망
 - 그 외는 명목GDP 증가율과 경제위기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통해 전망
 - (경상이전수입) 연금수입 수입항은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모형을 통해 전망하며, 연금수입 수입항을 제외한 경상이전수입은 명목GDP 증가율과 경제위기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통해 전망
 - (연금수입) 가입자 수를 전망하고, 전망기간 동안의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공무원 18%, 군인 14%)을 곱하여 산출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명목GDP 증가율과 경제위기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통해 전망
 - (관유물매각대) 관유물매각대 총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2022년 회계기금별 예산액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회계기금별 배분

-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총액에 명목GDP 증가율과 경제위기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통해 전망하고 2022년 회계·기금별 예산액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회계·기금별 배분
- 2031~2070년 전망치는 2030년 전망치에 명목GDP 증가율과 명목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 변화율을 반영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명목 회사채 금리 변화율을 적용, 그 외는 명목GDP 증가율을 적용(사회보험성기금은 개별 모형에 근거)
- 이상에서 도출된 2022~2070년 전망치는 Hodrick-Prescott 보정을 활용하여 추세 주변의 변동을 제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계·기금 간 비중 반영을 통해 최종 산출

3. 총지출 전망

가. 의무지출

(1) 국민연금

- 연금급여 지출은 수급자 수에 연금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수급자 수는 가입자가 연금급여 수급 개시 시점에 도달하면 성별·연령별 수급자 발생률을 곱하여 추계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조건을 충족한 가입자 수에 수급가능 성별·연령별 수급률을 곱하여 수급자 수 추계
 -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과 성별 가입기간 충족률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 추계
 -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성별·연령별 발생률을 곱하여 수급자 수 추계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고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성별·연령별 유유족률을 곱하여 수급자 수 추계

- 연금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매년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 수 추계
-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연금급여 단가는 수급자의 성별·가입기간별 소득(B값), 전체 가입자의 수급직전 3년간 평균 소득(A값), 가입기간 중 연도별 소득대체율 및 가입기간을 활용하여 연금 유형별 산식에 따라 단가를 산출하고 동 단가에 연금유형별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을 앞당긴 기간에 따라 70~94%를 적용
 -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60% 적용
 -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의 급수에 따라 60~100% 적용
 - 연금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매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로 연금액이 상승한다고 가정⁴⁷⁾
- 중복급여 수급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래 시 발생
 - 이때 중복급여 해당 여부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는 시점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이 영향 미침
 - 앞서 전망한 연도별·성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바탕으로 중복급여 해당자의 비중을 연도별·성별·연령별로 추계한 뒤, 이를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유족연금 수급자 수에 곱하여 중복급여 대상자 수 산출
 - 이 중 노령연금 선택자의 비율은 가입기간 및 유족의 성별을 반영하여 적용
 -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노령연금 전액과 유족연금 30% 가산액이 중복급여 수급자의 급여액이 됨⁴⁸⁾

47)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8) 중복급여 대상자 중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사학연금

□ 수급자 수 추계

- 수급자 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
 - －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규 수급자 수는 성별·연령별·직종별 사학연금의 퇴직률 및 사학연금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연금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매년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 수 추계
 -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사학연금의 연령별 선택률을 적용하여 추계
 - －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규수급자 수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망 또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유족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연금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매년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 수 추계

□ 지출 추계

- 사학연금 급여지출액은 연금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분하여 산출
- 급여지출은 연금 종류별 연금수급자 수에 수급자의 성별·연령별·직종별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급여액을 곱하여 추계
 - － 연금급여액은 연금급여 유형별 지급산식을 적용하며, 계속수급자는 직전년도 연금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금급여액을 적용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퇴직시점에 일시에 발생하며, 해당 시점의 수급자수에 각 일시금의 지급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성별·연령별·직종별·재직기간별 일시금 추계액을 곱하여 산출
- 2016년부터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 － 수급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3년 65세가 되므로 이를 반영
 - － 연금지급률이 2022년 1.77%에서 2035년 1.7%까지 감소되므로 이를 반영

(3) 공무원연금

-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기여율 및 부담률,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추계

-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추계와 급여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전망
 -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등), 기금운영비 등은 공무원연금 지출총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성별·연령별 기수급자 수와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급여별 평균연금연액을 곱하여 산출
 - 2021년 기준 기수급자 수에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을 추계하며 퇴직연금 기수급자 사망 시 유유족률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인원 포함
 - 연금액은 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

-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퇴직자 수와 급여별(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평균금액을 곱하여 산출
 - 연도별 가입자 수(202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결과 반영)에 직종별·성별·연령별 퇴직률과 사망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수와 사망자 수를 추계
 - 퇴직자 수에는 급여종류별 선택률을 적용하여 급여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이후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자 전환되는 인원 포함
 - 사망자 수에는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급여별(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등) 대상자 수를 산출
 - 2021년 기준 직종별·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적용하여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 후, 급여별 산식을 적용하여 직

종별·재직기간별 평균금액을 산출

(4) 군인연금

-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추계와 급여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전망
 - 기금운영비 등은 군인연금 지출총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성별·연령별 기수급자 수와 퇴역연금·유족연금 등 급여별 평균연금연액을 곱하여 산출
 - 2021년 기준 기수급자 수에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을 추계하며 퇴역연금 기수급자 사망 시 유유족률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인원 포함
 - 평균연금연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 계급별 전역자 수와 급여별(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평균금액을 곱하여 산출
 - 연도별 전역자 수에 계급별 정상전역 비율, 상이전역 비율, 연금선택률 등을 적용하여 급여별 수급자 수를 추계
 - 퇴역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인원 포함
 - 2021년 기준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적용하여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한 후, 급여별 산식을 적용하여 계급별 평균금액을 산출

(5)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구성되며,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구성됨

- 임금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실업자 수 전망치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추정함
 - 다만,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및 2021년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 추이를 반영함
 - 구직급여 수급자는 이직 시기, 종사상유형, 기초일액 구간을 고려하여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급단가와 지급일수를 곱하여 추계함
 - 지급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며(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함), 지급기간은 최근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조기재취업수당은 전년도 구직급여 수급자 수 중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추계함

- 모성보호·육아지원의 급여별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되,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실적을 반영함
 - 급여별 수급자는 급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수급자 수 전망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 등을 곱하여 추계함

(6) 산재보험

-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연금으로 구성됨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장례비 등 제외)의 수급자 수는 재해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해율(적용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로그식으로 추세 연장)

-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수급자 수는 산재사망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망만인율(적용근로자 1만명 당 재해사망자 수)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급여별 수급자 수는 신규 수급자와 계속 수급자로 구분하고, 수급자 유형별로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연금성 급여(장해연금,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 등)의 경우 사망률은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성별·1세별 사망률을 적용함
 - 유족급여의 유유족률(사망자 1명 당 유족급여 수급자 수)은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을 적용함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최저임금)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7)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나, 보험료 수입에 연동한 정부지원금⁴⁹⁾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의 건강보험료⁵⁰⁾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건강보험 의무지출 항목
- 정부지원금 및 공·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전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이 필요하며, 건강보험료 수입은 지역별 건강보험료 가입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 개월 수(12개월), 건강보험료율, 징수율을 곱하여 전망
-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전망

49)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가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을 곱하여 전망
- 인구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 수 비중은 2019~2021년 가입자 유형별(직장가입 근로자, 직장가입 공무원, 직장가입 교직원 및 지역가입 세대주), 연령군별(5세 단위) 인구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 비중의 증감 추이 반영

□ 1인당 보수월액

-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건강보험 납부자 유형별⁵¹⁾, 연령군별(5세 단위) 평균 보수월액 증가율 적용, 2031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추계값 적용

□ 건강보험료율

- 매년 2.66%씩 인상하되⁵²⁾, 보험료율 8% 상한 규정 고려

□ 국고지원금

- 정부지원금(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포함)은 보험료 수입의 11.0%(최근 3년간 평균) 적용

□ 공·교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부 부처 공무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공·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사업에 포함된 예산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8)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예산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이 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임

51)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상의 보수월액을 토대로 산출

52) 이는 최근 3년(2020~2022년) 인상률에 해당하며, 매 년 2.66%씩 증가할 경우 2028년에 8% 상한에 도달하고 이후 8%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세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이하 “국고지원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이하 “공·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이하 “타법 의료급여 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이하 “사업관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 운영(이하 “재무회계프로그램”)이 있음

□ 국고지원금

- 국고지원금은 2022년 이후 법정 지원금 비중인 보험료 수입의 20% 적용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⁵³⁾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이후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 공·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대비 공·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 타법 의료급여 국가부담금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 후 국가부담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65세 인구 대비 각 연령군별(5세단위)·서비스유형별(시설, 재가)·등급별(1~5등급, 인지기원등급) 수급자 비중을 산출한 뒤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산출
 - 지출은 위 수급자 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9) 기초생활보장급여

□ 전망 대상 사업은 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주거급여 등 총 6개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급여항목별(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로 대상자 수 또는 대상가구 수를 산출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53)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전망 방법 참고

- 향후 중위소득 기준 소득분포가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생계급여

- 대상가구 수는 가구 구성원 수 및 유형(일반·시설)별로 세분화
 - 생계급여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일반) 및 시설 수급자
 - 생계급여 중 일반수급 대상가구 수에 연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구원수별로 세분화하여 전망
 - 일반수급 대상가구 수는 전체 인구 수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최근 5년간 평균 비율을 통계청 추계인구 수에 곱하고 이를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출
 - 최근 5년간 전체 기초수급자 수 대비 시설수급자 수 비율과 (일반) 기초생계수급자 수(추계치)를 고려하여 시설수급자 수 산출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2021년 10월)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를 가정하여 전망
- 생계급여 단가는 2022년 예산 기준 일반수급가구의 가구원수별 평균 급여단가와 시설수급자 평균급여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2년 예산 기준 평균 83.13%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의료급여

- 대상자 수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로서, 전체 인구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최근 5년간 평균 비중을 통계청 추계인구 수에 곱하여 산출
 - 대상자는 1종·2종·타법의 종별로 세분화하여 산출
 - 이 때, 독립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타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수 대비 평균비중을 적용
 - 부양의무자 완화 제도로 인해 추가되는 수급자 수는 2022년, 2023년 예상 추가수급자 수에 장래인구추계 상의 인구증가율을 적용

- 의료급여 단가
 - 1종·2종·타법의 종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증가율을 최근 5년 종별 평균 단가증가율로 스케일 조정한 값을 이용
- 국고보조율은 2022년 예산 기준 평균 평균보조율 75.7%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로 나누어 각 항목별 교육급여 지급액을 산출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교육급여 항목별·학교급별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하고 지급단가와 국가부담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
 - 수급자 비율은 최근 기준 인구 대비 수급자 수의 비율로, 해당 값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단가는 최근 기준 단가에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

□ 해산·장제급여

- 최근 7년간 등락 추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하고 국고보조율 적용

□ 주거급여

- 대상가구 수
 -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는 기준중위소득 46%이하 가구로서,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료, 수선유지급여 가구의 경우 주택보수비용 지원
 - 임차가구 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2018~2021년) 기준중위소득 이하 임차가구 비중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자료 및 기초수급자 자료를 병합한 국토교통부의 임차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 대비 수급가구 비중을 기초로 전망
 - 자가가구 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실적자료를 기초로 전망

- 주거급여 단가
 -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 유형별(일반, 청년분리가구) 월평균 단가와 연평균 증가액을 곱하여 추산
 - 자가가구 보수비용은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 실질GDP 성장률과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추산
- 국고보조율은 2022년 기준 평균 83.13%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10)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수급자는 만 8세 미만 아동이며, 아동수당 단가는 월 1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아동수당 소요액을 산출
 - 아동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2년 예산 기준 평균 73.6%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영아수당

- 영아수당 수급자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아동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사용하되,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원률을 적용
- 영아수당 단가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영아수당 소요액을 산출
- 국고보조율은 2022년 예산 기준 평균 68.44%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11) 기초연금

□ 수급자 추계

-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가입 여부 및 단독·부부가구 여부, 기준연금액(2022년 월 307,500원) 전액·감액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이 달라짐

- 장래인구추계 65세 이상 인구 중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부부가구 수급,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민연금 가입, 부부가구 수급, 전액·감액 수급 비율은 최근 5년 실적치의 구성비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급여지출 추계

- 각 수급 유형(국민연금 가입, 부부가구 수급, 전액·감액)별 수급자에 각 유형별 연금액을 적용하고 제도운영비와 재정열악지자체 지원비를 합산하여 산출
 - 기준연금액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증가
 - 수급 유형별 연금액은 최근 5년 기준연금액 대비 각 연도별·유형별 평균연금수급액의 비중을 평균하여 이를 전망기간동안 기준연금액 전망에 곱하여 산출
 - 수급 유형별 연금급여액을 연도별로 합산한 뒤 국고보조율(79.2%)를 적용하고 제도운영비와 재정열악지자체 지원비를 더하여 산출
 - 제도운영비와 재정열악지자체 지원비는 최근 3년 평균 예산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12) 영유아보육료

- 만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연장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로 나누어 각 항목별 보육료를 산출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연령별·이용유형별 어린이집 이용률과 지급단가, 국가부담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
 - 어린이집 이용률은 최근 기준 연령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이용 비율로 하며, 해당 값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전망항목 중 만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간 지급단가가 다르므로, 어린이집 이용률도 이에 맞추어 범주별로 각각 산출

- 지급단가는 최근 기준 단가에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

(13) 보훈급여

- 전망 대상 사업은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보철구지급,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등 총 14개 의무지출 세부사업임

□ 보상금

- 보상금은 보상금과 부가수당으로 구분하여 추정
 -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3계층으로 크게 구분한 후, 본인과 유족, 성별·연령별, 대상자 실적치에 사망률, 진입률, 이탈률을 적용하여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거나, 대상에 따라 과거 5년간 연평균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⁵⁴⁾
 - 보상금의 부가적 성격의 수당인 부가수당 대상자는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등으로 구분되며, 각 수당 대상자별로 최근 5년간 혹은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보상금 지급단가는 정책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 대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4.1% 적용
 - 각 부가수당은 보상금 상승률과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률 적용

□ 간호수당

- 대상자는 구법대상자(4개 등급), 신법대상자(2개 등급)로 구분하여 각각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는 정책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 대신 최근 5년간 지급단

54) 독립유공자는 5개 등급(건국훈장 1-3등급 / 건국훈장 4등급 / 건국훈장 5등급 /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 상이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은 각각 11개 등급(1급1항 / 1급2항 / 1급3항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1항 / 6급2항 / 6급3항 / 7급)으로 구분하여 보상금 대상자를 총 56개 종류로 구분하여 산출

가 연평균 증가율 4.6%를 적용

□ 6·25자녀수당

- 6·25자녀수당은 과거 보훈수혜정도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생계곤란자,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대상 등 5개로 구분하여 각각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지급단가는 정책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 대신 최근 5년간 지급단가 평균 증가율 4.1%를 적용

□ 무공영예수당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5개 등급(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별로 구분하여 각각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지급단가는 보상금 단가 상승률과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률 적용

□ 참전명예수당

- 가장 최근 년도의 1세별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 연령별 남자 사망률(저위, 중위, 고위) 적용
- 지급단가는 보상금 단가 상승률과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적용

□ 4·19혁명공로수당

-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지급단가 평균 증가율 4.1%를 적용
- 사망일시금
- 수시보상금 성격의 사망일시금은 최근 5년간 증감추이가 뚜렷하지 않아 2022년 예산 인원을 일정하게 유지함
- 지급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재해보상금

- 대상자는 2022년 예산 인원 8명을 일정하게 유지⁵⁵⁾
- 지급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보훈병원진료

- 대상자는 국비진료, 감면진료로 구분하여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연평균상승률 적용
- 연간지급단가는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연평균상승률 적용

□ 위탁병원진료

- 대상자는 국비진료, 응급통원진료, 감면진료로 구분하여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연평균상승률적용
- 연간지급단가는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연평균상승률적용

□ 보철구지급

- 보철구지급은 최근 5년간 증감추이가 뚜렷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예산액 평균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고엽제환자검진

- 대상자는 고엽제 검진 환자수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
- 연간지급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은 사립대수업료 국고보조(전문대, 대학교, 원격대학교, 학점기관), 수업료보전, 외국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보조, 취학자실태조사 구분하여 각각의 과거 추이(2017~2021년간)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추정
- 지급단가는 수업료보전, 외국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보조, 취학자실태조사로 구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55) 재해보상금은 2022년 1월부터 국방부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관 결정되어 지급인원이 173명(2021년)에서 8명(2022년)으로 축소되었음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중기복무제대군인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역자 산출 후 전역자 중 전직지원금 신청률, 지급률, 지급단가, 지급개월수(6개월)를 곱하여 산출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자는 중기복무제대군인과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
 -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전역자 중 신청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청률 적용
 -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지급률 적용
 - 지급단가는 2022년 예산 기준 중기제대군인 월 50만원(6개월간 300만원), 장기제대군인 월 70만원(6개월간 42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10년간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14) 지방이전재원

□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으로 구성됨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담배 개별소비세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전액, 그리고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합산하여 산출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담배 개별소비세의 45% 제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전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 다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차감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2023년 이후 전망치는 0으로 함(2022년 전망치의 경우 예산액으로 함)

(15) 이자지출

□ 이자지출 추계

- 이자지출은 국고채에 대한 이자, 국민주택채에 대한 이자, 기타 이자(청약저축에 대한 이자, 중소기업진흥채권에 대한 이자, 우체국예금에 대한 이

자 등)로 구성됨

- 국고채에 대한 이자지출은 2021년 말 기준 잔액에 대한 이자와 2022년 이후 연도별 신규 국고채에 대한 이자로 구분하여 전망함
 - 기존 국고채에 대한 이자는 평균 잔존만기를 주기로 해당 국고채 잔액을 재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함(재발행 이자율은 재발행 연도의 이자율 적용)
 - 신규 국고채에 대한 이자는 전년도 이자지출 및 당해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분(당해연도 국고채 이자지출 제외)만큼 증가하는 신규 국고채에 발행연도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함(이자율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와 명목국고채(3년 만기) 이자율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추정함)
- 국민주택채(5년 만기)에 대한 이자지출은 연도별 상환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함
 - 연도별 상환액은 5년 전 발행액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연도별 발행액은 전년 대비 잔액 증가분에 당해연도 상환금액을 더하여 추정함(국민주택채 잔액은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이자율은 5년 전 발행금리의 복리이며, 발행금리 전망치는 명목국고채(3년 만기) 이자율에 근거하여 추정함
- 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지출은 연도별 상환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함
 - 연도별 상환액은 전년도 잔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하며, 청약저축 잔액은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중소기업진흥채권에 대한 이자지출은 전년도 잔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함
 - 중소기업진흥채권 잔액은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우체국예금에 대한 이자지출은 연도별 수신고(평균)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함
 - 우체국예금의 수신고(평균)는 명목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16) 그 밖의 의무지출

□ 고등학교 무상교육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고등학교 재학률을 곱하여 지원대상 고등학생 수를 추정한 뒤 1인당 연평균 학비와 국가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출
- 고등학교 재학률은 최근 기준 만 16~18세 인구 대비 고등학교 재학생 수의 비율로, 해당 값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입학금·수업료를 따로 정하는 사립학교(사립특목고·자사고) 재학생 수를 제외하고 산출
- 1인당 연평균 학비는 최근 시·도교육청 실집행 단가에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

나. 재량지출

- 2022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2025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9.)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3년 323.0조원, 2024년 336.2조원, 2025년 348.4조원
- 2026~2030년: 2030년에 장기 수렴 수준(GDP 대비 12.8%)에 도달하도록 서서히 조정
 - 장기 수렴 수준은 2012~2022년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의 평균
- 2031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12.8%로 유지된다고 가정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발간일 2022년 8월 1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BN 979 - 11 - 6799 - 058 - 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975-14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